

수시 | 21-14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fter COVID-19:  
Impacts, Challenges, and Ways Forward in the Urban Sector

정윤희, 김민지, 김은화, 원종준, 임채욱

수시 21-14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fter COVID-19:  
Impacts, Challenges, and Ways Forward in the Urban Sector

정윤희, 김민지, 김은화, 원종준, 임채욱

## ■ 저자

---

정윤희, 김민지, 김은화, 원종준, 임채욱

## ■ 연구진

---

정윤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연구책임)

김민지 국토연구원 연구원

김은화 국토연구원 연구원

## ■ 외부연구진

---

원종준 한국국제협력단 과장

임채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무관

## ■ 연구심의위원

---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진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수정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방설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1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장기화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사회적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기후변화에 더해진 잦은 감염병 발생 위기로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
- 2 주요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단기적으로는 개도국에 대한 보건·식량 부문 등의 긴급지원에 집중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전환과 녹색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과제로 삼고, 코로나19 위기를 기후정책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3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 담당자 조사 결과, 팬데믹은 개발협력사업의 발굴, 수행, 평가 등 사업의 전 단계에 복합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현지조사 및 대면협의 불가로 인한 어려움은 이해관계자와 협의 단계가 많은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저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디지털 인프라 지원 및 정보접근성 개선이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남
- 4 우리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기후변화 대응 선도를 국제개발협력부문의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각 부처는 코로나19 대응 국제개발협력전략에 부합하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의 여건변화와 필요에 근거한 개발협력 전략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1 국토·도시부문은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로 국익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의 개발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분야임. 따라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의 정책비전을 국가상위전략계획에 명시하고, 지원 및 추진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기획 및 운영과정에서의 분절성을 개선하고 전략적 사업기획을 통한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 가능
- 2 수원국의 불확실성과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문의 개발협력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통해 녹색회복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 필요
- 3 코로나19 이후 여건변화 및 부문특성을 고려한 사업관리 가이드라인 및 섹터맞춤형 성과평가체계 개선안 마련 등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와, 다양한 개발재원 확보 및 지원방식과 파트너십 다변화 등을 통한 민간협력 활성화 지원전략 모색필요

---

# 차례

## CONTENTS

---

---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 3. 선행연구검토 및 차별성 ..... 11
- 4. 연구의 기대효과 ..... 13

---

### 제2장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코로나19 대응전략과 정책동향

- 1. 코로나19와 국제개발협력 여건변화 ..... 17
- 2.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전략 및 지원동향 ..... 19
- 3. 주요 선진공여국의 코로나19 관련 개발협력정책 동향 ..... 42
- 4. 국제사회 코로나19 대응 정책동향의 시사점 ..... 55

---

### 제3장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개발협력부문의 정책대응

- 1. 코로나19 확산의 국내 영향 및 국제사회 위상 변화 ..... 61
-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개발협력부문 정책 동향 ..... 64
- 3.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대응 현황 ..... 66
- 4. 코로나19로 인한 개발협력사업의 추진방식의 변화 ..... 80

제4장 코로나19 이후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의 여건변화와 과제

- 1.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현장의 여건변화와 시사점 ..... 87
- 2.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 사례분석결과 및 과제 ..... 103

제5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토·도시부문의 개발협력 추진방향

- 1. 코로나19 이후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여건 변화 및 정책방향 ..... 141
-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정책과제 ..... 147
- 3.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 153

참고문헌 ..... 155

부록 ..... 166





CHAPTER 1

#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3. 선행연구검토 및 차별성 .....	11
4. 연구의 기대효과 .....	13



---

# 01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과 국제개발협력의 여건 변화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의 규모<sup>1)</sup>와 영향은 보건  
의 위기를 넘어서 각국에 경제, 재정, 사회부문의 위기 상황을 야기하였음
  -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상황을 팬데믹으로 선언한 2020년 3월 이  
후 해외입국자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주요 국가들은 국경을 봉쇄하였으며, 이동  
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이룸. 이러한 강력한 봉쇄조치로 같은 해 7월  
전 세계 인구의 1/3<sup>2)</sup>이 봉쇄와 격리의 제한조치를 경험함
-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진 국경 봉쇄와 이동권의 제한은 국제협력여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음. 협력국 현장에 파견되어 있던 정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인력이 철수하거나, 자국에 나왔던 인력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국제개발협력활동이 중단되거나 연기 됨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20년 2월 초 국내 인력의 해외 전 지역 출장 취소를  
권고하였고, 국제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2020년 3월 11일 전후로 해외파견인  
력의 귀국을 준비하기 시작함. 이후 해외에 파견되어 있던 직·간접 파견인력과 동

---

1) 2021년 4월 15일 전 세계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는 1억 3884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수는 3백만 명을 넘음(참조.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2021년 4월 15일 접속)

2) [https://www.businessinsider.com/countries-on-lockdown-coronavirus\(2021년 4월 15일 접속\)](https://www.businessinsider.com/countries-on-lockdown-coronavirus(2021년 4월 15일 접속))

---

반가족 총 2,808명중 76.7%에 해당하는 2,155명<sup>3)</sup>이 일시 혹은 조기 귀국하였는데, 이는 KOICA가 1991년 해외봉사단을 통해 해외에 인력을 최초로 파견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동시에 귀국한 사례로 기록됨(안혜지·안혜정 2020, 55)

- 현장으로 출장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현지조사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지 방문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사업 활동은 사업의 지속성과 성과관리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됨

- 코로나 확산자수의 증가로 인한 각국 공공의료부문의 붕괴와 경제적 타격이 자국 중심주의의 현상을 강화시키는 가운데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개도국의 경제적·사회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국제사회의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코로나19 는 모든 사람에게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빈곤한 국가의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sup>4)</sup>(OECD DAC 공동 선언 중 일부)”

“코로나 19의 사태는 빈곤한 국가, 취약한 계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지난 20년간 힘겹게 줄여오던 빈곤률과 불균형의 격차를 단 1년 만에 악화시키고 있다. (World Bank DFI Vice President, 2021. 1. 28. )<sup>5)</sup>”

- 코로나19 상황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국제개발협력부문에서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축적된 연구가 없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현장의 여건변화와 국제사회의 대응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 우리나라 개발협력부문의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3) 안혜지·안혜정(2020),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개발협력 현장파견인력의 임시귀국과 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제개발협력(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15(2), p. 55

4) OECD. 2020d

5) 참조. 월드뱅크 블로그

<https://blogs.worldbank.org/voices/covid-19-hitting-poor-countries-hardest-heres-how-world-banks-ida-stepping-support> (2021년 3월 15일 접속)

- 
- 한국은 팬데믹 초기 최대 발병국가 중 하나였으나, 이후 K-방역 모델을 통한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효율적인 국가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게 되면서 한국의 경험 공유 및 관련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가 증가하였고, 한국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음
- 2020년 5월 기준 약 100개국에서 한국정부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방역경험 공유 및 관련 지원을 요청 (정지선·유애라 2020, 3)
  - 한국은 세계보건총회 초청연설(20. 5. 18), 유엔 총회 기조연설(20. 9. 23),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21. 1. 27) 등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공유하며, 전 세계적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자주의를 통한 포용적인 국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함
  - UN사무총장은 “우리 모두가 안전해지기 전까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sup>6)</sup>는 것을 강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빈곤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G20에 2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
  - OECD DAC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조 국가들에게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체계 지원을 위한 ODA의 유지와 확대를 요청 (OECD 2020d)
  - 우리나라는 코로나19대응 ODA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개도국의 경제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지원에 ODA재원을 집중할 것을 밝히고(국무조정실 2020, 7),
  - 2021년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개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2021년 ODA 규모를 전년대비 8.3% 증가시키는 등 ODA예산 확대를 추진함(관계부처 합동 2021a, 2021b)

---

6) 참조. 유엔 홈페이지 (2021년 3월 15일 접속)  
<https://www.un.org/en/desa/%E2%80%9Cno-one-safe-until-everyone-%E2%80%9D>

- 
-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전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현장의 여건 변화 및 과제를 분석하여, 달라진 국제여건 속에서 국익을 고려하면서도 국제적 기대와 규범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국토·도시개발부문의 국제협력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

## 2) 연구 목적

-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후 국제개발협력 부문에 나타난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공여국의 개발협력 전략 및 협력대상국의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현장에 일어난 변화를 관련 문헌 및 현지전문가를 통해 분석하고,
-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사업의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단계별, 부문별 현안 및 이슈를 검토하여,
-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도시부문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방향성과 추진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1) 내용적 범위

-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 전략 및 국토·도시부문 중점지원 분야 변화 분석
  - 코로나19 이후 국제기구의 국토·도시 분야 대응전략 및 중점 지원 분야 변화 동향 분석(World Bank, UN-Habitat, ADB, OECD, UNDP 등)

---

□ 주요 선진 공여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전략분석

-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공여국의 코로나19 이후 국제개발협력부문의 대응현황 및 개발협력 전략 분석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여건 변화 분석

-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 국제협력 여건 및 개발협력 활동에 미친 영향 분석

□ 우리나라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의 현황 및 코로나19의 영향 분석

- 우리나라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의 현황 및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발협력 여건 변화 분석
- 코로나19 이후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추진대응 분석

□ 중점협력국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사례분석: 이슈 및 현안분석

- 주요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국토·도시부문에서 일어난 개발협력사업 여건 변화를 사업사례를 통해 분석
  - 코로나19로 인한 각국별 대응수준은 협력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 보건의료체계, 정보통신기술 및 인프라 구축 수준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음
  - 특히, 정부부처, 관계기관, 민간부문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에서 사업의 분야별, 단계별, 주체별로 발생한 이슈와 주요 현안과제는 무엇인지 분석
-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사업의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이슈 및 개발협력사업의 성과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 도출
- 현재 추진중인 인도네시아 수도이전관련 개발협력사업과 장기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되는 베트남 도시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이슈 및 현안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전략 도출에 기여

---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제안**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 검토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발협력의 특성과 여건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의 기본방향 제안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보편적 국익을 고려한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의 방향성과 정책과제 제안

## 2) 연구 방법

□ **문헌고찰**

- 국제기구별 관련 문헌 검토
- 선진공여국 국제협력 관련 기관 문헌 및 보도자료 검토
- 개발도상국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 관련 국내외 발간자료 및 연구·사업 보고서 검토

□ **설문조사 및 인터뷰**

- 정부부처 해외파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화상인터뷰
  - 인도네시아, 베트남, 파라과이 등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토·도시부문 국제개발협력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진행 현황 파악 및 과제 도출을 위한 면담
- 코로나19 이후 국토·도시 부문의 국제개발협력의 현황 및 방식 변화 파악을 위한 국내 유관부처 및 관계기관 담당자 인터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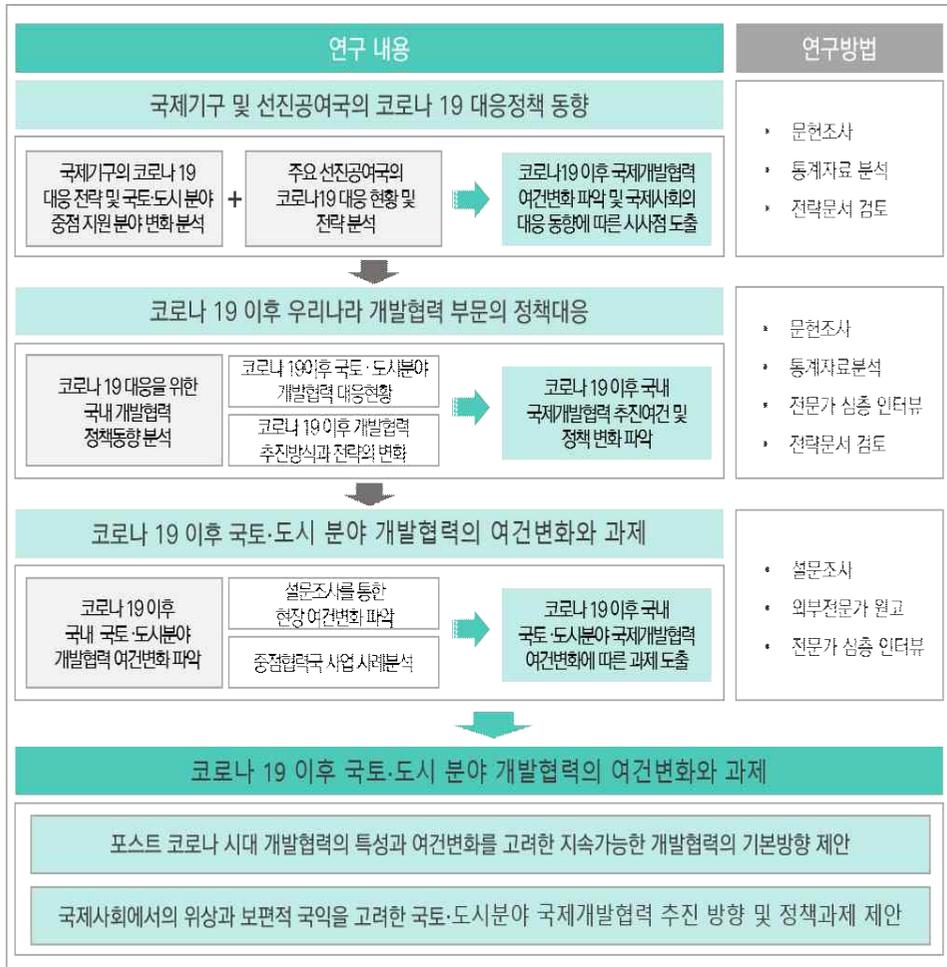
□ 외부전문가 원고

- 중점협력국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현황 및 현안분석을 위해, 개발협력사업 사례의 현황 분석 및 과제 도출 관련 전문가 원고 의뢰(사업추진배경, 추진체계, 추진현황, 주요 이슈 및 현안에 대한 분석)

□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 국토·도시 부문의 국제개발협력의 현황 및 코로나19 영향 분석을 위한 국내 전문가 인터뷰
- 국토·도시부문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에 대한 성찰 및 향후 추진방향 도출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
  - 우리나라 국토·도시부문 국제개발협력의 현황 및 과제도출을 위한 논의
  - 코로나시대 국토·도시부문 국제개발협력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

그림 1-1 |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작성.

---

### 3. 선행연구검토 및 차별성

#### 1) 선행연구 현황

##### □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

- 국토·도시 분야의 개발협력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로는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새로운 도시의제(NUA)와 관련한 개발협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 등이 있음

##### □ 코로나 이후의 국제질서 및 협력여건에 대한 연구

- 2020년 이후 코로나 이후 국제협력 여건의 변화 혹은, 한국 ODA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으나, 대부분 정책브리프 형태이거나, 문헌분석을 주로 한 학술논문 형태
- 주요 분야는 대외경제정책, 외교정책 분야의 정책방향 제언으로, 국토·도시부문을 대상으로 한 심도 깊은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함

####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건변화를 고려한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

- 본 연구는 국토·도시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 코로나19 이후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대응전략 변화 분석, 설문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개발협력현장의 여건변화 분석, 개발협력사업 사례의 실증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지님

표 1-1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의 대응 전략</li> <li>연구자(년도): 임형백(2020)</li> <li>연구목적: 코로나19의 원인을 고찰하고, 국제개발부문의 대응전략을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의 원인을 고찰</li> <li>국제개발협력에서의 대응전략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적 차원, 법적·제도적 차원, 인력교류 차원, 윤리적 차원, 정치적 차원, 공간적 차원의 6가지 차원에서 모색</li> </ul> </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명: 한국의 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과 역할: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새로운 도시의제간 상호연계성을 중심으로</li> <li>연구자: 권구순·김유식(2016)</li> <li>연구목적: 국내 민관영역 도시화 국제개발협력 방향성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분석</li> <li>사례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발전목표와 새로운 도시의제간 상호연계성 분석을 통해 분석을 도출</li> <li>민(한국해비타트)-관(한국국제협력단) 사례분석을 통한 향후 도시화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 제시</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명: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li> <li>연구자(년도): 안예현 외 (2018)</li> <li>연구목적: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 풀을 개발하고, 성과관리를 위한 가이드로서 정책적 함의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분석</li> <li>전문가심층면접</li> <li>전문가설문조사</li> <li>포커스그룹인터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협력 성과관리 이론 검토 및 동향</li> <li>개발협력 성과 프레임워크 및 지표사례 분석</li> <li>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성과 및 특성 분석</li> <li>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성과지표물 개발</li> <li>성과지표 활용방안 및 정책제안</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li> <li>연구자(년도): 박세훈 외 (2019)</li> <li>연구목적: 국제사회의 국토·도시 분야 정책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추진 방향을 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분석</li> <li>전문가 인터뷰</li> <li>국제워크숍 개최</li> <li>해외전문가 공동연구</li> <li>국제기구 담당자 의견청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공공개발원조 정책동향분석</li> <li>우리나라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정책 기조 및 사업특성 분석</li> <li>우리나라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제안</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명: 국토교통 국제협력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li> <li>연구자(년도): 국토교통부(2020)</li> <li>연구목적: 국제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국토교통부의 국제협력 중장기 비전과 전략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문조사</li> <li>심층면접</li> <li>외부원고의뢰</li> <li>자문회의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 현황을 공공외교, 개발협력, 산업통상, 해외건설 지원으로 구분하여 파악</li> <li>국토교통부 부서별 국제업무현황분석</li> <li>중장기 비전 및 세부과제제안</li> </ul>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이후 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의 대응을 분석하고,</li> <li>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부문 및 사업현장에 일어난 여건변화와 필요한 대응과제를 심층 검토하여,</li> <li>포스트코로나시대의 국토·도시부문 국제개발협력의 추진과제와 정책방향 제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분석</li> <li>사례분석</li> <li>심층면접</li> <li>전문가간담회</li> <li>자문회의개최</li> <li>외부원고의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시대 우리나라 개발협력 현황 및 성과분석</li> <li>국제기구 및 공여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 변화</li> <li>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례분석을 통한 이슈 및 현황 도출</li> <li>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추진방향 및 과제 제시</li> </ul>	

자료: 저자 작성.

---

## 4. 연구의 기대효과

### □ 정부 국정과제 지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년간, 국제정세의 변화 및 실제 사업추진여건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정과제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sup>7)</sup>를 지원
-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 및 국익의 균형을 고려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의 체계적·통합적 접근을 지원

### □ 개발협력사업 추진관련 기관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중장기 전략 방향 및 구체적인 세부 과제도출을 위한 논의의 자료를 제공

### □ 코로나19 이후 국토·도시부문 국제개발협력의 여건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연구의 외연 확장에 기여

---

7) 자료. 국무조정실 [https://www.opm.go.kr/opm\\_new/info/government01.do](https://www.opm.go.kr/opm_new/info/government01.do) (2021.4.11. 접속)





CHAPTER 2

##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코로나19 대응전략과 정책동향

1. 코로나19와 국제개발협력 여건변화 ..... 17
2.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전략 및 지원동향 ..... 19
3. 주요 선진공여국의 코로나19 관련 개발협력정책 동향 ... 42
4. 국제사회 코로나19 대응 정책동향의 시사점 ..... 55



---

## 02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코로나19 대응전략과 정책 동향

본 장에서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야기된 국제협력의 불확실성 속에서, UN, 세계은행 등의 주요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과 주요 선진 공여국에서 취한 코로나19 대응 전략 및 정책 동향을 검토한다.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정책수단 및 지원 분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향후 국토·도시부문 국제 개발협력 추진전략에 주는 시사점이 있는지 검토한다.

### 1. 코로나19와 국제개발협력의 여건변화

#### □ 코로나19 확산과 국제개발협력 여건변화

-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각 국가는 사람의 비말을 통한 감염이라는 특징을 지닌 코로나바이러스의 노출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제한, 국경봉쇄 등의 강력한 제한조치를 일반화 함
  - 2021년 9월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한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0%를,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구는 27.57%<sup>8)</sup>명을 넘어섰으나,
  - 전 세계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월 3일 하루에도 687,832<sup>9)</sup>명에 달하는

---

8)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웹사이트 기록 참조(접속일: 2021년 9월 6일)

9) <https://covid19.who.int/> 세계보건기구 코로나바이러스 대쉬보드 일일 신규확진자수 참조(접속일: 2021년 9월 3일)

등, 세계 여러 나라는 지난 4월 이후 시작된 코로나 4차 확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은 특히 공공의료 및 방역 등, 보건 시스템이 취약하고, 위기 적응 역량과 재원이 부족한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심화시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증가시킴
  -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이후 국제개발협력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빈곤, 기아, 보건, 경제성장과 일자리, 불평등 등 SDGs 이행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과, 관련 ODA 수요가 확대될 것을 전망(정지선·유애라, 2020)했으며,
  - 2021년 6월 발간된 유엔의 SDGs Report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장에서 야기되고 있는 SDGs 이행 목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보고함(UN 2020)

표 2-1 | 코로나19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SDGs

SDG 목표	코로나19로 인한 SDGs 이행 추이
SDG 1. 빈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대빈곤선 이하 인구비중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한 해 동안 절대빈곤인구 1억 19백만 명~1억 24백만 명 증가</li> </ul> </li> <li>• 2030년까지 전 세계 빈곤률 7%에 달할 것으로 예측</li> </ul>
SDG 2. 기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팬데믹으로 인해 7천만 명에서 1억 6천1백만 명의 인구가 추가적으로 기아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li> <li>-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인구는 '19년 6억5천만 명에서 '20년 7.2~8.1억 명으로 증가</li> </ul>
SDG 3.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팬데믹으로 인해, 보건부문의 진보가 중지 혹은 역전되고, 인류 평균수명단축</li> <li>• 보건의료 체계 부담 증가 및 코로나19 이외 질환자 진료에 부정적 영향</li> <li>• 피임도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 증가로 모자 사망률 증가</li> <li>• 식량접근성 악화로 개도국 아동의 발육부진, 저체중 증가</li> </ul>
SDG 8. 경제성장/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파산, 실업률 증가</li> <li>• 팬데믹으로 2억 5천5백만 명 실직, 이는 '07-09 글로벌 금융위기당시의 4배 규모</li> </ul>
SDG 10. 불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취약국 및 저개발국에 대한 부정적 효과 심화</li> <li>• 팬데믹으로 개도국과 Emerging market의 지니계수가 6%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li> <li>• 비공식 부문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미지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부족</li> </ul>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팬데믹으로 전 세계 슬럼 거주자 증가 및 거주환경 악화</li> <li>(2018년 기준 전 세계 슬럼거주인구는 약 10억 명으로 추정)</li> </ul>

자료: UN 2021: 6, 정지선·유애라 2020: 6 참조.

- 
-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은 우리가 위기가 신속하게 전파되는 연결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과 글로벌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연대와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 줌
  -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국 보건부문의 위기와 재정상황 악화는 개발협력부문에 나타난 국익 우선주의(aid nationalism) 경향을 심화시키는 한편, 주요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 간 경쟁을 확대시키는 양상을 보임
  - 선진공여국에서도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원조예산 지출의 정당성 확보가 중요해짐
    - 미국, 영국 등은 원조전략 마련 시 국익, 경제적 우위 등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원조를 통한 개도국과의 상호 이익을 도모함(관계부처 합동 2020)
  - 팬데믹의 장기화로 국제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만, 회복의 속도 또한 국가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2.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전략 및 지원동향

- 본 장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부문 정책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 19 대응 관련 전략문서들을 검토함.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코로나 19 대응 정책 동향과 회복 및 재건을 위한 도시부문 대응 전략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표 2-2 | 국제기구의 코로나 19 대응 관련 검토 문서

구분	제목	발간시기
OECD	• Managing for Sustainable Results in Development Co-operation in Uncertain Times	2020.06
	• OECD Tackling Coronavirus (COVID-19): Contributing to a Global Effort - Cities Policy Responses	2020.07
	• COVID-19 spending helped to lift foreign aid to an all-time high in 2020 Detailed Note	2021.04
UN Habitat	• UN-Habitat Covid 19 Policy and Programme Framework	2020.04
	• COVID-19 Response Plan	2020.04
세계은행	• Urban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Responses to COVID-19	2020.04
아시아개발은행	• Comprehensive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0.04
	• Livable Cities: Post-COVID-19 New Normal	2020.08
UNDP	• COVID 19 UNDP's Integrated Response	2020.04
	• Beyond Recovery: Towards 2030	2020.06

자료: 저자 작성.

## 1) OECD<sup>10)</sup>

### (1) OECD DAC 회원국의 ODA 지원변화

□ 각국의 코로나 19 대응 예산에 따른 공공재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2020년 OECD DAC 회원국의 ODA 지원 금액은 사상 최대치인 1,612억 달러 달성

- ODA 총액은 2019년에 비해 3.5% 증가하였으며, 개발도상국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ODA 금액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임
-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한 활동에는 총 120억 달러가 사용 됨

10) 본 절은 OECD (2021a). COVID-19 spending helped to lift foreign aid to an all-time high in 2020 Detailed Note 를 토대로 작성됨

- 무상원조에 비해 유상원조의 증가분이 더 컸으며, 전체 양자 간 ODA중 22%가 차관 및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형태로 지원됨
  - 아프리카 및 최빈국에 대한 양자 ODA는 각각 4.1%, 1.5% 증가하였으며 인도적 지원에 대한 ODA는 6% 증가
  -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는 개발도상국의 팬데믹 대응을 위해 ODA 예산을 증액
  - 오스트레일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영국에서는 ODA 총액 감소
- 2020년 기준 OECD DAC 공여국의 GNI 대비 ODA 지원금액 비율은 0.32%에 그쳐 목표치인 0.7%에 도달치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년도에 비해 0.3%증가한 수치이나, 일부 DAC 국가의 GNI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은 GNI 대비 ODA 비율 0.7%를 초과 달성
- OECD의 조사에 따르면 DAC 공여국들은 단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보건시스템, 인도적 지원, 식량안보 지원에 집중하였고, 중기적으로는 코로나 이후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의 회복력 증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2) 코로나 19 대응 전략

- OECD DAC는 2020년 4월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
- 보건 시스템, 정부 거버넌스, 사회 안전망의 측면에서 취약한 국가들에서의 코로나 19 위기 대응지원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수출, 세입, 외국자본유입의 급격한 감소와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취약국의 경제적 영향을 지적

- 
- 공중보건 및 인도적 위기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경제·사회·환경 측면에서의 회복력 증진을 위한 각 부문 행위자(actor)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함
  - 특히 코로나 19의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회복을 위해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 참여 강조
  - ODA가 개발도상국의 코로나 19 대응 지원을 위한 주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한 5P(People, Peace, Planet, Prosperity, Partnership)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개발협력 파트너 국가들이 ODA예산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독려
  -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한 증거, 사례, 데이터 공유 등 책무성(Accountability) 매커니즘 유지를 위해 노력 할 것을 천명
- OECD DAC는 코로나 19라는 예외적 상황 속에서도 성과기반(Result-based) 개발협력의 기초를 유지하며 「DAC Guiding Principles for Manag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sults」를 통해 성과기반 개발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OECD 2020b)
- 팬데믹 상황을 제도적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데이터 수집 및 증거기반 성과관리 등 개발협력 관리시스템 혁신을 위해 활용할 것을 제안
  - 성과기반 개발협력을 위한 원칙으로 1) SDGs 및 목표로 하는 변화를 위한 지원, 2) 상황적 맥락에 대한 적응, 3) 파트너 국가 간의 주인의식, 상호 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 투명성 제고, 4) 학습 및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성과정보 사용 극대화, 5) 학습과 성과 기반 문화 양성, 6) 관리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성과기반 시스템 개발 강조

---

### (3) 도시 분야 코로나 19 대응<sup>11)</sup>

□ OECD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지향적·탄력적 도시 조성을 위해 행동지향적 (Action-oriented) 전략을 제시

- Digital tools의 활용, Urban mobility 향상을 위한 전략 및 투자의 전환, 압축 도시의 인프라 접근성 제고, 공공공간 및 녹지공간에 대한 관심 및 투자 증대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

□ 도시단위의 코로나 19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도시의 디지털화(Digitalisation)와 디지털 도구(Digital Tools)의 활용 강조

- 디지털화는 감염위험,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등의 모니터링과 가상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
- 영국 뉴캐슬, 한국의 대구, 서울 등의 사례를 통해 전염병 발생·감염 경로 모니터링에 있어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기술의 활용 소개
- 코로나 19 시대에서의 정보·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강조

□ 도시 공간에서의 접근방식 변화와 대안책 마련 촉구

- 자가격리와 이동제한 상황에서 자전거, 전기자동차, 스쿠터 등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의 역할과 장기적·영구적 교통수단으로서의 전략수립, 투자 방향 전환 필요성 강조
-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 세계 대도시의 대중교통 이용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난에 대한 대응 논의

---

11) 본 절은 OECD (2020c). OECD Tackling Coronavirus(COVID-19): Contributing to the Global Effort - Cities Policy Responses를 토대로 작성

---

□ 고밀 도시개발 패턴인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을 통한 인프라 접근성 제고 강조

- 압축도시 개발은 고용, 보건·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에너지 소비 및 CO2 배출 감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특히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사회적 인프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코로나 19의 충격을 완화

□ 도시 계획 및 설계의 측면에서 공공공간 및 녹지공간의 중요성이 부상

-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국립공원 및 지역공원 이용도 증가를 들어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안공간으로서 녹지공간의 중요성 제시
- 밀라노, 파리, 몬트리올 등에서 적용된 ‘15 분 도시(15 minutes city)’ 개념을 적용하여 주거, 고용, 생산, 돌봄, 학습, 유희 등 6개 주요 도시기능에 대한 접근성, 주민들의 삶의 질, 도시의 지속가능성 증진이 필요함을 강조

□ 코로나 19 위기 속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력 매커니즘과 시민참여의 중요성 강조

- OECD Champion Mayors for Inclusive Growth Initiative는 국제적·지역적 연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도시 탄력성 회복과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위한 경험 및 지식교류에 기여
- 국가 및 지자체간 협력, 국제사회·지역·도시 간 네트워크 형성, 다분야에 걸친 통합적 정책대응, 시민 참여 활성화 등이 필요

---

## 2) UN-HABITAT<sup>12)</sup>

### (1) 코로나 19 대응 전략

□ 유엔 해비타트는 인간 정주의 측면에서 코로나 19 대응을 지원

- 특히 코로나 19가 비공식거주지, 슬럼을 포함한 취약지역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집중한 대응 방안을 수립

□ 이를 위해 유엔 해비타트는 코로나 19 확산 초기인 2020년 4월 도시 수준 코로나대응 가이드라인 「Covid-19 Rspnse Plan」을 수립

- Covid-19 Rspnse Plan의 주요 활동부문은 1) 지방정부 지원 및 비공식 거주 지역을 위한 혁신적인 공동체 기반 솔루션 제공, 2) 증거 기반의 도시데이터 제공 및 비공식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의 도표화, 3) 코로나 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경감 및 회복 지원, 4) 정책수단 및 실천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 촉진 등을 포함
- 특히 지방정부차원의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제도적 수단 및 거버넌스에 집중

---

12) UN-Habitat의 코로나 19 대응전략의 내용은 김민지(2021.5),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전략과 시사점”에 기술된 내용을 일부 인용·수정함

표 2-3 | 유엔 해비타트 코로나 19 대응계획의 활동영역 및 방안

활동영역	활동방안
지방정부 지원 및 비공식 거주 지역을 위한 혁신적인 공동체 기반 솔루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검사 및 역학조사 등 공중보건 대응책이 생계유지 및 식량 보안을 지원하도록 함</li> <li>• 안전한 수원 및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지역사회 간 협력 촉진</li> <li>• 주민참여 및 공동체 주인의식 제고를 통해 비공식 거주지 거주자들의 행동변화 및 보건인식 제고</li> <li>• 임차료 및 주택담보대출 부담 경감, 무주택자들을 위한 임시거처 제공, 감염자들의 격리를 위해 건물 용도변경 허가</li> <li>• 비공식 거주지 거주자의 이동제한을 준수한 교통수단 이용 및 안전한 도시 이동을 지방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증거 기반의 도시데이터 제공 및 비공식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의 도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수준의 대응 구체화, 신규 밀집지역 도식화, 비공식 시장 및 교통 허브 재구성, 공공공간 계획, 보건 및 긴급구호 서비스를 위한 건설 등을 위한 통합적인 공동체 데이터 생성</li> <li>• 글로벌 및 현지 파트너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동원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매핑, 분석을 통해 물, 위생, 식량, 주거, 보건서비스 등 우선적인 수요에 집중한 대응 실시</li> <li>• 도시의 코로나 19 위기 대응을 위한 질병 예방, 대응, 회복에 대한 학습, 훈련, 역량 강화 제공</li> </ul>
코로나 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경감 및 회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19로부터의 신속한 회복을 준비하며 공식·비공식 부문을 모두 염두에 둔 경제적 영향 경감을 위한 정책수단 설계</li> <li>• 필수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정부 및 지방 서비스 제공자들의 재정적 여력 확대</li> <li>• 도시변영지표와 같은 실용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도시가 모든 측면에서의 변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지원</li> <li>• 새로운 방식의 노동과 생활방식, 장기적인 정책변화에 대한 통찰력과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글로벌 지식인들과의 다학제적 협력 구축</li> </ul>
정책수단 및 실천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19 위기 대처(전염병 예방 및 회복)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위한 패스트 트랙 마련</li> <li>• 도시지역에서의 전염병 예방, 대응, 회복 지원을 위한 지식, 기술, 자원 활용에 있어서 다자간 파트너십(Multi-stakeholder Partnership) 제고</li> </ul>

자료: UN Habitat 2020a, 김민지 2021: 12에서 재인용.

## (2) 코로나 19 대응 사업 현황

□ 유엔 해비타트는 Covid-19 Response Plan의 주요 활동부문 지원을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총 7천 2백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 별 특성과 문제에 따라 상이한 우선대응 분야를 설정 (UN Habitat 2020a, 6)

- (아프리카) 지역정부와 도시공동체 역량강화를 포함한 기술적 지원 및 취약지역의 식량안보 및 기초서비스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중동) 도시 취약성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및 역량 강화, 위생·수자원·교통·인프라·소득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보건대책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역량 강화
- (아시아) 팬데믹 대응을 위한 도시 데이터의 생산·수집·분석 역량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
- (라틴아메리카) 비공식 거주지를 포함한 취약지역에 대한 투자 촉진, 도시빈곤경감과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표 2-4 | 유엔 해비타트의 코로나 19 대응 활동분야 및 지역별 재원

(단위: 달러)

활동영역	아프리카 (20개국)	중동 (11개국)	아시아 ·태평양 (17개국)	라틴 아메리카 (16개국)	글로벌 프로그램	합계
1. 혁신적인 공동체 기반 솔루션 제공	25,890,000	16,160,000	9,000,000	700,000	-	51,750,000
2. 증거기반 도시데이터 제공 및 정보 도표화	910,000	1,090,000	910,000	890,000	2,200,000	6,000,000
3. 코로나 19의 경제적 영향력 경감 및 회복 지원	6,500,000	300,000	480,000	6,740,000	230,000	14,250,000
2020년 연내 총 수요	33,300,000	17,550,000	10,390,000	8,330,000	2,430,000	72,000,000

자료: UN Habitat 2020a: 6, 김민지 2021: 13에서 재인용.

□ 2020년 한 해 동안 유엔 해비타트는 계획된 재원투입의 44%에 달하는 3,200만 달러를 투입하여 37개국 300개 도시에서 75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음 (UN Habitat 2021, vi)

- 코로나 19 긴급 대응 기간 동안은 지방정부가 비공식거주지 등 취약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보건 방침을 수립하는 데 집중
- 장기적으로는 각국 정부 및 도시가 슬럼지역 개선과 도시기초인프라, 저렴주택 공급, 재난 회복 등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원 함

□ 유엔 해비타트는 이외에도 코로나 19에 대한 시의성 있는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긴급 기금 사업을 승인하여 수행하였음

- ① 유엔 해비타트가 이미 운영 중이거나 지속되고 있는 프로그램
- ② 통합적인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
- ③ 프로그램 파트너들과의 기존 계획 내에 진행 중인 업무의 방향 및 규모를 조정하는 활동
- ④ 주요 파트너 국가/기관의 대응에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 ⑤ 도시지역 코로나 19 대응에 포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 ⑥ 기금 지원 한 달 이내에 직접적인 영향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 ⑦ 프로젝트의 범위를 넘어서 공동체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촉발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표 2-5 | 유엔 해비타트의 긴급 기금 사업 목록

국가	금액 (달러)	사업명
가나	100,000	• Emergency WASH in Ga Mashie as a Rapid Response to the spread of COVID-19
기니	99,348	• Multi-stakeholder solidarity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in Greater Conakry
케냐	200,000	• Implementation of the CoVID-19 Action Plan for Kenya
모잠비크	50,000	• COVID-19 Rapid Response within the scope of UN-Habitat Building Back Better and Resilience Building Umbrella Programme
피지	65,647	• COVID-19 Community awareness and preparedness in informal settlements in Fiji (CAPIS FIJI)
필리핀	100,000	• CoVID-19 Response as We Rebuild Marawi
미얀마	77,900	• Enhancing Community Resilience Against CoVID-19 project in Myanmar
이라크	99,855	• Rapid Response to COVID-19 in Iraq through Mobile Handwashing Trailers
레바논	100,000	• Equipping vulnerable urban populations including refugees and migrants with WASH facilities to mitigate impact of CoVID-19

국가	금액 (달러)	사업명
시리아	210,000	• Mitigation Measures in Syrian Cities for CoVID-19
볼리비아	68,000	• Food security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in vulnerable neighborhoods
브라질	100,000	• Monitoring and Evidence-Based Rapid Response in Informal Settlements of Maceio & Employing Knowledge
멕시코	90,000	• Support local governments to prepare and implement a recovery plan during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자료: UN Habitat 2020b, 김민지 2021: 14-15에서 재인용.

#### □ 유엔 해비타트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지방정부 및 공동체가 최전방에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
- 주요 UN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에 적극 참여
- 기존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추진방향 재설정을 통해 사업의 영향력 및 잠재력을 확대
- 취약지역의 모니터링과 위기대응에 있어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활용 확대
- 취약계층 및 취약국을 우선적으로 지원

### 3) 유엔 개발계획 (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 (1) 코로나 19 대응 전략

##### □ 유엔 개발계획은 UN의 코로나 19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응을 기술적으로 이끌고 있음

- 2020년 3월 UNDP는 「코로나 19에 대한 준비, 대응, 회복 (Prepare, Respond, Recover Response)계획」을 통해 1) 보건 시스템 지원, 2) 다부문 위기관리, 3)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와 대응을 최우선순위로 설정 (UNDP 2020)

- 이후 약 3개월 간 파트너 국가로부터의 1억 7천만 달러의 신규 재정지원과 1억 5천만 달러의 기존 프로그램 펀드를 활용하여 세계 각국의 코로나 19 대응 우선순위를 지원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다음 단계로 1) 거버넌스, 2) 사회보장, 3) 녹색경제, 4) 디지털 장애를 주요 대응 분야로 설정
- (거버넌스) 파트너 국가의 사회적 자본 재건과 포괄적인 서비스 공급, 열린 시민공간을 위해 협력국의 새로운 사회적 거버넌스 수립을 지원
- 법제도, 인권, 중앙·지방정부 운영 지원을 위한 전자 거버넌스 지원
  - 국제금융기구 및 UN 산하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 및 불확실성 관리, 비상정책 및 계획수립, 필수서비스의 지속성 보장, 부패방지 지원
  - 성차별적 스테레오 타입을 타파하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가정폭력 생존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강화
  - 우선순위 시장 투자 촉진과 민간부문 참여강화를 통한 정부 재정 지원, 포용적인 녹색 경제 회복 전략의 수립
- (사회보장) 보편적인 보건서비스 및 기초 서비스 보장 지원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 이후 사회에 침투한 불평등에 대응
- 유엔 자본개발기금(UN Capital Development Fund: UNCDF)을 포함한 다자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금성 지원을 포함한 금융지원 및 일시적 기본소득 제공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유엔 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등 유엔 산하기구와 협력하여 미래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력
  - 비공식 근로자, 장애인, 여성 이민자 등을 위한 포괄적인 재정지원 촉진

-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UNAIDS, 글로벌펀드 및 기타 협력기관과 함께 HIV 유병자를 위한 보편적 의료 서비스 지원
- (녹색경제) 인간과 환경 간의 균형을 찾고, 환경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적 솔루션 모색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메커니즘, 에코투어리즘, 녹색 교통시스템 등에 대한 통합적 고려
  - 유엔 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UN Habitat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 대응을 포괄하는 도시계획 및 농업 및 토지이용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탄력적인 회복 촉진
  - ILO 및 기타 협력기관과 협력하여 각국의 농촌기업 및 환경 기반 일자리를 촉진, 보호하기 위해 녹색 회복 보조금 지원
  - UNEP,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및 기타 파트너와 협력하여 코로나 19 대응의 일환으로 화석 연료 보조금 개혁을 포함한 녹색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 (디지털 장애와 혁신)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교육 중단, 인터넷 접근성 격차 확대에 대응하고 원격교육, 원격근무, 원격의료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위해 투자
-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통한 원격운영과 광범위한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을 통해 각국 정부 및 기관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원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주요한 정부 서비스 제공 지원
  -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통합 지원
  - 여성 운영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감소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결

---

### 제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 UNCDF, 세계은행,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및 기타 협력기관과 협력하여 송금 흐름 개선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옵션 강화
- 이와 같은 전략의 시행을 위해 유엔 개발계획은 전 세계 50개 이상의 국가와 협력하여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통합적 자원조달 프레임워크 (National Financing Frameworks: INFFs)’를 구축
- 2020년 3월부터 12-18개월에 걸쳐 주요 대응분야에 총 7억 달러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힘 (UNDP 2020, 10)
  - 분야별로는 지속적인 보건위기 지원에 2억 달러, 거버넌스와 녹색경제에 각 1억 5천 만 달러, 사회보장에 1억 2천만 달러, 디지털 전환과 혁신에 8천만 달러 등 총 7억 달러를 조달할 예정 (UNDP 2020, 10)

### (2) 도시 분야 코로나 19 대응

- 코로나 19 확산 이후 심화된 불평등과 도시의 팬데믹 대응 역량 및 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2월 유엔 개발계획과 유엔 해비타트는 보다 강화된 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 (UNDP and UN HABITAT, 2021)
- 새로운 협력 프레임워크 하에 5개의 집중 분야는 1) 국가도시정책, 2) 개발을 위한 금융지원, 3) 기후변화, 4) 도시회복력, 5) 디지털 전환
  - (국가 도시정책) 각국의 국가 도시 정책(National Urban Policies)개발 지원
  - (개발을 위한 금융 지원) 지역의 개발의제를 반영하고, 국가경제에 대한 도시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재정 프레임워크를 개발·지원

- (기후변화) 기후변화 대응 이행을 위한 국가와 도시의 역량 강화
  - (도시회복력) 도시의 회복과 재건에 필요한 인프라 공급을 위한 협력 강화
  - (디지털 전환)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도시회복력 강화 및 디지털 전환 촉진
- 새로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유엔 개발계획은 유엔 해비타트 프로젝트 20개에 총 8,000만 달러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 (UNDP and UN HABITAT 2021)
- 유엔 개발계획의 코로나 19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UN 기구를 포함한 다자기구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범분야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부상한 주요 이슈 중 기후변화(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여 전략 수립
  - 취약계층 및 취약국을 우선시한 인도적 지원에 집중

#### 4) 세계은행(World Bank)<sup>13)</sup>

##### (1) 코로나 19 대응 전략

- 세계은행 그룹은 설립목적인 “지속가능한 빈곤종식과 상생번영”에 부합하는 코로나 19 대응을 추진
- 특히 개발도상국의 팬데믹 대응 강화, 질병 모니터링 확대, 공중보건 부문 정책개입의 확대, 민간부문의 지속적 운영과 고용 증대를 포괄하는 폭넓은 대응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

13) 세계은행의 코로나 19 대응전략의 내용은 김민지(2021,5),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전략과 시사점”에 기술된 내용을 일부 인용·수정함

- 
- 세계은행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각국의 보건, 경제, 사회적 영향에 대응하여 2021년 6월까지 최대 1,600억 달러의 맞춤형 기금을 지원 (World Bank 2020b, 3)
- 이 중 500억 달러는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sup>14)</sup>의 지원대상국에 무상지원 혹은 고도의 양허성 자금으로 지원(World Bank 2020b, 3)
  - 2020년 4월 패스트트랙 금융을 활용한 ‘코로나 19의 전략적 예방과 대응 프로그램(COVID-19 Strategic Preparedness and Response Program: SPRP)’을 통해 25개국에 19억 달러를 지원 (World Bank 2020b, 1)
  - 2020년 10월에는 120억 달러를 투입하여 개발도상국의 코로나 19 백신 구매를 지원<sup>15)</sup>
- 세계은행은 코로나19 대응을 전염병 확산의 경감(Relief) - 재구조화(Restructuring) - 탄력적인 회복(Resilient Recovery) 3단계로 나누어 지원 (World Bank 홈페이지)<sup>16)</sup>
- (경감)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충격에 대한 긴급 대응
  - (재구조화)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보건 시스템 강화, 인적자원 회복, 부채 경감, 기업의 자본재확충 등
  - (탄력적인 회복)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미래 건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포착

---

14) 세계은행그룹의 산하기구로 저소득 개도국 가맹국에 장기 적 양허성 자금을 지원하는 기능을 함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 <http://ifi.moef.go.kr>, 2021년 9월 28일 검색)

15)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0/10/13/world-bank-approves-12-billion-for-covid-19-vaccines>, 2021년 9월 28일 접속

16)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0/10/13/world-bank-approves-12-billion-for-covid-19-vaccines>, 2021년 9월 28일 접속

---

□ 세계은행의 코로나 19 대응책은 크게 1) 코로나 19 긴급대응, 2) 향후 보건 위기에 대한 대비책 모색, 3) 질병 확산 모니터링 확대, 4) 코로나 19 예방 및 치료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2021년 9월 기준 총 120개국에서 51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총 투입된 재원은 75억 달러에 달하며, 취약성이 높은 서아프리카에서 119개, 동아프리카에서 94개의 사업을 진행 중이며 발병률이 가장 높은 라틴아메리카에서 77개 사업 진행 중(World Bank 홈페이지<sup>17)</sup>)

□ 지원 국가에 대해 각 대응 단계별로 부문별 핵심전략에 부합하는 재정·기술적 지원을 제공

- (부문별 핵심전략) 1) 전염병확산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한 보건부문 응급 지원, 2) 코로나 19의 사회·경제적 영향으로부터 빈곤·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 3) 생계 및 일자리 보전, 지속가능한 사업성장, 고용창출, 기업·금융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 대응, 4) 탄력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복구에 필요한 정책, 제도, 투자 강화를 위한 범 분야 지원

## (2) 도시 분야 코로나 19 대응

□ 세계은행은 도시차원의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 도시정부의 대응역량 및 적극적인 역할 강조(World Bank 2020a, 2)

- 도시정부는 특히 1) 도시차원에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2)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보건 및 경제 지원, 3) 기업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투자 및 경기회복 증진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17) <https://maps.worldbank.org>, 2021년 9월 28일 접속

□ 세계은행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코로나 19에 대응한 도시 및 재해위험관리 방안 (Urban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Response to COVID 19)」을 수립

- 주요 목표는 1) 도시지역 질병확산 방지 및 필수 도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2) 비공식거주지·슬럼 거주자들을 포함한 도시 빈곤·취약계층의 보호, 3) 토지이용계획 및 구획, 토지계획과 투자 간의 지역적 조정 개선, 4)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증진
- 세계은행은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 프로젝트 용자(Investment Project Financing), 개발정책 운영(Development Policy Operation: DPO), 성과기반 프로그램 용자(Program-for Results Financing Instrument: PforR)를 포함한 복합적인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 예정
- 긴급대응 - 경제회복 초기 - 중·장기적 회복 3단계에 거친 도시 및 재해위험관리 대응 방안 제시

표 2-6 | 세계은행의 도시 및 재해위험관리 대응 매트릭스

목표	긴급 대응 단계	경제회복 초기	중·장기적 회복
전염병 확산방지 및 필수 도시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의 재배치, 민간 시설 이용 관리 및 규제(DPO*)</li> <li>• 도시서비스 우선순위 선정, 인력 및 자원의 재배치(DPO)</li> <li>• 보건, 교통, 인프라 부문과 국가재난관리통합(DPO)</li> <li>• 전염병 예방에 대한 인식 및 정보 개선 캠페인(DPO)</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기복구 및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DPO, IPF, A)</li> <li>• 보건 회복탄력성 관련 데이터 인프라 구축(IPF, 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인 응급상황 관리 능력 양성 및 도시수준의 계획 수립(DPO, A)</li> </ul>
도시빈곤층 및 취약계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안전한 수원 제공, 손씻기 캠페인, 위생·폐기물 집하처리시설 제공, 식량안보 지원(DPO, IPF)</li> <li>•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 지원(관리비용, 임대료에 대한 지불유예, 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럼 및 빈민가를 대상으로 한 노동집약적 공공프로그램 구축(IPF, PforR)</li> <li>• 도시 공동체 및 빈곤층을 위한 안전망 제공(블록 보조금, 현금 지급 등) (DPO, IPF, Pfor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도시 수준에서의 슬럼 개선 사업 및 주택 프로그램 규모 확대(저렴주택, 인프라, 서비스 개선, 토지소유 합법화)(DPO, IPF, PforR)</li> </ul>

목표	긴급 대응 단계	경제회복 초기	중·장기적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 방지)(DPO, A)</li> <li>지역사회·시민 참여 촉진 및 지리적으로 타겟팅 된 인식개선 캠페인 (IPF/PforR)</li> <li>전염병 확산 고위험지역 (hotspot) 식별 (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빈곤층을 위한 주택개선(미소금융, 보조금 지급 등)(DPO, IPF, PforR)</li> <li>지역사회·시민 참여 촉진 및 지리적으로 목표화 된 인식 개선 캠페인(IPF/PforR)</li> </ul>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정부, 공중보건기관,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간 조정을 위한 임시 관할구역 설정(DPO)</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축 판매 및 보호에 대한 운영안전 계획 수립 (DPO, A)</li> <li>보건 및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험지역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구획 재조정 (DPO, A)</li> <li>건강한 공공공간 및 주거지역을 위한 기준 및 투자 설계·계획(IPF, A)</li> <li>도시농업 파일럿 사업 (IPF)</li> <li>지역 조정 정책, 계획, 제도적 장치 마련(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하고 살기 좋은, 회복력 있는 도시를 위한 정책적 개입 주류화(DPO, PforR, IPF)</li> <li>지속가능한 도시 농업 구현 (IPF)</li> <li>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위험 감염 경로 등에 대한 도시·지역 수준의 다부문 영향력 평가 실시(A)</li> </ul>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양도 확대, 조건부 보조금 지급 및 채무 상환유예를 통한 긴급 금융제공 (DPO)</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정부 자원 마련을 위한 패스트 트랙 지원 마련 (DPO, IPF)</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정부의 제도적 시스템 강화(IPF, A)</li> <li>지역단위의 재정관리 및 투자 우선순위 조정 강화 (IPF, A)</li> </ul>

\*괄호 안의 약어는 단계별 활동 이행을 위한 금융 수단을 의미

- Development Policy Operation(DPO): 개발정책금융 운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정책 및 제도적 조치
- Investment Project Financing: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 감소에 필요한 물리적/사회적 인프라 건설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IBRD 차관 및 IDA 무상지원
- Program-for-Results Financing Instrument(PforR): 자금의 지출을 정의된 결과의 전달에 직접 연계하여 각국이 자체 개발 프로그램 설계·실행 방식을 개선하고 제도·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함
- TA/Analytics(A): 연구·분석·컨설팅 등 기술적 지원

자료: World Bank 2020a: 3, 김민지 2021: 19-20 재인용.

---

□ 세계은행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공공부문 재정 안정성을 위한 패스트 트랙 지원
-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취약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 도시 차원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 대응을 지원하며, 도시 부문 추진전략에서 보건 및 재난관리의 통합

## 5)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sup>18)</sup>

### (1) 코로나 19 대응 전략

□ 아시아 개발은행은 2020년 4월 역대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200억 달러의 금융 패키지 출자 계획을 발표함 (ADB 2020a, 1)

- 초기 자금은 36억 달러 상당의 보건 및 경제 분야 지원 차관 및 16억 달러의 민간부문 지원, 양허성 재원 10억 달러, 4천 만 달러 수준의 기술원조 (Technical Assistance) 및 무상원조자금(Grant)을 포함함
- 민간부문 지원은 무역 금융 프로그램(Trade Finance Program: TFP), 미소금융위험보증 프로그램(Risk Participation and Guarantee Program: MFP), 공급망 금융 프로그램(Supply Chain Finance Program: SCFP), 기타 코로나 19의 경제적 영향 대응을 위한 맞춤형 금융 프로젝트 등을 포함함
- 향후 일반재원(Ordinary Capital Resources) 13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경기순환대책용 금융지원<sup>19)</sup> 및 기술원조 및 무상원조에 활용할 계획을 수립

---

18) 아시아개발은행의 코로나 19 대응전략의 내용은 김민지(2021.5),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전략과 시사점"에 기술된 내용을 일부 인용·수정함

19) 경기불황을 겪는 개발도상회원국의 경기 및 재정부양을 위한 예산 지원

- 
- 2021년 11월 현재 기준 ADB의 금융패키지는 총 228개 프로젝트에 약 207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함<sup>20)</sup>
    - 약 152억 달러가 차관사업에 지원되었으며, 46억 달러는 보증 사업에 지원됨
    - 무상원조 자금과 기술지원은 각각 4억 9,447만 달러, 1억 5,743달러에 그침
    - 지역별로는 남아시아에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었으며, 분야별로는 공공부문 관리에 118억 달러가 지원되어 전체 금액의 절반이상이 공공부문 관리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 차관 및 보증을 포함한 유상지원은 주로 공공부문 부채관리 및 무역금융 역량 강화 등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영향 저감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였으며, 무상 지원의 경우 보건 및 위생 역량강화 및 식량안보와 관련한 사업에 주로 지원됨
  - 이외에도 아시아 개발은행은 2020년 12월 아시아-태평양 백신공급 지원체계(Asia Pacific Vaccine Access Facility) 구축을 통해 총 90억 달러의 기금을 역내 백신공급 지원을 위해 활용할 계획을 발표함(아시아개발은행<sup>21)</sup>)
    - 2021년 11월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등 취약국과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와 같은 태평양 도서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 19 백신 공급을 위한 12개 프로젝트에 약 23억 달러의 기금을 투입
  - 코로나 19에 대응한 국가수준의 대응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파트너 간의 공조 강조
    - 아시아 개발은행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세계은행 등 관련 양자 및 다자 개발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협조용자 등의 기회를 모색

---

20) 자료. <https://www.adb.org/what-we-do/covid19-coronavirus> (2021년 11월 28일 검색)

21) <https://www.adb.org/what-we-do/covid19-coronavirus> (2021년11월28일 접속)

- 
- 민간부문과 관련해서는 세계은행그룹의 국제금융공사,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및 기타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e: DFI)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

## (2) 도시 분야 코로나 19 대응

□ 도시부문에서 아시아개발은행의 코로나 19 대응은 기존의 '살기 좋은 도시(Livable Cities) 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될 예정(ADB, 2020b, 1)

- 아시아개발은행은 2030년까지의 운영전략상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살기 좋은 도시의 구현(Making livable cities)'을 설정
- 이와 관련된 전략부문으로는 1) 도시 내 공급 서비스의 범위, 품질, 효율성, 신뢰성 개선, 2)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을 통한 도시계획 및 도시재정의 지속가능성 증진, 3) 도시환경, 기후변화 회복력, 재난관리 능력 강화가 있음
- 살기 좋은 도시 계획에 기반을 두어 아시아개발은행의 도시부문 코로나 19 대응은 1) 도시의 안전과 건강의 측면에서 코로나 19로부터 얻은 교훈을 전략적으로 반영한 부처 간, 행정 지역 간 통합적인 도시계획 수립, 2)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나은 사회적 보호 수단 마련, 3) 기초서비스 및 WASH(Water, Sanitation, and Hygienes)의 차질 없는 공급, 폐기물 관리 등을 포함한 도시환경 개선에 집중
- 중장기적으로는 1) 기술 및 디지털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도시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 2) 코로나 19로부터 얻은 교훈의 전략적인 도시계획 반영, 3) 지방정부의 재정 지속가능성 개선 및 도시기관 역량 강화, 4)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5) 전염병 확산, 재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복력 있는 도시의 건설을 목표로 함

표 2-7 | 아시아 개발은행의 도시부문 코로나 19 대응 방안



자료: ADB 2020a; 김민지 2021: 25 재인용.

□ 아시아개발은행은 기존의 도시부문 포트폴리오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일부 조정할 예정이다 (ADB 2020b, 1)

- 2020년 기준 아시아 개발은행의 교통부문지원은 31억 4,700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절반이하로 축소되었으며, 공공부문 관리, 보건, 에너지 분야가 각각 43억 달러, 96억 달러로 크게 증액되었으며 물관리 및 기타 도시인프라 부문 또한 소폭 증가하였음 (ADB 2020b)
- 아시아개발은행의 살기 좋은 도시 프로젝트는 코로나 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목표로 개발도상 회원국의 도시들이 보다 건강하고 포괄적이며 회복력 있도록 설계될 예정

---

□ 아시아개발은행의 코로나 19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보건 및 경제부문에 대한 집중적 지원
- 민간부문의 경제적 회복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금융 패키지와 기술적 지원 확대
- 기존 이니셔티브와 전염병 대응 전략의 통합

### 3. 주요 선진공여국의 코로나19 관련 개발협력정책 동향

□ 2020년 OECD DAC 가입국이 공여한 ODA 자금의 약 1/3이 코로나 19 대응에 사용됨 (OECD 2021b, 31)

- 2020년 기준 OECD DAC 가입국의 ODA 증여액은 약 1,610억 달러이며 이중 약 500억 달러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사용됨 (OECD 2021b, 3)
- 이는 2019년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이나 공여국들의 자국 경기부양책에 사용한 재원의 약 1.3%에 불과한 금액임 (OECD 2021b, 6)
- 또한 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약 3.7조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향후 지속적인 ODA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OECD 2021b, 3)

□ 2020년 10월까지 OECD DAC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의 코로나 19 대응지원을 위해 조달한 재원은 1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OECD 2020b, 4)

- 이 중 17개국이 2020년 신규 혹은 추가 예산을 투입해 지원금액을 확대하였으며, 독일과 미국이 가장 큰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DAC회원국의 공여금 중 48억 달러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재배정되었으며, 이중 일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연기되거나 취소된 개발 프로그램의 재원임

- 공여국들은 주로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과 위험이 크거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재원을 투입

표 2-8 | 개발도상국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투입된 자원 (2020년 10월 기준 예상 값)

공여국/기관	금액
OECD DAC 회원국 28개국	120억 달러
OECD 비회원국	6,570만 달러
세계은행	430억 달러
기타 다자기구(IMF 제외)	370억 달러
27개 자선 재단	13억 달러

주: 해당 수치는 2020년 10월 OECD DAC 회원국 및 기타 자금조달처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토대로 도출되었음  
 자료: OECD 2020b.

□ 한국을 포함한 일부 공여국에서는 자국의 코로나 19 대응 예산 확대로 인해 ODA 예산을 감액 하였으나, 미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선진 공여국들은 ODA 확대를 통해 글로벌사회의 코로나 19 대응 지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중

- 본장에서는 ODA를 통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평가되는 선진 공여국 독일, 프랑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에 본 장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주요 선진공여국의 개발협력부문의 코로나19 대응 정책동향을 살펴봄.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위기에 대응한 선진공여국들의 개발도상국 지원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함

## 1) 독일

□ 2020년 기준 독일의 ODA 규모는 284억 달러로 OECD DAC 공여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ODA에 지출 (OECD 2021c)

-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13.7% 증가한 수치

-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ODA비율(ODA/GNI)의 경우 0.73%로 세계 5위 수준
- 독일의 주요 수원국은 1) 인도, 2) 중국, 3) 시리아, 4) 인도네시아 순

□ 독일의 ODA는 연방경제협력개발부(Federal Ministry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14개 연방 부처 및 16개 연방 주정부에서 독립적인 ODA 정책, 예산, 사업을 운영 (OECD 2021c)

- BMZ는 독일 ODA 예산의 약 50%를 집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3개 연방 부처에서 19%, 연방 주정부에서 5%를 집행
- ODA 정책 전반의 리더십은 BMZ가 주도하고 있으며, BMZ는 4개의 개발협력 시행기관을 감독 하고 있음\*

\* 독일부흥은행(KfW), 독일국제개발협력위원회(GIZ), 독일국립이공학연구소(PTB), 연방지질자원연구원(BGR)

□ 2020년 독일의 코로나 대응 ODA 지원액은 약 32억 달러 (OECD 2021e)

- BMZ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긴급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에 47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을 밝힘 (BMZ, 2021b, 9)
- 이 예산은 코로나19의 예방, 조기진단, 감염방지 수단에 지원될 예정이며,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목적으로 활용

□ BMZ의 긴급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 분야는 1) 보건 및 전염병 제어, 2) 기근 방지를 위한 기초적 식량 서비스 확보, 3) 이주에 따른 영향을 받는 취약지역의 안정화, 4) 사회보호와 고용,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5) 주요 산업에 대한 추가적 경제적 지원, 6) 국가프로그램에 대한 긴급 재정 지원, 7) 국제협력의 강화

- (보건 및 전염병 제어) 병원 파트너십 이니셔티브(Hospital Partnership Initiative)를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17개국 21개 프로젝트에 대한 재원을 제공. WHO와의 협력을 통해 에티오피아, 키르기스스탄, 토고,

---

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나이지리아 등 7개 국가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지원 등

- (기근방지 및 식량서비스 확보) 세계식량프로그램(World Food Programme)에 대한 주요 지원 확대 및 WFP 및 유엔아동기금(UNICEF)와의 공동 이니셔티브에 대한 금융 지원. 아프리카 농업 및 무역 투자 기금(Africa Agriculture and Trade Investment Fund: AATIF)등을 통한 식량공급망에 대한 지원 확대 등
- (사회보호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터키 및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 아동들을 위한 교사 및 교재 지원, 남수단 취약가정을 위한 기초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사헬지역 사회보호 제도 확대 지원 사업 등
- (주요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다국가 재정 이니셔티브 제공, 민간부문 파트너십 확대, 단기유자 지원을 통한 아프리카 투자확대 등
- (국가프로그램에 대한 긴급 재정 지원) 방글라데시 국가사회보호 프로그램 지원, 조지아 국가 실업프로그램 지원,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세계은행 다공여국 신탁기금 지원 등
- (국제협력강화) 유엔인구기금(The United Population Fund: UNFPA), 유엔개발프로그램(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유엔아동기금 공여금 증액 등

□ 지역적으로는 BMZ의 2030 개혁 전략(2030 Reform Strategy)에 따라 지원이 확대된 개혁 파트너십(Reform Partnership)에 포함된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 19 지원 확대 (BMZ 2021b, 10)

- (아프리카) 개혁 파트너십에 속한 국가인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가나, 모로코, 세네갈, 튀니지 등 6개 국가에 대해 집중적 지원. 장기적 보건 시스템 강화, 자금 유동성 안정화, 금융 부문 및 고용 안정화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데미지 최소화

- (아시아)병원, 검사소 등 보건부문 및 식량안보와 관련한 긴급대응 중심으로 지원.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를 대상으로 한 긴급 금융 지원 제공
- (중동) 코로나 19 영향 저감을 위한 즉각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률 증가, 사회·경제적 불안정 확산, 추가적인 인구 이동 등에 대응한 보건·사회 부문 지원 확대
- (중남미)보건 및 이주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가능한 회복과 경제적 재건을 위한 구조적 지원 제공. 특히 중앙아시아와 베네수엘라의 접경 국가, 아마존 지역의 원주민 커뮤니티 관련 이주 이슈에 대한 지원을 확대
- (동유럽) 경제 및 사회 붕괴로 부터의 보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신속한 프로그램 실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

□ 또한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사회의 노력에 부합하는 국제개발협력활동을 위하여 다자간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대응에도 적극 참여

- WHO에서 코로나 19의 검사, 치료, 백신개발 및 백신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 발족한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ACT-A) 네트워크에 22억 유로를 공여 (BMZ 2021b, 9)
- 독일은 ACT-A의 두 번째로 공여금 규모가 큰 공여국이며, 공여된 22억 유로 중 13억 유로가 BMZ를 통해 출자됨 (BMZ 2021b, 9)

□ 독일의 경우 팬데믹 초기에 ODA 증액 보다는 예산의 재분배에 집중했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다른 공여국보다 비교적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음 (OECD 2021e, 1)

- 팬데믹 초기에 수원국들의 추가자금 이행 능력이 제한적이었는데, 기존 예산의 재분배를 통해 추가자원 수요를 조정할 시간을 확보
- 또한 독일의 자체적 경기부양책을 실행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추가자원이 필요한 지역과 분야를 파악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었음

---

□ 독일은 코로나 19로부터의 장기적 회복을 위해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과제로 삼고 코로나 19 위기를 기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하고 있음 (BMZ 2021b, 29)

- 이와 관련하여 탄소배출 감축과 에너지, 그린인프라에 대한 투자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도모하는 한편,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

□ 이와 같은 이른바 ‘녹색 회복(Green Recovery)’ 추진을 위하여 독일은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를 추진 (BMZ, 2021a, 2)

- (세계은행) 재생가능 에너지사용의 촉진과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위한 세계은행의 녹색 회복 이니셔티브(Green Recovery Initiative)에 8,000만 달러 투입함
-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의 기후변화 역량개발 프로그램에 4백만 유로를 투자하여 각국 부처 및 중앙은행의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등 재정정책 수단 역량 강화에 기여함
- (UN) UNDP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요르단, 알바니아, 베닌, 에콰도르, 베트남 5개국의 NDC 수단의 코로나 19 회복 프로그램 통합을 지원함
- (InsuResilience 글로벌 파트너십) InsuResilience 글로벌 파트너십은 G7 기후리스크 보험 이니셔티브에 따라 취약국을 위한 재난 위험 대응 보험 솔루션 제공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독일은 취약국의 재난 위험 보험정책 개편을 위해 1,950만 유로의 지원금을 출자함
- (EU) 아프리카-EU 에너지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속가능 개발 달성을 위한 활동 전개함

---

## 2) 프랑스

□ 2020년 기준 프랑스의 ODA 규모는 141억 달러로 OECD DAC 공여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금액을 ODA에 지출 (OECD 2021b, 4)

-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9% 증가한 수치로, 차관을 비롯한 코로나 19 대응 양 자원조금액의 증가로 인한 것임 (OECD 2021b, 29)
-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ODA비율(ODA/GNI)의 경우 0.53%로 OECD DAC의 권고 수준인 0.7%에 못 미침 (OECD 2021b, 29)
- 2019년 기준 프랑스의 주요 수원국은 1) 모로코, 2) 코트디부아르, 3) 카메룬, 4) 세네갈 순으로,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한 경향을 보임 (OECD 2021d, 10)

□ 프랑스의 원조체계는 다원화 되어 있으며, 수상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ICID)를 공여기관 간 조정기구로 두고 있음 (OECD 2018, 66)

- CICID의 감독 하에 3개의 주요 집행기구인 외무부(Ministry for Europe and Foreign Affairs: MEAE), 재정경제부(Ministry of the Economy and Finance: MINEFI), 프랑스 개발청(French Development Agency: AFD)을 비롯한 10개 이상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ODA를 집행

□ AFD는 2020년-21년 기간 동안 총 22억 유로를 활용하여 33개국 63개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을 밝힘 (AFD 2021a)

- 2020년 4월에는 사하라 이남 지역 국가들의 코로나 19에 대한 즉각적, 장기적 대응을 위해 12억 유로 상당의 금융 패키지를 지원 할 것을 발표 (OECD 2020b, 209)
- 2020년 4월에서 9월까지 프랑스는 해당 예산의 90%를 투입했으며, 이 중 1,500만 유로는 무상원조로 지원됨

- 
- 이외에도 프랑스 국립 보건의료 연구원 (French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Medical Research: INSERM)과 협력하여 150만 유로를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가봉, 말리, 세네갈 내 병원들의 코로나 19 대응을 지원

□ 프랑스 개발청(French Development Agency: AFD)은 또한 개발도상국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Health in Common Initiative」를 시행 (AFD 2021a)

-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은 아프리카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중앙정부를 포함해 시민단체, 개발은행, 민간부문 지원 등도 포함
- (재원규모) 전체 재원 12억 유로 중 1억 5천 만 유로는 무상원조, 10억 유로는 양허성 차관 형태로 지원
- (목표) 1) 지역 역학조사 네트워크 강화, 2) 아프리카 국가의 코로나19 대응에 기여, 3)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주요 프랑스 국제개발협력 행위자(NGO, 자선재단, 연구기관 등)의 코로나 19 대응 지원, 4) 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 해당 이니셔티브는 EU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다자기구의 대응을 지원·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됨

□ 국제적 차원에서, 프랑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한 다자차원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팀 유럽 하에 사하라 이남 국가를 위한 필수 물자 수송 및 유럽시민 보호, 인도적 지원 작전에 협력했으며 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협상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확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2020년도 도시개발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 ('18년 7억 700만 유로 → '19년 11억 유로 → '20년 13억 5,000만 유로) (AFD 2021b, 12)

- AFD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 전략(Sustainable Cities Strategy)’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전략 목표는 1) 도시 거주자들의 삶의 질 개선, 2)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촉진, 3) 도시 및 지방정부의 역할 및 역량 강화
- 2021년 도시개발부문 지원금액의 1/3이상에 달하는 5억 5,900만 유로가 코로나 19대응에 사용되었으며, 특히 위기지방정부를 위한 예산 지원 및 투자 등에 지원 됨 (AFD 2021b, 11)

□ 이외에도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지속가능한 도시 전략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도시 혁신랩)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를 통해 도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한 신속한 액션을 취함
- (디지털 기술) 도시 서비스 최적화와 도시 환경 개선, 위험 및 위기관리, 지역 재정 관리와 투명성 유지, 지역 경제 개발의 혁신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지원
-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자원조달과 지식 전수를 위한 지방정부, 도시계획 기관, 민간부문,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의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 3) 미국

□ 미국은 OECD DAC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공여하는 국가로 2020년 기준 350억 달러를 ODA 자금으로 지출했는데, 이는 전체 OECD DAC 회원국 공여금액의 20%에 상당하는 비중임 (OECD 2021b, 29)

- 해당 금액은 전년도 대비 4.7% 증가한 수치로, 주로 다자협력 지원확대로 인한 증액인 것으로 나타남 (OECD 2021b, 29)
- 국민총소득 대비 ODA비율(ODA/GNI)은 0.17%(OECD 2021b, 29)

- 
- 2019년 기준 미국의 주요 수원국은 1) 아프가니스탄, 2) 요르단, 3) 에티오피아, 4) 케냐 순으로, 주로 국가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와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국가안보 전략 잠정안(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의 주도하에 시행
- 현재 미국의 대외원조 우선순위는 1) 코로나19에 의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고 세계보건과 안보를 개선, 2) 기후위기의 해결, 3) 더 나은 경제기반의 구축, 4) 권위주의와 부패에 대항하며 민주주의를 재활성화, 5) 차별과 불평등 해소, 6) 글로벌 사회의 안정성 증진, 7) 약탈적 개발모델에 대한 대안 제시
- 미국은 2021년 “팬데믹의 종료, 시민과 사회를 향한 위협의 약화, 미래의 팬데믹 위협에 대한 글로벌 사회의 회복력과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코로나 19 글로벌 대응과 회복 프레임워크(COVID-19 Global Response and Recovery Framework)’를 출범
- 세부 목표로는 1)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광범위하고 평등한 접근 가속화, 2) 전염병 위협에 대한 대응 및 예방, 탐지를 포함하여 코로나 19 발병률 및 사망률 저감, 전염 완화와 보건시스템 강화, 3)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 수요 대응, 가정 내 충격 완화 및 회복력 구축, 4) 코로나 19로의 역행을 방지하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코로나 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경제 및 기타 주요 시스템을 강화, 5) 전염병 위협의 예방, 탐지,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보건 안보 시스템 강화 (The White House 2021, 4)

표 2-9 | 미국의 코로나19 글로벌 대응과 회복력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목표	실천방안
1.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광범위하고 평등한 접근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19 백신 투여를 위한 포괄적 준비 지원, 백신 접종 대상 인구의 백신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보장하고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li> <li>• 코백스(COVID-19 Vaccines Global Access: COVAX)와의 협업을 통해 백신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자금조달, 적시제공을 확대</li> <li>• 백신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효과성 모니터링 및 평가</li> </ul>
2. 전염병 위협에 대한 대응 및 예방, 탐지를 포함하여 코로나 19 발병률 및 사망률 저감, 전염 완화와 보건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19 및 사스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제고</li> <li>• 코로나 19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정책 지원</li> <li>• 증거기반 임시적 개입을 지원하고 코로나 19를 감지, 관리, 치료하기 위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li> <li>• 대응 및 투자 타겟팅을 통해 주요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악영향을 저감하고 보다 폭넓은 보건수요와 미래의 생물학적 위협에 잘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통합 보건 시스템 구축</li> </ul>
3.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 수요 대응, 가정 내 충격 완화 및 회복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한 인도적 요구에 대응하고 기근을 방지</li> <li>• 식량부족과 영양실조 저감</li> <li>• 보다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경제적 구제 제공</li> <li>• 아동 및 청소년이 안전하게 학습 환경으로 돌아가 교육의 혼란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li> <li>• 젠더 폭력을 방지하고 아동을 포함한 취약 그룹의 보호 촉진</li> </ul>
4. 코로나 19로의 역행을 방지하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코로나 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경제 및 기타 주요 시스템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채 탕감 노력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li> <li>•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외여행 및 관광 지원</li> <li>• 인간안보를 개선하고 취약한 상황에서의 분쟁 방지</li> <li>• 팬데믹에 의해 악화된 주요한 거버넌스 및 인권 문제 해결</li> </ul>
5. 전염병 위협의 예방, 탐지,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보건 안보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성 질병 위협에 대한 조정된 대응을 포함한 핵심적 보건안보역량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li> <li>• 지속가능하고 촉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보건 안보 금융 메커니즘 개발</li> <li>• 세계보건 안보를 위한 국제적 준비 및 거버넌스 체제 강화</li> <li>• 세계보건기구(WHO) 및 보건 안보에 중요한 유엔 시스템의 강화 및 개혁</li> <li>• 전염병 및 기타 생물학적 위협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과학연구와 관련한 국제적 협력 제고</li> </ul>

자료: The White House 2021을 토대로 저자 정리.

- 특히 세부목표 5와 관련하여 1) 감염성 질병 위협에 대한 조정된 대응을 포함한 핵심적 보건안보역량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 2) 지속가능하고 촉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보건 안보 금융 메커니즘 개발, 3) 세계보건 안보를 위한 국제적 준비 및 거버넌스 체제 강화, 4)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보건 안보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유엔 시스템의 강화 및 개혁, 5) 전염병 및 기타 생물학적 위협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과학연구에 대한 국제적 협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하고,

- 
- 부문별 세부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인도주의, 다자주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다양성과 평등, 포용성 등 범분야적 고려를 강조
- 미국의 대외원조 실시기관인 USAID는 이러한 정부의 글로벌 코로나 19 대응 방침에 따라 국무부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와 협력하여 120개 협력국에 대한 코로나 19 대응 지원을 제공
- 주로 협력국 내 긴급 구조, 보건시스템 강화, 백신의 준비와 공급, 공공보건교육 개선, 보건인력과 시설보호에 집중된 지원 제공
  - (백신의 공급) 20억 달러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지원하여 92개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백신 구입과 공급에 지원 (USAID 웹사이트)
  - (American Rescue Plan) 국무부와 공동으로 110억 달러를 투입하여 긴급한 인도적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코로나 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에이즈 등 기타 전염병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을 지원
  - (코로나19의 2차적 피해 방지)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 중단, 민주주의 침해, 식량안보의 위협 등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
- 2021년 7월 기준 USAID의 코로나 19 대응 지원금액은 약 14억 5,900만 달러에 달함 (USAID 2021a; USAID 2021b; USAID 2021c; USAID 2021d)
- 지역별로는 유럽 및 유라시아에 1억 330만 달러,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2억 3천만 달러, 중남미에 4억 8,235만 달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6억 4300만 달러를 지원
  - 1)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 보급, 2) 전염률 감소, 전염 완화 및 의료시스템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즉각적 수요 대응, 3) 경제 및 기타주요 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국가별로 맞춤형 기금 지원

표 2-10 | USAID 코로나 19 대응 자금 (2021년 7월 기준)

지역	구분	지원금액 (달러)	합계 (달러)
유럽 및 유라시아	USAID 인도적 지원국	10,000,000	103,313,132
	USAID 개발 민주주의 혁신국	10,000,000	
	USAID 유럽 및 유라시아국	27,000,000	
	USAID 글로벌보건국	56,313,132	
중동 및 북아프리카	USAID 인도적 지원국	201,730,501	230,533,001
	USAID 글로벌보건국	16,865,000	
	USAID 중동국	11,937,500	
중남미	USAID 인도적 지원국	292,820,990	482,355,157
	USAID 글로벌 보건국	115,393,596	
	USAID 중남미국	74,140,57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USAID 아프리카국	32,800,000	642,563,447
	USAID 인도적 지원국	433,857,883	
	USAID 글로벌 보건국	175,905,564	
합계 (달러)	14억 5천 9백만 달러		

자료: USAID 2021a; USAID 2021b; USAID 2021c; USAID 2021d.

□ 다른 주요 공여국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또한 코로나 19대응과 녹색 회복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USAID) <sup>22)</sup>

- 2021년 11월 USAID는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를 공공 및 민간 기후 재원에 활용할 계획을 발표
- USAID의 공공부문 투자 1달러당 민간부문 자금 10달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 실행 계획을 수립

□ 특히 녹색회복투자 플랫폼(Global Recovery Investment Platform: GRIP)의 출범을 통해 25억 달러의 민간재원 운용을 위한 자금 2,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sup>23)</sup>

- 해당 자금은 2027년까지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리스크 경감과 인센티브 지급에 활용될 예정임

22) 출처. <http://usaid.gov/news-information/press-release>, 2021년 11월 29일 접속

23) <http://usaid.gov/news-information/press-release>, 2021년 11월 29일 접속

- 
- 또한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와 협력하여 탄소기금을 통한 2,500만 달러 상당의 대출 보증을 지원해 농업, 보건, 물 및 기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핵심 부문 혁신과 회복력 증진에 기여할 계획임

#### 4. 국제사회 코로나19 대응 정책동향의 시사점

□ 코로나19 이후 도시의 회복력 및 재난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도시부문 개발협력 지원은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주요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도시부문 및 지방정부를 감염병 위기 대응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주요한 정책의 시행단위로 다루고 있음
  - 코로나19 긴급 지원 등의 단기적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지원이 거듭 강조 됨
  - OECD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서비스·인프라 접근성 제고, 공공공간 및 녹지공간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 디지털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도시의 디지털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압축적인 도시개발의 중요성 등을 강조
  - UN-HABITAT 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를 위한 도시공간데이터의 수집, 분석, 가공 등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 툴 제공 등의 지원방안을 강조
  - UNDP는 스마트 시티를 중심으로 한 도시회복력 강화 및 도시의 디지털 전환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협력 틀의 5개 집중분야의 하나로 설정
  - 세계은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도시 위험 및 재해관리방안으로 도시차원의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강조
  - 아시아 개발은행은 코로나19 대응전략을 “살기 좋은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한 통합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환경개선에 집중. 디지털 기

---

술을 활용한 도시서비스와 인프라 개선,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및 역량 강화, 전염병 및 기후변화에 대응가능한 회복력 있는 도시건설을 목표로, 기존 도시부문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계획

- 공통적으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에 있어서의 도시단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도시정부의 역량강화와 디지털화를 강조함
  - 취약계층 및 취약 공간에 대한 우선적 대응과 투자 집중 강조
  -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인프라 활용을 통한 도시 서비스 접근개선과 생산성 증대
  -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도시단위의 중요성 및 도시정부의 역량강화의 필요성 강조

□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ODA 공여액이 증가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부문의 정책동향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이 위기 초기에는 증액보다는 기존 사업 및 예산을 재구조화 하는 방향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별 전략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는 경향을 보임

- 기존 사업 및 예산의 재구조화는 코로나 19확산 초기 대응 시간 및 위기 분석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줌

□ 위기상황에서 주요 공여국들은 주로 1)최빈국과 2) 전략적 중점협력국에 집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향을 보임

- 2020년 최빈국 및 중위소득 국가에 대한 ODA가 증가한 반면, 저소득국가에 대한 ODA는 소폭 감소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는 한정된 자원 범위 내에서 보다 효과적인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임

---

□ 주요공여국들은 공통적으로 인도주의와 다자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독일, 미국의 경우 국토·도시 부문의 개발협력 차원에서, 구체적인 코로나19 대응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프랑스는 프랑개발청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한 「지속가능한 도시전략」에 따라 코로나19 이후에도 도시부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2021년 도시개발부문 지원금액의 1/3이상이 코로나 19 대응과 위기지방정부를 위한 예산지원 및 투자 등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의 위기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및 공동대응의 입장 외에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부문에 주는 구체적 시사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음





CHAPTER 3

##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개발협력부문의 정책대응

1. 코로나19 확산의 국내 영향 및 국제사회 위상 변화 ... 61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개발협력부문  
정책 동향 ..... 64
3.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대응 현황 ..... 66
4. 코로나19로 인한 개발협력사업의 추진방식의 변화 .... 80



---

## 03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개발협력부문의 정책대응

본 장에서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대응한 우리나라 개발협력부문의 정책동향을 분석한다. 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수출입은행 등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을 다루는 주요 정부기관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동향을 검토하고, 코로나 19 이후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부문에 나타난 추진방식과 전략의 변화를 분석한다.

### 1. 코로나19 확산의 국내 영향 및 국제사회 위상 변화

- 코로나19의 경제·사회적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19년 2.2%에서 2020년 -0.9%로 하락하였으며(통계청<sup>24</sup>), 코로나19 보건의료 위기, 경제위축 및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재정여건이 악화됨(관계부처 합동 2021, 7)
  - 2020년 12월 기준 재정적자가 59조 2천억 원으로 증가(전년동월 대비)하며 최악의 재정수지 상황을 보였으나, 2021년 7월 기준 54조 9천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점차 축소되며 재정수지 개선세를 보이고 있음<sup>25</sup>)
- 재정여건 악화가 ODA 예산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차관 지원 등을 통해 ODA 예산을 확대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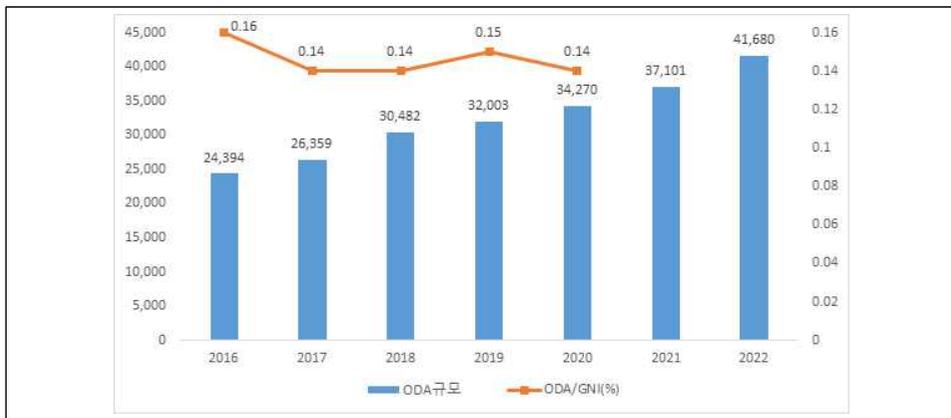
---

24) 통계청 홈페이지. 연간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111Y002&checkFlag=N](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111Y002&checkFlag=N) (접속일: 2021년 9월 9일)

25) CBS노컷뉴스. 2021. 재정수지 개선세 뚜렷...기재부 "재정 선순환 가시화". 9월 9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622029> (접속일: 2021년 9월 9일)

- 2021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보고서’ (관계부처 합동 2021)에 따르면 '21년 ODA 규모는 전년대비 8.3% 증가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 및 보건의료 긴급차관 등을 통해 5.7억 달러 규모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UN, OECD, GCF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그림 3-1 | 우리나라 ODA 규모 증가(2016~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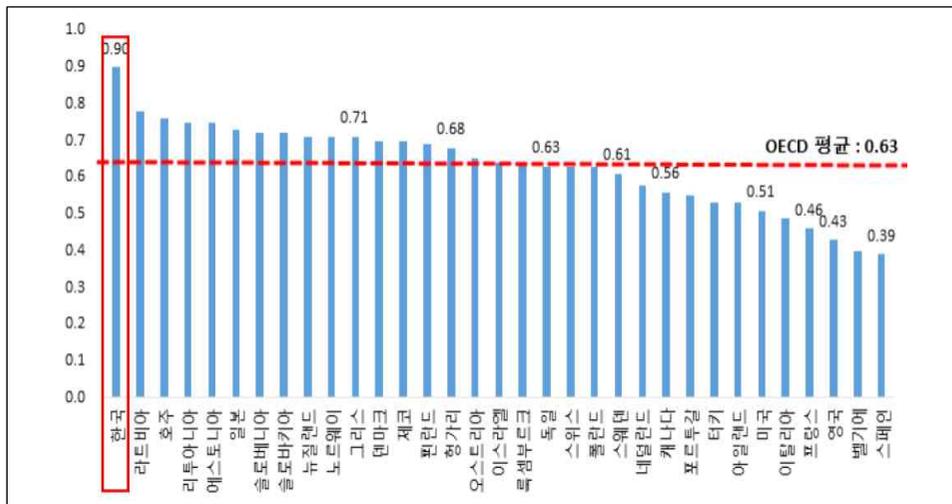


주: 2022년도 ODA는 요구액 규모이며, 나머지는 확정액 규모임.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1.

- 한편,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코로나19 초기대응 경험으로 개도국의 보건 취약성 해소와 경제·사회 복원력(resilience) 회복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에 있어, 우리나라의 글로벌 역할 확대가 요구 됨
-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약 100일간 외신의 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이미지는 초기 ‘최대발병국’이었으나 확진자 수가 급감한 '20년 3월 이후부터 K-방역 모델의 공유와 확산으로 변화함(해 외문화홍보원 2020)
  - 외신은 한국의 방역전략을 다루며, 한국정부의 과감한 위기대응 관리, 의료시스템의 선진성,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국가와 시민사회의 신뢰와, 투명성, 신속성,

혁신, 효율성 등의 가치를 K방역의 주요 성공요인들로 거론함. K-방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그동안 저평가 되어왔던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재평가되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 한국정부는 포용적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협력을 통해 전 세계적인 위기극복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음

그림 3-2 | OECD 회원국별 코로나 초기대응 효율성 순위: 코로나 대응지수



주: '20년 3월 4일~5월 12일 데이터 바탕, OECD 회원국 중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등 중남미 중소득국, 데이터가 미비한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33개국 국가의 효율성 지수화.  
 자료: 정지선, 유애라 2020: 9.

- 달라진 국제사회의 평가와 한국의 위상을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글로벌 위기 극복에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함
-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개발협력부문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

##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개발협력부문 정책 동향

- 정부는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7.8.개최)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심의·의결 함(국무조정실 2020; 박세훈 외 2020)
  -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1. 7. 7)에서는 ICT와 ODA를 융합한 디지털 뉴딜 ODA와 정부-시민사회-기업을 연계한 패키지사업 발굴을 중점 추진하기로 함
- 2021년 수립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포용과 상생하는 ODA를 강조하며, 코로나19 등의 글로벌 보건 위협 대응 강화와 녹색전환 선도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함
- 2022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준비하며, 코로나19 극복 집중 및 인도적 지원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 선도'를 내년도 전략과제로 선정하며, 보건 분야 및 인도적 지원 분야에 ODA 역량을 집중하기로 함(외교부 2021a)
  - 2021년에 5년마다 수립되는 ODA 중기전략인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글로벌 감염병 등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한 한편, ODA 중점협력국 및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재조정을 검토하고,
  - 2021년 6월 기준 '코백스 선구매공약 매커니즘(COVAX AMC)<sup>26)</sup>'에 1억 달러를 공여하고 및 내년에 1억 달러 상당의 현금 및 현물을 추가 제공하는 것을 약속<sup>27)</sup>한 바 있음

---

26) COVID-19 Vaccines Advance Market Commitment (COVAX AMC)는 백신 구매가 어려운 92개의 저개발국가들이 선진국의 공여자금으로 백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선구매공약 매커니즘임(Gavi 홈페이지 <https://www.gavi.org/gavi-covax-amc>) (접속일: 2021년 9월 9일)

27) 2021년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 대상 코로나19 백신 지원 계획의 일환임(NEWSIS. 2021. 외교부 내년 예산 3조원...ODA 처음으로 1조원 넘어. 9월 1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31\\_0001566700&clD=10301&plD=103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31_0001566700&clD=10301&plD=10300)) (접속일: 2021년 9월 9일)

---

□ 국제사회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총 97개국 대상 9,400만 달러 규모 지원 추진 및 거점국가 대상 코로나19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글로벌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다자외교를 강화함(관계부처 합동 2020)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총 97개국 대상 9,400만 불 규모의 양자간 현물(진단키트, 마스크 등 방역물품)·현금 지원 및 보건의료 긴급차관(EDCF 4억 불) 지원을 추진함(관계부처 합동 2020)
- 지역 거점 국가(인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우즈벡)ASEAN ODA 지원대상국 및 기구 대상 총 36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함
-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기구 차원의 다양한 우호그룹이 출범하였으며, UN 보건안보 우호국그룹(‘20.5), WHO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20.5), UNESCO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국그룹(‘20.5) 등이 출범함
-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서울 정상회의(‘21.5, 서울), G7 정상회의(‘21.6, 영국) 등을 통해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을 주도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녹색전환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 화두로 대두되면서(한국수출입은행 2021),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그린분야 ODA 비중을 OECD DAC 평균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을 수립(외교부 2021a)

-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 재건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전염성 질병(Ebola, SARS, MERS, Zika, COVID-19 등)에 대한 경각심 및 위기의식 증대함
-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악영향을 막고 석유에 의존하는 현재의 에너지 사용을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기반으로 변경하기 위한 ‘그린뉴딜(Green

---

New Deal)' 이 많은 국가에서 주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정책 안에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골자로 하는 그린뉴딜을 포함시킴
- P4G 서울 정상회의 이후 현재 그린분야 ODA 지원 비중 19.6%('15~'19년)을 '25년까지 28%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GCF 공여, GGGI 그린 뉴딜 신탁기금 신설, P4G 공여 등 국제사회 녹색전환 모멘텀에 기여할 예정임
- 특히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개도국 수요가 크고 기술적 강점이 있는 분야에 중점 지원할 계획임

### 3.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대응 현황

#### 1) 코로나19 이후 주요 정부기관별 ODA 현황

- 코로나19 이후에도 총 ODA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음. '21년 3조 7,101억 원으로 '20년 대비 2,831억 원(8.3%) 증가함(관계부처 합동 2021a)
  - 코로나 이전 시기인 '19년도와 비교하여 총 ODA 증가율이 3.3%p 증가함. '19년도 증가율은 5.0%, '20년 7.1%, '21년도 8.3%임(관계부처 합동 2021a)
- 코로나19 이후에는 교통 및 보건 분야의 ODA 사업 수가 다소 증가(1.7%p)하였음. '20년에는 교통(13.6%), 교육(10.4%), 보건(10.0%) 순으로 사업 규모가 컸으나 '21년 기준 교통(15.3%), 보건(11.7%), 교육(9.9%) 순으로 교통과 보건부문의 비중이 증가함(관계부처 합동 2021a)
- 우리나라 총 ODA 규모는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증가하였으나 신규 사업 규모는 감소함. '21년 신규 사업 규모는 '20년 대비 1,126억 원 감소하였으며, 사업 수는 64개 감소, 신규 사업 예산 비중은 4.7%p 감소함(관계부처 합동 2021a)

- 주요 유무상 ODA 협력을 수행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한국수출입은행 5개 기관의 ODA 현황(2019~2021)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관계부처 합동 2019, 2020, 2021a)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발생('20.1.) 이전 시기인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각 기관별 ODA 예산 규모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소폭 감소함(관계부처 합동 2019, 2020, 2021a)
  - 대부분의 기관별 총 사업수 또한 '19년도와 비교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다자협력이 팬데믹 이후 증가폭이 크게 확대함(관계부처 합동 2019, 2020, 2021a)
  -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위기가 국제사회에 확산되며 개발협력 여건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ODA 공여국으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글로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ODA 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보임

표 3-1 | 주요 정부기관별 ODA 현황(2019~2021)

(단위: 억 원)

구분	2019				2020				2021			
	양자 유무상	다자	합계	사업 수	양자 유무상	다자	합계	사업 수	양자 유무상	다자	합계	사업 수
기획재정부*	11,982	1,332	<b>13,314</b>	263	12,633	1,590	<b>14,223</b>	283	13,374	2,560	15,934	309
수출입은행**	11,412	-	11,412	156	1,1849	-	11,849	161	12,582	-	<b>12,582</b>	171
외교부	9,048	1,023	<b>10,071</b>	612	10,733	1,248	<b>11,981</b>	694	10,668	1,656	<b>12,324</b>	757
KOICA	7,196	-	7,196	559	8,454	-	8,454	637	8,537	-	8,537	699
국토교통부	155	2	157	12	257	1	<b>258</b>	22	226	1	227	28
<b>총 계</b>	<b>21,185</b>	<b>2,357</b>	<b>23,542</b>	<b>887</b>	<b>23,623</b>	<b>2,839</b>	<b>26,462</b>	<b>999</b>	<b>24,268</b>	<b>4,217</b>	<b>28,485</b>	<b>1,094</b>

주: \*기획재정부는 양자유무상협력을 모두 시행함.

\*\*수출입은행은 양자협력 중 유상협력(EDCF)만 시행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 2020, 2021a)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작성.

---

## (1) 기획재정부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 주요 대응

-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액션플랜」 마련과 저소득국 부채 취약성 문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세계 경제전망, IMF 지원기능 확충 방안 등 관련 논의를 위해 G20 특별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와 화상회의('21. 2월, '20. 4월)를 개최(기획재정부 2020b, 2021c)
  - G20 액션플랜은 방역과 경제를 모두 포괄하면서 5대 과제로 ①방역대응, ②경제대응, ③국제금융 등 단기과제와, 코로나19 종식이후의 ④지속성장 회복, ⑤미래준비의 중장기과제를 제시하고, 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 확대 및 미래 팬데믹 위험 모니터링 강화,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등 총 40개 행동계획 포함함(기획재정부 2020b)
  - 2021년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21. 9)에서는 코로나 시대 거시경제 위험 요인, 국제금융시장 영향과 대응, 포스트 코로나시대 국제금융시장 미래와 전망 등을 논의함(기획재정부 2021)
-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20. 4)을 통해 IMF의 위기대응 패키지를 발표하였고(기획재정부 2020e), 최빈국 및 취약국 지원을 위한 기금 공여를 촉구하고, 중미지역 인프라·에너지 분야 투자관련 지역다자개발은행인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이사회(화상회의)에서 한국 지역사무소를 신설을 결정함('20. 3)(기획재정부 2020d)
-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유관부처·기관 및 국제기관·기구와 정책협의회, 컨퍼런스 및 포럼 등 개최함
  - 코로나19 초기 국제교역환경 악화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확대 및 국제공조 선도 노력 방침 세우고,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여건 개선을 위해 경제장관회의 및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응전략을 논의함(기획재정부 2020a)
  - 또한, 미국 행정부, 워싱턴 주요 연구소, 세계은행과 코로나19 대응 방안관련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화상 컨퍼런스를 개최('20. 4)하는 등 세계적 위기 상황에 국제사회와 공동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함

- 포스트 코로나시대 디지털관련 이슈 대비를 위해 ‘2021 디지털이코노미포럼’('21.8)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디지털 혁신기술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함(기획재정부 2021a)
-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대응 ‘K-방역’을 활용한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개발은행(IDB)과 총 5,300만 달러(EDCF 협조용자 5,000만 달러, 한국 신탁기금 300만 달러) 지원 추진함(기획재정부 2020c)
  - EDCF-IDB 협조용자 지원은 파라과이 정부의 긴급 지원 요청에 따라 ‘K-방역’의 우수사례 공유 및 보건·의료, ICT 기반 역학조사, 자가격리 시스템 등과 관련한 협력 확대 계획함
  - 한국 신탁기금은 보건·의료, 헬스 및 바이오테크분야 스타트업 기술, 우루과이 원격교육 등을 지원함
  - '21년 8월 IDB와 협조용자 협정 체결을 통해 협조용자 한도 5억 달러, 2025년까지로 체결함. 기후변화 대응, 정보통신(ICT), 민관협력사업(PPP) 등으로 지원 분야 확대함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신기술 실증, 공공조달 연계 등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인 ‘K-테스트베드’ 출범을 추진함(기획재정부 2021b)
- 기획재정부는 '21년도 유상협력 분야에서 개도국 민간부문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교통, ICT 기반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분야별로는 교통(32%), 수자원 및 위생(17.3%), 보건(13.5%) 순으로 협력을 추진함(관계부처 합동 2021a)

## (2) 한국수출입은행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 주요 대응

- 코로나19 글로벌 위기 대응 및 K-방역 해외진출을 위해 EDCF 지원
  -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단계에 한국국제의료제단과 함께 개도국에 대한 보건의료분야 원조사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함. 개도국에 병원건립, 의료기자재 공급, 보건·의료시스템 도입 등 인프라 사업에

- 
- EDCF를 지원하고, 한국국제의료재단은 사업발굴 지원, 운영관리 및 역량강화 등에 기술협력을 하기로 함(한국수출입은행 2020b)
-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중미 5개국(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에 5,000만 달러의 EDCF를 제공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하여, 중미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지원(한국수출입은행 2021b)
  - EDCF 중점협력국 중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5개 개도국(라오스, 캄보디아,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에 방역장비, 진단키트 등 한국산 방역물품 3억 5천만 원 상당을 지원(한국수출입은행 2020d)
  - 아프리카 지역 코로나19 긴급대응 및 K-방역 진출을 위해 에티오피아에 EDCF 7,000만 달러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하였고, K-디지털 진출 지원을 위해 아프리카 튀니지 토지관리 인프라 혁신을 위한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EDCF 6,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한국수출입은행 2021c)
  - 신북방정책 중점국가 중 우즈베키스탄에 타슈켄트 종합병원 건립사업 1억 2,000만 달러, 화학 R&D센터 건립사업 4,000만 달러 등 총 1억 6,000만 달러의 EDCF를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한국수출입은행 2021d)
- 전문 기관들과의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 수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신남방 주요국의 산업 및 인프라 현황과 진출전략’ 세미나(’21. 9)를 개최하여 신남방 4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진출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 수요발굴과 전략도출을 논의함(한국수출입은행 2021e)
    - 또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전환시대 대외경제협력과 개발협력’ 주제로 서울대학교 한국개발정책학회와 온라인 컨퍼런스(’20. 12)를 개최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개도국의 보건·경제 위기 극복과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발협력을 논의함(한국수출입은행 2020f)
  - 펀드 조성 및 제도 도입
    - 국내기업의 K-뉴딜 분야 해외진출과 ESC(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투자 확대를 위해서 2,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여, 포스트 코로나시

대 국내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촉구하고, K-뉴딜 사업을 중점 지원하기로 함(한국수출입은행 2021g)

- EDCF 지원 외에도 수은은 코로나19 위기 속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글로벌 별편드를 조성함. 국내 진단기술, 의료시스템, ICT 기반 예측 모델 등을 활용한 감염병 대응 분야의 글로벌 투자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4,000억 규모(수은 출자액 750억 원 내외)의 ‘글로벌 바이오헬스-K 펀드’를 조성하여, 보건의료, ICT 융합,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함(한국수출입은행 2020c)
- 또한, 해외진출을 타진하는 국내기업이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 소요되는 용역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함. 해외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시장조사 및 입찰 사전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지원 제도는 크게 1) 해외 대형 투자개발형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비용 지원과 2)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시장조사 및 입찰 사전준비에 필요한 외부용역비용 지원 두 가지로 구분됨 (한국수출입은행 2020e)

표 3-2 | 한국수출입은행 국내기업 사업타당성조사 용역비 지원 제도

구분	F/S지원	조사·입찰 지원
지원대상 사업	우리 기업이 '사업주'로 참여하려는 해외사업	우리 기업이 참여하려는 해외사업
지원대상 기업	수은 여신 잔액이 있는 모든 기업	수은 여신 잔액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수출형 혁신성장사업은 비고객도 가능)
지원내용	F/S (Pre-F/S 포함) 용역비용	사업 조사·분석 또는 입찰 사전준비 등에 소요되는 외부용역비용 일부 지원
용역기관 선정	수은 선정	기업 선정
지원 비율	소요비용의 100%	중소기업: 소요비용 70% 중견기업: 소요비용 5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20e.

#### • 업무협약(MoU) 체결

- 스마트시티 분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해외 스마트시티·인프라 개발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ODA사

---

업과 투자개발사업의 유기적 연계,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은 금융 활용, 유망 사업의 발굴 및 개발협력 등이 주요 협약 내용임( '20. 6)(한국수출입은행 2020f)

- 신남방·신북방 신흥시장 진출 및 신사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하나은행 및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금융지원을 확대 추진함
- 수은은 국제금융공사(IFC)와 개도국 사업 공동 발굴과 금융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남방·신북방 등 개도국 사업 공동발굴 및 협조용자 지원, 신흥시장 사업개발 등과 관련하여 협력을 강화함

### (3) 외교부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 주요 대응

- 코로나19 발생 초기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보호와 국내 외국인 환자 발생시 주한 외국대사관 협력을 지원하고,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중심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 24시간 대응 체제를 구축함<sup>28)</sup>
-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외교부는 귀국 지원 임시 항공편 및 화물기를 운영, 코로나19가 심각한 국가에 긴급 의료·구호물품(마스크, 방호복, 보호경, 소독기 등)을 조달하고, 재외동포재단과 45개국 162개 동포단체 대상 약 7억 3천만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실시함(외교부 2020c)
-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한-WHO 협력 강화(외교부 2020a), 유엔개발계획(UNDP)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외교부 2020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외교부 2020b), 전 세계 국가들과 장관급 면담(온-오프라인),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출범 등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함<sup>29)</sup>
- 포스트코로나 시대 녹색 거버넌스와 리더십 강화를 위해 ‘기후행동을 위한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 ( '20. 12)을 개최하고(외교부 2020e), 산림청과 함께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출범을 주도하고(외교부 2020f), 한-아세안

---

28) 외교부 보도자료 사이트. [https://www.mofa.go.kr/www/brd/m\\_4080/list.do](https://www.mofa.go.kr/www/brd/m_4080/list.do) (접속일: 2021년 9월 12일)

29) 외교부 보도자료 사이트. [https://www.mofa.go.kr/www/brd/m\\_4080/list.do](https://www.mofa.go.kr/www/brd/m_4080/list.do) (접속일: 2021년 9월 12일)

---

(ASEAN)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신설함(외교부 2020g)

- 또한, 아포티유 인증서 발급, 여권 재발급 신청, 무료 해외 영사콜센터 운영, 온라인 상담서비스 제공 등 영사민원서비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수집 자료 융합, 재외공관 전용망 속도 개선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축 추진함(외교부 2021b)
- 외교부는 '21년 무상협력 분야에서 아시아 중점 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신북방 비중을 확대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임(관계부처 합동 2021b)

#### (4) KOICA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 주요 대응

- KOICA는 신남방 ODA 5대 중점 프로그램 등 핵심 프로그램(디지털 동반 관계, 고등교육 이니셔티브, 농촌개발, 도시개발, 교통) 중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함(총 8,587억 원, 699개 사업 추진)(관계부처 합동 2021a, 2021b)
- 개도국의 코로나19 긴급지원을 위해 중점협력국 위주로 긴급물품 지원,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ODA Korea: Building TRUST)' 전략 운영 및 상기 전략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회복 지원 프로그램인 'ABC 프로그램(Agenda for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OVID-19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을 운영함(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 ABC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종합 대응 병동 구축 450만 불 지원 및 코로나19 검사기, PCR키트, 인공호흡기 등을 공급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의료 기자재 지원, 컨설팅, 민관협력 사업 등을 추진함
  -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의 일환으로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와 7개국(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1,769만 달러 규모 방역·의료물자 지원(한국국제협력단 2020b), 이를 통해 유엔 긴급조달 사전 입찰 자격을 획득해 K-방역관련 국내기업의 국제조달 시장 진출 지원을 계획함

- KOICA, 베트남 유엔인구기금(UNFPA), 호주, 일본과 베트남 여성들을 위한 코로나 대응 존엄키트 14만 달러 공동기금을 조성함(한국국제협력단 2021e)
- 에티오피아 직업기술교육훈련 관리자 및 교사 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교육관계자 약 7,000명에게 마스크 2만 장,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지원함(한국국제협력단 2021m)
- 코이카-튀니지 연수생 동창회, 튀니지 공항공사 및 철도청에 1.5만 달러 상당의 코로나19 대응 물품을 지원함(한국국제협력단 2021f)
- 볼리비아 라파스 주(州) 6개 도시 학교 대상으로 방역물품 17,700개, 세수대 6대 등을 지원하고 감염예방 캠페인을 진행함(한국국제협력단 2021l)
- 베트남 지역사회 취약계층 환자 및 의료진 대상 2만 달러 상당 긴급물품 지원(한국국제협력단 2021k) 및 네팔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위한 산소발생기 378대를 지원함(한국국제협력단 2021n)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위기 관련 국제사회와 개발협력 향후 과제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
  - 외교부와 KOICA ‘지식공유를 통한 보다 나은 회복 - 복원력 있고 환경 친화적이며 포용적인 개발’ 주제로 제14회 서울 ODA 국제회의 개최(’21.9)함. GGGI, UNICEF, WHO, UNICEF, OECD DAC 등이 참여하였으며, 국제사회가 당면한 감염병, 기후위기, 디지털격차 등 범지구적 도전과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한국국제협력단 2021o)
  - 제1차 믹타(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 MIKTA) 개발협력기관 고위급회의(’21.1.29)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협의회 발족을 기념하고 회원국 간 공동협력 의지를 표명(한국국제협력단 2021b)
- KOICA는 코로나19 이후 개도국 대상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전면 온라인 연수로 전환하였으며, 최근 글로벌연수사업 비대면 연수사업 추진 설명회를 웨비나(’21.3) 형식으로 개최하였고(한국국제협력단 2021g), ‘한국형 감염병 대응 마스터 클래스’ 온라인 교육을 다국어(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운영함(한국국제협력단 2021h)

---

- 포스트 코로나시대 디지털 전환 본격화를 위해서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컨설팅(PwC 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해, 온라인 연수, 원격 봉사활동(e-volunteering) 진행(한국국제협력단 2020c)

- 개도국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MoU)('20.8)을 체결해 스마트·인프라 분야 협업 강화를 목표로함. KOICA의 ODA 사업과 LH 투자개발 사업 간 유기적 연계방안 모색하고, 개도국 도시 분야 현황 및 계획 정보 공유, 주요 ODA 협력국의 스마트시티·인프라 분야 사업 연계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함(한국국제협력단 2020a)
- 감염병 대응,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정부정책 연계하여 개도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비창업가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을 운영·추진함(한국국제협력단 2021d)
- KOICA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주도 친환경 재건을 위한 위기대응 사업을 2024년까지 진행하며, KOICA에서 560만 달러 지원함(한국국제협력단 2021j)
- '2021-2022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일환으로 개도국 소셜벤처 대상 임팩트 투자를 통해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가치 실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 ESG 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ESG 실현방안 모색 기업을 공모를 통해 발굴 및 금융투자 지원함(한국국제협력단 2021i)

## (5)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 주요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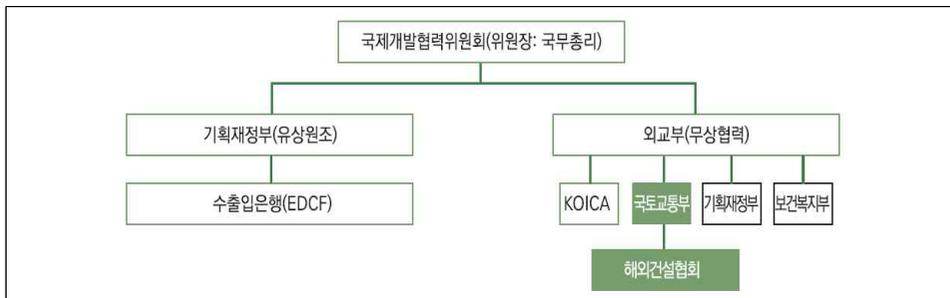
### □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 현황

- 국토교통부의 ODA 사업지원은 인프라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수원국의 효과적 인프라 구축 지원 및 후속 연계사업에 국내기업의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함(국토교통부 외 2021)

- 2013년 27억 원 규모였던 것이 2020년 257억 원으로 8년 만에 10배 수준으로 대 폭 확대되었음(누적 28개국 884억 원)
- ODA사업 분야별로 교통(57%), 도시(20%), 수자원(11%), 공간정보(10%) 순이며, 지역별로는 동남아(47.7%), 중남미(21.6%), 아프리카(13.6%) 순으로 추진 (국토교통부 외 2021)
- 사업 유형별로는 마스터플랜(MP) 수립 지원 위주였으나 2018년부터 프로젝트 유형을 신설하여 공동연구·기술이전 등을 본격화함. 유형별 사업수는 개발컨설팅(MP) 60건 및 프로젝트 28건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토교통 ODA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속적 수요 증가에 따라 전략적 사업기반 마련 및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를 ODA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ODA 업무를 수탁함('21. 2)\*

\* 해외건설협회 내 ODA 위탁업무 전담부서로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신설 운영함<sup>30)</sup>

그림 3-3 | 국토교통부 ODA 전담기관(2021)



자료: 국토교통부 외 2021, 96.

- 코로나19 이후 국토교통부의 경우 전체 ODA 규모는 '20년 258억 원에서 '21년 227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사업수는 전년도 대비 6개 증가(22개 → 28개)함. 우리나라 전체 ODA(약 3.7조 원) 중 0.6%의 비중을 보임<sup>31)</sup>

30) 이코노뉴스. 2021. 해외건설협회, '공적개발원조(ODA) 전담부서 신설.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전담기관 지정". 2월 13일자

31) OECD 공여액 기준으로 한국의 국토·도시 분야 공여액은 37%(2017)를 차지함(박세훈 외 2019)

- 또한,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올해 28개 사업 중 9개 신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도로건설, 철도개발, 노후교량 스마트 관리, 건설규정 현대화,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함
  - '20년도 기준 신규 사업이 13건 이었던 것에 비해 '21년에는 사업수가 다소 감소하였음
  - '21년도 신규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88억 원이며, '21년도 국토교통부 전체 개발협력사업(약 3조 원)의 39%를 차지함
  - 모두 양자무상에 해당하고 사업유형은 프로젝트, 개발 컨설팅 및 연수사업 총 3개로 구분됨

표 3-3 | 국토교통부 신규 개발협력사업 목록(2021)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 유형	구분	총사업 기간	총사업 예산 (억원)	'21년 예산 (억원)
1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ODA)	라오스 도로건설 및 관리기반 자립화 사업	프로젝트	양자 무상	2021-2024	55.00	15.00
2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ODA)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설립에 따른 몽골철도개발전략 수립	개발 컨설팅	양자 무상	2021-2023	30.32	10.87
3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ODA)	베트남 Quang Nam성 노후교량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역량 강화 사업	프로젝트	양자 무상	2021-2024	49.00	7.09
4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ODA)	우즈베키스탄 건설규정 현대화를 위한 기술 협력사업	프로젝트	양자 무상	2021-2021	48.00	6.00
5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ODA)	캄보디아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마스터 플랜 수립	개발 컨설팅	양자 무상	2021	11.60	11.60
6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ODA)	코스타리카 철도 마스터 플랜 수립	개발 컨설팅	양자 무상	2021	14.00	14.00
7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ODA)	탄자니아 공간정보 혁신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프로젝트	양자 무상	2021-2023	30.00	8.00
8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ODA)	페루 지속가능한 도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스마트시티계획 수립	개발 컨설팅	양자 무상	2021	9.00	9.00
9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ODA)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연수 사업	양자 무상	2021	6.40	6.40
<b>합 계</b>						253.32	87.96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a)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작성.

---

## □ 코로나19 이후 국토교통부의 개발협력 주요 대응

-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코로나19 불확실성 속에서도 '20년도 해외건설 수주액이 351억 달러로 집계되어, 최근 5년간 수주실적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국토교통부 2021a)
  - 코로나19 이후 국내 건설업체 진출전략 강화를 위해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20.6)마련, '팀코리아' 구성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통해 사업수주 규모가 '19년 대비 57% 증가함
  - 지역별 사업비율은 중동(38%), 아시아(33%), 중남미(20%) 등이고, 공종별로는 플랜트(산업설비)(53%), 토목(28%), 건축(14.3%) 등 순으로 사업비율이 높음
- 스마트시티 분야 해외사업 집중 투자
  - '20년도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해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 출범하며, 정부사업(G2G) 차원의 사업추진 동력 확보 및 사업연계 가능성 확대를 목표로하고, 국제공모 진행 및 글로벌 인프라벤처 펀드,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펀드 등과 직접 연계하여 투자함(국토교통부 2020b)
  - 국내기업의 스마트시티 분야 해외수출 위해 KIND,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4개국(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에 '스마트시티 협력 센터'를 설치함(국토교통부 2020a)
  -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국제행사 '제5회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The 5<sup>th</sup> World Smart City Expo: WSCE 2021)' 개최('21.9, 고양)(국토교통부 2021c)
- 미국 교통안보청과 코로나19 대응 항공인프라 방역, 입출국자 관리 등의 항공보안분야에서 협력 강화 협의('20.5), 양국의 항공보안체계를 분석하고 중복적 규제 완화·제거 및 무작위 검색 축소, 재검색 면제 등을 기대(국토교통부 2020c)
- 국토교통부는 파라과이 인프라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총사업비 약 5억 달러의 '아순시온-으빠까라이 경전철 사업'을 한국해외인프라도시

---

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팀코리아와 파라과이 철도공사(FEPASA)가 추진하기로 합의(국토교통부 2021b)

- 코로나19 해외건설사업의 위기 대응을 위해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1차 해외건설 수주플랫폼 회의’ 개최('21. 6). 국내기업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금융기관·기업 간 협력 강화를 도모함(해외건설협회 2021d)
- 해외건설협회는 '21. 2월부터 국토교통부 ODA 사업의 수탁 및 운영을 전담하며(해외건설협회 2021a), 다양한 해외 정부와 간담회 및 화상회의 개최<sup>32)</sup>
  - 코로나19 이후 베트남 인프라 건설시장 동향과 주요 사업 발주 계획 및 국내기업 베트남 진출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베트남 교통부 산하 PMU2(Project Management Unit 2)와 화상회의 개최('21. 5)(해외건설협회 2021b)
  - 필리핀 지역 코로나19 대면 교류 어려움을 겪는 국내기업 수주활동 지원을 위해 필리핀 교통부 및 필리핀 진출 국내기업 5개사와 화상회의 실시('21. 6)(해외건설협회 2021c)
  - 파라과이 고위급 사절단과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파라과이 상원의장과 공공사업통신부 장관 등이 내방해 회의(대면) 개최('21. 9) (해외건설협회 2021e)
- 그 외, 해외건설협회는 ‘GICC(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2020’ ('20. 12, 서울)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한국 건설 사업과 계약업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참여 하에 고위급 양자 면담, 차관 및 해외 건설협회 면담 등 총 15건의 양자 화상회의를 진행함(해외건설협회 2020)

---

32) 해외건설협회 보도자료 사이트. [http://kor.icak.or.kr/board/main\\_ko.php?bod=69](http://kor.icak.or.kr/board/main_ko.php?bod=69) (접속일: 2021년 9월 14일)

---

## 4. 코로나19로 인한 개발협력사업의 추진방식의 변화

□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내외 여건변화와 함께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우선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방식과 전략에 변화를 가져옴

□ 보건·의료 ODA 역량 집중 및 코로나19 충격 최소화를 위한 노력

- 코로나 19로 인한 보건 ODA 수요 급증에 대비, 보건·의료 ODA를 핵심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규모를 대폭 확대함
  - '20년도 보건·의료 ODA 규모가 2,773억 원이었으나 '21년 3,707억 원으로 약 33.7% 증가함(요구액 기준)(관계부처 합동 2021a)
- 증가하는 보건·의료분야 ODA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DA(경험증진자금 등)와 非ODA(수출금융 등) 자원 활용방안 모색 및 관련 제도 정비·활성화를 통해 개발협력재원의 다양화와 확대를 위해 노력함(관계부처 합동 2021a, 2021b)
- 또한, 코로나19 충격 최소화를 위하여 보건취약성, 피해규모 및 전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국을 선정하고 인도적 지원 및 보건의료사업 지원을 강화(관계부처 합동 2021a, 2021b)
- 대규모 방역물품·장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자재차관, 프로그램 차관 등을 활용한 긴급차관(Emergency Loan)을 지원(관계부처 합동 2021a)
- 웹세미나·화상회의 개최, 정책자료·동영상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하여 코로나 19 대응 관련 경험·지식 및 연구정보를 공유함
  - 코이카 산하 글로벌연수사업브랜드 CIAT(Capacity Improvement & Advancement for Tomorrow)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연수가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연수 사업추진 설명회(웨비나)'('21.3.31 개최)를 통해 온라인연수 추진 절차 및 제반지원 관련 컨설팅을 제공함(한국국제협력단 2021c)

- 
- 감염병 예방환경 조성을 위하여 코로나19 외 감염병(말라리아, 홍역, 결핵 등) 피해예방을 위한 필수 의료지원을 지속하고, 필수 의약품 및 의료시설 확보를 위해 지원함
    - 이와 관련하여 상하수도 보급 개선, 세수시설 설치 등 기초위생 인프라 구축 및 시민사회 협업을 통한 위생수칙 등 감염병 대응 인식을 제고함(맹준호 2020)

#### □ 개도국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

-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 국가 위기상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행정 ODA 사업을 지원함
- 보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지원 및 경제·복지정책 공유를 통해 경제회복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지원함
- 세계적 식량위기 발생 우려와, 난민 피해 최소화, 여성의 가정폭력 예방 등의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함

#### □ 디지털뉴딜 및 그린 뉴딜 관련 ODA 사업 추진

- 비대면 경제·문화 확산에 따라 ODA 수요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ICT 융합 디지털·그린뉴딜 ODA를 추진함
  - 교통, 물류, SOC 등 경제·사회 각 분야 ODA와 ICT를 접목하여 디지털 뉴딜 ODA 수요를 창출함
  - 원격교육체제 구축 지원 및 취약계층의 ICT 기술격차 완화 사업을 추진함
- 개도국의 경우 부처간 분절화/파편화가 심각하고 데이터 공유 문제 등이 발생함.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 확산 및 코로나19 모니터링 차원에서 공공행정의 디지털화 관련 ODA 사업 수요가 있음
- 에너지 효율화 등 친환경 요소를 가미한 그린뉴딜 ODA 지원 및 기후변화,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분야 ODA 비중을 확대함(관계부처 합동 2021a)

- 글로벌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 확대로 ODA 사업수행 전반에 있어 환경에 대한 고려(기후변화 주류화) 강화함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형 협력모델 확산

- 수원국 맞춤형 K-방역 모델을 통해 개도국의 공공의료체계, 인력·기술, 국가 재정 및 ICT 기반이 미흡한 환경에도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로 재구성함
- ‘정부-시민사회-기업’의 연계형 ODA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함
- 이동제한에 따른 사업차질에 대비하여 재외공관 및 현지 사무소의 역할이 강화되고 현지조달 확대, 인적교류 사업의 비대면화 등 추진방식을 조정함
  - 인도네시아 현지파견 수도이전협력관(자문회의 '20. 4. 22.)에 따르면,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국내와 현지 참여 기관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지 파견관의 국내기관과 커뮤니케이션 창구 역할이 중요해짐
  - 코이카 국별프로그램팀장 및 사업전략기획팀 도시부문 전문가와의 인터뷰(자문회의 '20. 4. 30)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코이카 현지 사무소의 역할 중요도와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사업지연으로 인해 추가 비용 발생으로 예산 부담이 발생함

#### □ 개발협력 주체 파트너십 강화 및 포용적 경제협력(민간참여) 확대

-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국제기구 ODA 사업 참여 확대 및 수원국 민자사업 참여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시너지를 창출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조달 촉진 및 투자계획, 건설사업 등 공동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Team Korea’ 출범('21. 2. 8). 행복청, 산림청,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한국동/서/중부발전, 대우, 롯데, 포스코, 현대 등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등 총 39개 기관·기업이 참여함(세종포스트 2021<sup>33)</sup>)
- 개발협력 주체 파트너십 강화

33) 세종포스트. 2021. 행복청,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위한 ‘팀코리아’ 출범. 신문기사. 2월 8일자

- 
- 한국국제협력단은 '13년 제68차 유엔(UN) 총회를 계기로 국제사회 공공이익 증대 기여를 위해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등 5개국 간 협의회 '믹타(MIKTA)'를 출범. 최근 '제1차 므타 고위급 화상회의'('21. 1. 29 개최)하여 코로나19 지원에 우선 협력을 위해 '믹타 개발협력기관 협의회'(MIKTA Development Cooperation Institutions Network)를 발족하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함(한국국제협력단 2021b)

#### □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현장 여건변화에 기반한 정책 방향 설정 필요성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내외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협력 방향 정립 추진방식과 전략에 변화를 취하고 있으나,
-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부문의 정책이슈와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토·도시부문개발협력 현장의 여건변화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을 모색해나갈 필요성이 있음(정윤희 2021)
-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국제개발협력현장의 여건변화를 전문가설문조사, 개발협력 관계자 간담회 및 중점협력국의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정책방향 도출의 근거로 삼고자 함





CHAPTER 4

코로나19 이후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의  
여건변화와 과제

1.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현장의 여건변화와 시사점 ... 87
2.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 사례분석결과 및 과제 ... 103



---

## 04 코로나19 이후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의 여건변화와 과제

본 장에서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대응한 우리나라 개발협력부문의 정책대응과 팬데믹이 야기한 개발협력 추진 현장의 변화와 과제를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현황분석, 개발협력 현장 여건 분석을 위한 전문가설문조사, 개발협력 부문 관계자 면담, 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특징에 따른 과제도출을 위한 중점협력국 도시개발협력 사업 사례 분석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 1.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현장의 여건변화와 시사점

#### 1) 코로나19의 개발협력사업 영향분석을 위한 설문조사결과와 시사점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의 대응조치는 개발협력 현장에 불가피한 변화를 야기함
  - 이동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봉쇄조치로, 개발협력을 위해 협력국 현장에 파견되어 있던 정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인력이 철수
  - 또한 자국에 나와 있던 인력이 현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개발협력 활동이 중단되거나 연기 됨
  - 현지에 남아 있는 경우에도 대면업무와 현지답사 등은 대부분 중단 됨

- 코로나19 이후 국제개발협력 여건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수집을 위해 개발협력사업에 종사한 적이 있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응답자는 국제개발협력 관계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NGO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전문가 POOL과 코이카 현지사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80부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중 32인이 응답함

표 4-1 | 개발협력 전문가 설문조사 설문 문항

구분	설문문항	
코로나 19 확산 이후 국제개발협력 추진 환경 변화	1	코로나 19 확산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
	2	코로나 19 확산 이후 겪은 부정적 변화
	3	코로나 19 이후 사업 활동의 지연이 있었던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연 기간, 업무가 중지/재개된 시점
	4	코로나 19로 인한 부정적 변화들과 관련해 필요한 정부지원
	5	코로나 19 확산 이후 겪은 긍정적 변화
	6	소속기관의 사업추진에 있어 코로나 19 확산의 장기적 영향 유무
소속기관 및 협력국 정부의 여건변화 대응 현황	7	소속기관의 코로나 19 확산 대응
	8	협력국 정부의 코로나 19 확산 대응
	9	소속 기관의 비대면활동기반(인터넷, 화상회의 장비 등)의 수준
	10	협력국의 비대면활동기반(인터넷, 화상회의 장비 등)의 수준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추진 관련 제언	11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추진에 있어 개선사항

자료: 저자작성.

- 응답자 중 78%는 개발협력 현장 근무 경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관련분야 경력은 7년 이상인 경우가 72%, 7년 미만인 경우 28%로, 대부분 관련분야 경력이 길고, 해외현장 근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1/3은 현재 해외현장에서 거주중임

표 4-2 | 개발협력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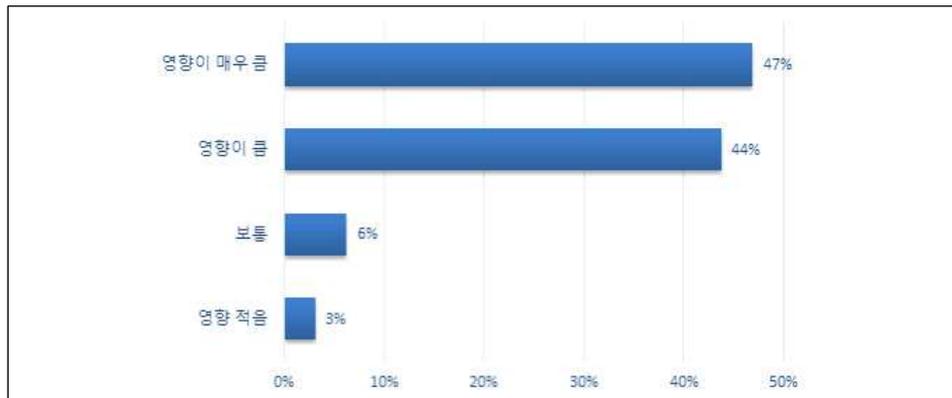
기간	2021.7.19.~ 9.8.
조사대상 및 응답자수	국제개발협력 관계기관 및 사업담당 전문가 80인에게 배포, 최종 32인 응답
응답자 전문분야	국제개발협력일반(18), 교통·인프라(3), 국토·지역계획(3), 도시(7), 공간정보(1)
응답자 현 거주지	캄보디아 프놈펜, 탄자니아 다레살람, 모로코 라바트, 르완다 키갈리, 동티모르 딜리(2), 케냐 나이로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3) 및 한국 거주
응답자 재직기관	정부부처(4), 공공기관(19), 민간기업(6), NGO(2), 특수공인법인(1)
관련분야 경력	7년 미만(9), 7년 이상~10년 미만(6), 10~15년(6), 15~20년(4), 20년 이상(7)
해외현장 근무경력	1년 미만(8), 1년 이상~5년 미만(12), 5년 이상(5)

자료: 저자작성.

□ 코로나19 확산이 개발협력 업무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 확산이 개발협력 업무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없었음. 영향이 적다 혹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9%에 불과하고, 영향이 크다 혹은 매우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91%로 대부분의 개발협력사업에 코로나19 확산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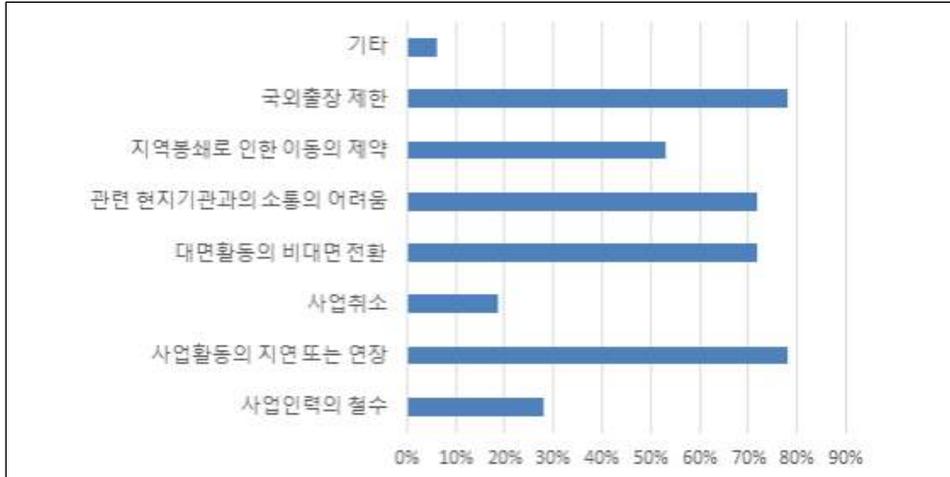
그림 4-1 | 코로나19 확산이 추진중인 업무에 미친 영향 정도



자료: 저자작성.

- 코로나19 확산이후 겪은 부정적인 영향은 복합적으로 각 개발협력사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봉쇄정책으로 인한 국외출장 제한 및 현지이동 제한, 대면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한 관련 현지기관과의 소통의 어려움. 비대면 활동으로의 전환 등은 가장 빈번한 영향이었으며, 이로 인한 사업 활동의 지연은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인력의 철수는 전체 응답의 28% 정도였으며, 사업이 아예 취소된 경우도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최소 3개월에서 무기한 연장되는 경우도 있었음. 사업이 연장될 경우 기간은 다양했는데, 3~6개월 연장 혹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대부분은 과업금액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것으로 사업수행 업체들은 이와 관련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이 중지 혹은 지연되기 시작한 시점은 대개 '20년 3월 이후로, 현지봉사단원의 경우 2020년 3월 중순 일시 귀국한 이후 현재까지 재파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중지된 사업중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한 사업들도 있었으며, '21년 하반기 업무가 재개되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중지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였음.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시점 및 기간은 상이하지만, 사업수행기간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공통점 임
- 대면접촉이 불가능해지거나, 빈도가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협력국가 및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및 소통 어려움이 증가함. 심도 깊은 정보의 취득 뿐 아니라,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중요한 사항의 최종결정 등도 지연되고 있음
- 현지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들을 현지인력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지사무소 인력은 대부분 개발협력 일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섹터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팬데믹이 장기화 될수록 전문 인력의 수급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큼
- 비대면 활동 전환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회의 빈도가 증가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회의에도 참석이 당연시 되고, 해외현지 사무소의 본부지원업무 증가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현상

그림 4-2 | 코로나19 확산이 개발협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 (복수응답)



자료: 저자작성.

- 재택근무나 원격회의의 시행이 보편화 되는데 반해, 관련 인프라 지원은 부족하여 개인 노트북과 통신 장비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음

#### □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비대면 활동 기반 수준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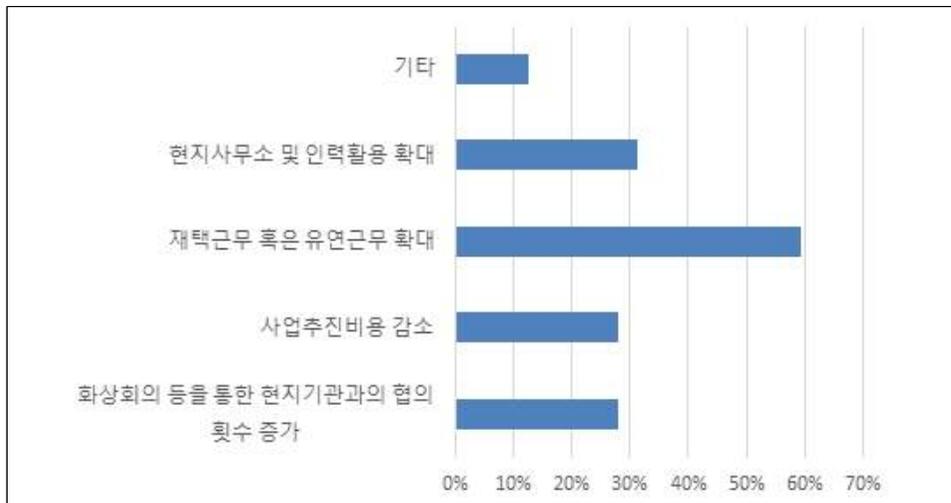
- 사업수행기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하여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2%, 매우 잘하고 있다는 10%로, 보통 이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87%에 달하였고, 미흡하다는 응답은 13%에 그쳐 국내 개발협력 수행기관의 평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음
- 또한, 국내 사업기관의 비대면 활동기반수준에 대하여는 보통이 25%, 양호(47%) 또는 매우 양호하다(25%)는 응답이 전체의 72%로, 열악하다고 한 경우는 3%에 그쳤음
- 그러나, 협력대상국가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은 미흡 또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가 50%에 달했고, 보통수준이라는 응답은 25%, 잘하고 있다는 19%,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에 불과하였음

- 협력대상국가의 비대면 활동기반 수준 또한 열악하다는 응답이 41%, 매우 열악하다는 응답도 9%에 달했으며, 양호(16%) 또는 매우 양호(6%)한 경우는 전체의 22%에 불과하였음
- 협력대상국별로 다른 비대면 활동기반 수준과 코로나19 대응역량은 코로나 19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긍정적인 변화

-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혹은 유연근무 방식의 확대(59%) 등 사업방식의 유연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현지사무소 및 인력활용 확대(31%), 비대면 협의로의 전환을 통한 협의 횟수 증가(28%) 및 사업추진 비용 감소(28%) 등이 그 뒤를 이었음

그림 4-3 | 코로나19 확산이 가져 온 긍정적인 영향 (복수응답)



자료: 저자작성.

- 그러나, 디지털 방식의 비대면 협의로의 전환이 비용을 감소시키고, 횟수는 증가시켰으나, 그것이 질적 측면의 제고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 됨

- 
- 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 개발협력 사업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여건 속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및 사업발주기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 필수적인 개발협력 사업 인력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 및 해외 출장시 자가격리 면제 협정, 현장인력과건을 위한 비자 및 입출국 협상 등 정부간 협력을 통한 지원
- 원격으로 협의, 자문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지원 필요
-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여건변화를 반영한 사업대체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국외출장 기준, 대체활동 인정범위, 현지인력 활용, 사업기간 조정, 방역 및 안전관리 등에 따른 예산 조정 등)

## 2) 코로나19 이후 현장여건변화 심층 분석을 위한 간담회 결과와 시사점

- 코로나19가 개발협력 현장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 개발협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화상 및 대면 간담회<sup>34)</sup>를 개최함
  - 코로나19가 개발협력사업에 미친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는 직접적인 여건변화와 각국 및 기관의 대응 현황을 주로 다룸
  - 간담회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개발협력 현장에 미친 변화와, 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보고자 함

---

34) 간담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표 4-3 | 해외 개발협력 담당자 간담회 개요

기간	2021.4.22.~ 7.26. (약 3개월 )
개최회수	·10차례 간담회 개최 ·4월: 22일 오후 3-5시, 30일 오후 1:30-3시 ·6월: 8일 오전 10:30-12시, 10일 오후 2시-3:30, 16일 오전 9-10:30, 28일 오후 2:30-3:30 ·7월: 1일 오후 3:30-5시, 7일 오후 3:30- 5시, 15일 오후 4시-5:30, 26일 오후 4시-5시
참여자	총 14인의 국제개발협력 관계부처 및 수행기관 전문가 및 관계자 참여
관련기관	국토교통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단, 민간도시연구소 등
협력국	베트남,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개발협력 프로그램	- 기획재정부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사업 - 국토교통 K-City Network Program - 해외건설시장개척지원자금 등 - 개발협력사례(인도네시아 신수도건설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파라과이 바냐도수르 신도시개발사업, 베트남 도시개발사업 등)

자료: 저자작성.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에서 실시한 국경과 도시의 봉쇄, 집합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정책은 사업관리를 포함한, 개발협력사업 모든 단계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개발협력사업 관계자들이 경험한 구체적인 현장 여건변화를 사업관리의 측면과 사업수행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사업수행 관련 여건변화 및 과제

##### □ 현지조사 및 자료구득의 어려움

- 이미 추진중인 사업들은 대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에 필요한 현지조사가 완료된 사업들로, 팬데믹 초기에 관련 영향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음.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은 과업수행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
- 특히 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의 경우, 현지 도시상황 파악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대화를 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

른 새로운 관습, 법체계 등을 발견하게 되기도 함. 비대면으로의 전환은, 기존의 현지조사를 통한 정보구득의 효과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음

“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부처 간 분절화와 파편화가 심해 직접 발로 뛰다니며 접촉하지 않으면 데이터 공유가 어렵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그나마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어 구득하던 정보들의 구득이 불가능해져 업무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한편에서는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현장을 답사하며 회의를 진행한 경우도 있음. 더 이상 출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는 경우 다양한 현지조사 대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갑작스러운 비대면 전환으로 인해, 사업성과 달성여부가 불투명 해지고,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짐

-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과 같이 현장답사 및 확인이 필수적이고, 협의할 대상 및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현지조사 및 자료구득 방식에 대한 고민과 적용이 필요

#### □ 업무협의 및 사업수행의 어려움

- 봉쇄기간 동안 대면회의와 출장이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개발협력사업의 업무추진에도 상당한 지연이 불가피해짐

-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의 경우 관련 법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관련 의사결정 과정이 코로나19로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봉쇄 완화 이후 신규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로, 업무추진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파라과이의 경우 초기 강력하고 선제적인 봉쇄정책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 중 하나였으나, 2020년 7월경 봉쇄조치를 완화하였는데, 이후 확진자가 대거 증가하여 브라질과 인구수 대비 코로나19 확진율 1위를 다투는 상황이 됨

“화상회의를 계획했다가도 갑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나 가족의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 혹은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비대면 화상회의조차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

## □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어려움

- 국경 이동 제한 조치는 개발협력사업에서 중요한 요소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수원국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방문 연수프로그램과,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의 대부분이 취소 또는 연기
-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일부는 온라인연수로 대체되었지만, 현지 담당자들은 온라인 연수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며, 예산집행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시기를 미뤄서라도, 오프라인 연수를 개최해야 의도한 연수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임
- 한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연수 전환시 고위급 참석보다는 실무자급 참석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의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하고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인원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기도 함
- 연수개최의 목적에 따라 비대면연수가 효과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시간적 비용적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성과 창출 및 확산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연수와 오프라인 연수를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연수방식 도입 검토 필요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현지 역량강화의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연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필요성은 커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우리나라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 및 도시개발부문의 발전 경험에 대한 콘텐츠를 구축하되, 수원국의 수요를 잘 파악하여, 맞춤형 콘텐츠 구축 및 제공을 위한 중장기적 플랜 필요

## □ 국토·도시부문 민간부문 개발협력업체 및 전문가가 겪는 어려움

-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민간부문 업체와 인력들은 업무연속성 및 효율성 저하의 문제 뿐 아니라, 비용증가 없이 사업기간만 연장되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작년보다는 올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현지상황으로 인한 사업의 지연으로, 인력과 예산은 소진되어 가는데, 계약이 묶여 있는 민간업체들이 많다. 특히 영세한 업체의 경우 자금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받는다.”

- 현지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계약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민간부분 개발협력 업체들과 인력에게도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위기가 되고 있음
  - 전문인력의 유출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섹터전문가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 있음
-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지 컨설턴트 등의 개발협력인력을 현지에서 채용하는 등 현장중심의 대응이 강조되던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2)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사업관리 관련 여건변화 및 과제

### □ 수원국의 재정악화와 공적개발원조의 중요성 증가

- 코로나 19에 따른 수원국의 재정상황 악화와 그로 인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 예산규모 및 우선순위 후퇴
    - 급속한 코로나 19확산 대응으로 인한 보건부문의 위기와, 세계 각국의 재정악화로 인해 수원국으로의 재정유입이 감소함에 따라 대부분의 수원국에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음
    - 이는 국토·도시·인프라 부문 예산의 규모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후퇴시키고 있으며, 편성된 예산의 집행속도에도 큰 영향을 미침
    - I국의 경우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대부분이 중단 또는 무기한 연기되었고, 관련 예산이 코로나위기 대응을 위해 활용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부족으로 많은 정부 부처들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다. 국토·도

---

시부문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공공사업부의 경우 1년 예산이 약 10조 원인데, 그중 20%를 반납해야 했다. 또한 신수도 이전사업의 총 예산 40조 원의 80%가 민간투자 및 민관협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 민간투자 위축 및 계획 확정 지연으로 인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공적개발원조는 민간자본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 않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개발도상국으로의 공공재원 및 민간부문 자금유입이 감소함에 따라 공적개발원조의 역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 가능

#### □ 신규 사업발굴 및 형성에 어려움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앞으로 추진 될 신규 사업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은 커질 것으로 전망
- 일례로, 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현지조사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사업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에는 연차별 사이클이 있는데, 2020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코로나19 긴급대응, 취약계층 긴급복구와 관련한 사업수요가 늘어 기존 수요에 대한 사업 형성은 차질을 빚고 있다.”

#### □ 디지털 인프라와 역량 격차로 인한 불균형

- 수원국마다 다른 디지털 인프라와 역량 격차는 감염대응에 필요한 디지털 전환과 빠른 회복에 있어서도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음
  - 많은 국가에서 도시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감염예방 정책이 시행되어 오프라인 활동에 제한이 커지고,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업무방식도 화상회의와 재택근무로 전환
  - 디지털 역량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업무 전환에 큰 문제가 없었고, 현지 주재 국내기관이나 기업 철수 비중도 높지 않았음. 현지 정부부처에 한국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파견관이 근무하는 경우, 코로나 19 이후 국내에서 현지로 입국할 수 없는 사업담당 민간업체의 현지교류 및 업무조

---

을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

- 현지에 체류 중인 코이카의 현지사무소 인력이 국내 귀국 인력과 현지 간의 중계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업무 증가 문제 발생
- 한편 화상회의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나라에서는 비대면 업무로의 전환이 개발협력사업의 추진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디지털 인프라가 열악한 개도국일수록 현지조사 및 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지만, 코로나19 회복의 속도 또한 더디기 때문에 현지체류 및 출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소요되고 있어 불균형을 심화시킴
- 공공부문 개발협력 전문가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현지 주민들이 IT와 디지털 격차로 인해 느끼는 격차는 훨씬 정도가 심할 수 있음. 이 격차는 즉각적인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교육 및 학습권에도 영향을 주어 장기적인 사회의 회복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 수원국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18개월여가 지나고 있지만,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그 영향이 얼마나 오래 미칠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
- 코로나19 이전에도 이후에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체제에서 도시정책의 지향점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서, 코로나19의 위기는 이 목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지만, 목표의 달성에는 큰 도전이 되고 있음
- 특히, 위기대응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는 더욱 큰 타격을 주고 있음
- 해외 개발협력 현장의 담당자들에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해당국가와의 개발협력사업의 추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물었을 때, 대부분은 한국의 방역성공이 현장에서 개발협력사업의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체감되지 않는다고 응답

“한국의 확진자수가 줄어들고, 백신접종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개발협력이 당장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원국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한 개발협력 여건이 개선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개도국의 백신접종률은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상황이다. 현지의 개발협력업무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라도 향후 1-2년은 지나야 할 것이다.”

- 수원국의 취약성은 결국 개발협력여건에 영향을 미침. 기후변화와 잦은 감염병 발생 등 글로벌 위기가 신속하게 전파되는 사회에서, 협력대상국 도시의 지속가능한 회복은 결국 공동의 생존과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의 과제

### (3) 코로나19 이후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여건변화 대응과제

- 코로나19 확산이 개발협력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복합적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의 전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직접적인 여건변화와 사업에 끼친 영향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4-4 | 개발협력사업 단계별 여건변화

사업단계	신규사업발굴 및 형성	업무협의 및 사업수행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여건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조사어려움으로 수원국 여건검토 및 도시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사업형성에 영향</li> <li>✓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각국 재정상황 악화로 국토·도시부문 예산의 규모와 사업의 우선순위에 영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기관 및 담당자와의 협의지연으로 주요 의사결정 지연</li> <li>✓ 비대면방식의 현지조사 및 협의로 깊이 있는 현지정보 취득 어려움. 역량강화사업 비대면 진행에 따른 사업 성과저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인프라 부족으로 갑작스러운 비대면 전환 대응 어려움</li> <li>✓ 현지인력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 및 현지 섹터전문가 활용 어려움</li> <li>✓ 사업관리 및 평가 기준 적용의 어려움</li> </ul>

자료: 설문조사 및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저자작성.

-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은 경제 및 공공의료 부문의 위기로 인한 공여국과 수원국의 재정악화 등의 영향 뿐 아니라, 지역 및 국경봉쇄, 이동 및 집합금지 등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시행을 초래함으로써, 국경과 지역 간의 이동을 전제로 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수행과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현장체류 및 출장 불가 상황으로 인한 현지조사 및 정보취득의 어려움, 비대면 방식에서의 업무전환 상황에서 열악한 수원국의 디지털 인프라 상황이 초래한 어려움, 나아가 과업의 중지 또는 취소, 비용 지원이 없는 과업기간의 연장 등 사업수행자 측면에서의 인력 및 재정 측면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었으며,
  - 신규 사업 발굴 및 형성의 어려움, 주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상호간 협의 및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의 어려움 등 개발협력사업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개발협력 사업단계별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4-5 | 개발협력사업 단계별 대응방향

사업단계	신규사업발굴 및 형성	업무협의 및 사업수행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대응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도시부문 ODA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및 전략적 지원체계 마련</li> <li>✓ 국가별 특성에 따른 유망분야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도시개발 융복합 프로그램 발굴</li> <li>✓ 국제기구 및 현장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조로 신규파트너십 형성 및 사업발굴 기회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국 및 개발협력 담당자의 방역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li> <li>✓ 현장화 중심의 사업추진 확대와 이를 위한 예산 및 업무체계 등 사업 가이드라인 정비</li> <li>✓ 민간부문 전문가 파견을 장기체류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지 섹터 역량강화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협력분야 전문가의 과업수행 여건 개선</li> <li>✓ 현지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방식 개선</li> <li>✓ 성과지표 다양화 등 섹터 맞춤형 성과평가시스템 구축</li> </ul>

자료: 설문조사 및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저자작성.

- 위의 방향을 토대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현장의 여건변화별 대응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정책과제는 코로나19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적 대응정책과,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대비하여 준비해야 하는 중장기적 정책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표 4-6 | 개발협력사업의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대응과제

구분	영향	단기적 대응과제	중장기적 대응 과제
내용	인력 철수 및 재파견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연한 근무방식 및 비대면 업무 체계 확대</li> <li>백신접종완료자 등 해외사업 필수인력에 대한 격리면제 등 국가간 협약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인력 및 섹터전문인력 수급 어려움으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 대책 마련 필요</li> <li>개발협력 분야 인건비 현실화를 통한 신규인력 및 전문인력 과업 수행여건 개선</li> </ul>
	과업중지 또는 기간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변경에 대한 유연성</li> </ul>	
	현지조사 및 자료구득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수적인 해외출장인 경우 방역 및 격리면제 등 지원 필요</li> <li>현지 직원에게 방역지원 필요</li> <li>비대면 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 지원 필요</li> <li>상황변화에 따른 사업대체가이드 마련 필요</li> <li>비대면 협의 및 조사방식 활용</li> <li>현지네트워크 및 사무소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방식의 다변화 필요</li> <li>현지인력을 활용하는 현장화 중심의 사업추진 확대</li> <li>민간부문 전문가 파견을 단기 방문에서 장기체류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지 섹터 역량강화 지원</li> <li>현지인력 및 현지사무소 활용을 위한 사업가이드라인 정비</li> <li>분절화되어 공유되지 않는 주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li> <li>현지 전문인력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및 업무체계수립 고도화</li> </ul>
	업무협약의 및 사업관리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고위급 의사결정 지연 문제 등 해결 위한 현지 출장 지원 등 필요</li> <li>현지인력 고용시 필요한 행정규정 검토 및 마련</li> <li>협력국 국가의 업무협조를 위한 정부/공공부문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대면 전환을 위한 기술력 지원 현지사업 관리방식 및 성과평가 방식의 변화 필요</li> <li>성과지표 다양화 등 섹터맞춤형 성과평가시스템 구축</li> <li>사업기획단계부터 위험요소를 포함하여,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철저히 사업을 설계할 필요</li> </ul>
	역량강화 프로그램추진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대면 연수 추진시 발생하는 성과 및 품질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진행 및 온라인 현장 연수 등 다양한 방법 모색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연수 혹은 하이브리드 방식의 연수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한 콘텐츠 제작</li> <li>각 기관에서 일회성,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연수 콘텐츠를 체계화 하고 종합화 할 수 플랫폼 마련 및 공유 필요</li> </ul>
신규사업 발굴 차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협력 인프라 및 역량 강화</li> <li>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li> <li>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 정부차원 지원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력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지원을 통한 현 지이해도 제고 필요</li> <li>국제기구 및 현장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조로 신규 파트너십 및 신규사업 발굴 기회 제고</li> <li>현지 적정기술적용 등 수요대응형 개발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원</li> <li>국가별 특성에 따른 유망분야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도시간 교류 및 인력교류 활성화 지원</li> </ul>	

자료: 설문조사 및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저자작성.

## 2.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 사례분석결과 및 과제

### 1) 사례선정 기준

- 주요 중점협력국 27개국에서, 2019년 이전부터 추진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인 국토·도시 분야의 개발협력사업 사례
  - ※ 중점협력국 (27개국): 아시아 12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등), 중동·CIS지역 4개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중남미 4개국(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아프리카 7개국(이집트, 세네갈 등)
- 대한민국 ODA통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ODA 국별 현황 및 국가별 사업목록, 한국국제협력단 국별협력프로그램, 국토교통부 ODA사업 목록 등을 검토하여 사업 분야에서 대표성을 띠는 사업 중 코로나 전후 사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해 줄 외부 전문가 섭외가 가능한 사례를 선정
- 최종적으로,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의 특성 및 코로나19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2개 국가의 개발협력사업사례를 선정하여 추진현황 및 코로나 19 이후의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추진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 사례 선정 및 분석 개요

표 4-7 |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사업 사례 분석 개요

구분	내용	
국가 및 사례	베트남	후에시 도시개발지원사업(마스터플랜 개선사업, 항강연안개발 상세계획 및 시범사업 상세설계,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조성지원사업)
	인도네시아	신수도사업 관련 개발협력사업
분석 틀	1.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대응정책 2. 개발협력사업 추진배경 및 현황 3. 주요사례분석: 사업개요, 추진현황 및 시사점 4. 코로나19의 영향 및 과제	

자료: 저자작성.

---

## 2) 베트남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 사례 및 시사점<sup>35)</sup>

### (1)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대응정책

- (현황) 베트남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강력한 봉쇄 조치 및 격리를 통해 신규 확진자 수 관리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음
  - 2020년 3월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하노이 박마이(Bach Mai)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등의 위기가 있었으나, 2021년 5월 초까지 일일 확진자수가 100명 이하로 관리
  - 그러나 2021년 베트남 노동절 연휴 기간(4. 27. ~ 5. 3.) 이후 밀입국자 및 해외 입국자 등으로 인한 지역 감염이 확산되었으며, 2021년 7월 이후에는 7,000명에서 9,000명 사이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
- (대응정책) 베트남 정부는 외부 감염원 유입 차단, 사람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
  - 2020년 3월 모든 외국인 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일시 중지, 외국인 및 베트남 교민 입국 금지, 자국민 입구 시 격리, 하노이 비필수 업소 영업 일시 중지, 필수업소(식료품, 주유소, 약국, 병원 등)를 제외한 모든 업소 영업 일시 중지 등
  - 또한, 하노이와 호치민시 등에 다양한 격리방안(도시 전체 봉쇄 및 계엄령 등)을 준비하도록 요청하였고,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중요한 업무 활동, 대국민 서비스 제공 병원을 제외한 기관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할 것을 권고
- (경제 영향) 2021년 상반기 베트남의 국민총생산 성장률은 5.64%로 베트남 기획투자부전망치 5.8%에 못 미친 것으로 추정 (한국국제협력단 2021a)
  - 2분기 GDP 성장률은 6.61%로 작년 동기간 0.39%보다 높았으나 2018년과 2019년 동기간 6.73%보다는 낮았으며, 1분기 경제성장률은 4.65%
  - 부문별로는 산업·건설부문이 8.36% 성장하며 GDP의 37.61%를 차지하며 경제성

---

35) 본절은 KOICA 내부자료 (국별 월간 개발협력 동향 자료: 2020년-2021년 7월호)를 참조하여 작성함

---

장을 이끌었지만, 농업 3.69%, 서비스 부문은 3.96%, 소매판매는 5.63% 등의 부문이 저조하였고, 창고 운송 0.39%, 숙박 외식은 5.02% 감소

- 베트남 정부는 4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지역 감염 4차 확산으로 경제가 위축되었으나 하반기에 충분히 만회할 수준이라고 설명

## (2) 베트남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추진 현황 (2011년 이후)

### □ 베트남의 개발협력정책 추진 동향

-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를 선언하여 개혁·개방 경제를 표방한 이후, 1992년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고, 200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거쳐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
- 최근에는 신남방정책의 전개와 함께,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로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우리나라 대외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협력대상국 임
-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체제하에 장기종합국가개발계획인 사회경제개발전략을 수립하며, 5년마다 성과점검을 통해 새로운 비전 수립
-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의 진행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인프라 확충 및 지속가능한 도시화, 스마트도시 개발 등 국토·도시부문에 대한 개발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베트남은 공적개발원조를 국가성장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로 손꼽히고 있음. 중앙정부의 재정은 부족하지만, 지방정부의 사업추진시 자원조달의 한 수단으로 공적개발원조를 명시함
- 공적개발원조의 비중은 베트남 GDP의 4%에 불과하지만, 공공투자의 15~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2016~17년에 베트남을 대상으로 집행된 ODA기준 상위 공여국 또는 기관은 일본(41.7%), 국제개발협회(IDA, 21.0%), 아시아개발은행(8.9%), 독일(5.5%), 한국(5.2%) 순으로 개발은행을 제외하면 한국은 지원액 규모 3위의 공여국임
- 베트남 경제가 성장하면서, 저소득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세계은행 그룹 국제개발협회(IDA)와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펀드(ADF)는 2017년 7월 베트남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이러한 공적개발원조 환경변화로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재원조달을 위한 ODA예산 부족 초래
- 이에, 베트남정부는 인프라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2020년 6월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개발협력사업의 개발재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민관협력방안 도입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공적개발원조와 유상원조가 연계되는 혼합금융사업(Blended Finance)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 2011년 이후 개발협력사업 추진 현황

- 2011년 이후 베트남을 대상으로 추진된 국별협력사업<sup>36)</sup>은 총 59건으로, 3억 8,698만불 규모로, 이중 국토·도시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은 18건(사업비는 1억 500만불)로, 주로 교통, 도시계획, GIS 기반 토지정보관리 사업이 지원되었고, 2020년대 이후에는 여러 건의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36) 무상원조 사업은 국별협력사업 외에 글로벌연수사업, 혁신적개발협력사업, 시민사회협력사업, 인도적지원사업, 국제기구협력사업, 국제질병퇴치기금사업, 인재양성사업 등의 형태로 추진되나, 여기에서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별협력사업에 대해서만 다룸

표 4-8 | 베트남 개발협력사업 추진목록

연번	사업명	기간	사업비
1	베트남 호치민시 간선급행버스(BRT)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사업	'09-'11	200만불
2	베트남 후에시 개발 마스터플랜 개선사업	'11-'13	350만불
3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지원사업	'13-'15	350만불
4	베트남 항강 연안 개발 상세계획 및 시범사업 상세설계	'14-'18	600만불
5	베트남 그린시티 도시계획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사업	'15-'18	650만불
6	베트남 고속도로 관리 및 제도 역량강화 사업	'15-'19	150만불
7	라오스-베트남 연결철도(라오스 비엔티엔-타켓-무디아-베트남 봉양) 타당성조사 사업	'15-'18	300만불
8	베트남 국가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13-'16	200만불
9	베트남 지가산정 역량강화 및 지가정보시스템 개선사업	'16-'20	900만불
10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	'15-'17	500만불
11	베트남 교통분야 DEEP사업	'15-'20	500만불
12	베트남 사회주택 개발 종합정책수립사업	'18-'21	300만불
13	베트남 하노이 도시철도 8호선 건설 예비타당성조사(Pre-F/S) 사업	'18-'22	400만불
14	베트남 광남성 띠끼시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사업	'20-'25	900만불
15	베트남 평화성 Ma강 수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20-'24	900만불
16	베트남 다낭시 스마트 통합 도시재난관리센터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	'20-'25	1,050만불
17	베트남 후에시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사업	'21-'25	1,300만불
18	베트남 도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1-'25	950만불
합 계			10,500만불

자료. ODA 정보포털: <https://www.oda.go.kr/opo/bsin/bsnsInfoCnttBsnsInfo.do> (2021년 9월 15일 접속).

- 지난 10년 간 베트남에 지원된 국토·도시 분야 사업은 양자 간 협력 의제에 큰 영향을 받음. 그러나, 베트남의 도시화 진행, 도시관리체계 재분류 등 현지에서의 수요도 개발협력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후에시 도시개발 지원사업 또한 그 사례로 볼 수 있음

---

### (3)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례 분석: 후에시 도시개발지원 사업

#### □ 사업 개요

- 2011년 “베트남 후에시 개발 마스터플랜 개선 사업”은 베트남 중부지역에 위치한 후에시가 1급 도시로의 승격을 위해 요구되는 도시 규모, 기능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됨
  - 이 사업을 통해 작성된 마스터플랜은 베트남 중앙정부의 공식 승인을 획득하여 후에시가 1급 도시로 승격이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줌
- 2014년에 시작된 “베트남 향강 종합개발 지원 사업”은 후에시에서 가장 상징성이 높은 공간인 향강(Huong river) 인근 지역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적으로 직접적인 공간 개선을 담고 있는 사업
  - 두 사업이 종료된 이후 후에시가 속한 후에성은 베트남의 여섯 번째 중앙 직할시로 승격이 결정되는 등 도시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침
- 2018년 8월, 베트남 중앙 정부는 “2018-2025 베트남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 개발 계획 및 2030 방향”이라는 정책(Decision No. 950/QD-TTg)을 발표하였는데, 후에시에서는 역사문화 도시라는 정체성을 보유하면서,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 도시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문화 관광 스마트시티 사업 지원을 요청하였고, 2021년부터 새로운 3번째 사업 추진 예정
- 우리나라가 한 도시에 대하여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이 바탕이 되어 도시 등급 승격과 같은 성과를 창출한 유례없는 개발협력 성과를 보이는 사례

표 4-9 | 베트남 후에시 도시개발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기간/사업비)	사업 내용	주요 성과
[1차 사업]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사업 (‘11-’13/350만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아티엔후에성의 중앙도시 승격을 고려하여, 투아티엔 후에성의 핵심 도시인 후에시에 대해 2030년까지의 도시기능, 인구 및 토지 규모를 예측하고, 2050년까지의 도시 비전과 미래상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5월 베트남 정부 수상실로부터 베트남 법정 도시계획으로 승인 (결정문 No.649-QD/TTg)</li> </ul>
[2차 사업] 베트남 향강 연안 개발 상세계획 및 시범사업 상세설계 (‘14-’17/600만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상실 결정문에 의거, “The Modification of Hue City’s Master Plan 2030 vision 2050”의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상세계획(Detailed plan) 수립</li> <li>•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는 시범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향강 연안에 대한 계획적 관리 근거 마련 (인허가 완료)</li> <li>• (시범사업)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강변 보행공간 설치</li> </ul>
[3차 사업] 베트남 후에시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조성지원 사업 (‘21-’25/ 1,300만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중부지역 관광문화계획, 후에시 마스터플랜 2030 비전 2050, 후에시 향강 연안 상세계획 등의 사전 계획 기반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li> <li>• 사용이 종료된 시설을 활용하여 디지털박물관, 전망대를 포함하는 복합문화시설 조성</li> </ul>	(기대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문화관광에 초점을 맞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 제시</li> <li>• 후에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전시, 체험,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후에시 도심부의 새로운 랜드마크 형성</li> </ul>

자료: 베트남 후에시 도시개발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저자 작성.

#### □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사업

-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사업은 1999년에 승인된 「후에시 마스터플랜 2020 수정계획」 수립 이후 투아티엔 후에성과 후에시에서 진행되었거나 계획하고 있는 각종 도시 관련 사업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투아티엔 후에성의 중앙도시 승격을 고려하여 후에시의 도시 확장과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
- 마스터플랜 수립의 공간적 범위는 후에시(면적 70.99km)와 주변 도시(홍투이, 투언안, 투하, 빈디엔)를 포함하는 약 348km<sup>2</sup>의 면적을 갖는 지역으로 투아티엔 후에성의 핵심 지역이자 향후 후에시 도시 확장이 예상되는 지역이며, 내용적 범위는 현황 분석 및 기존 마스터플랜 평가, 공간개발구상, 기술인프라, 사회인프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실행계획 등으로 구성

그림 4-4 |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사업 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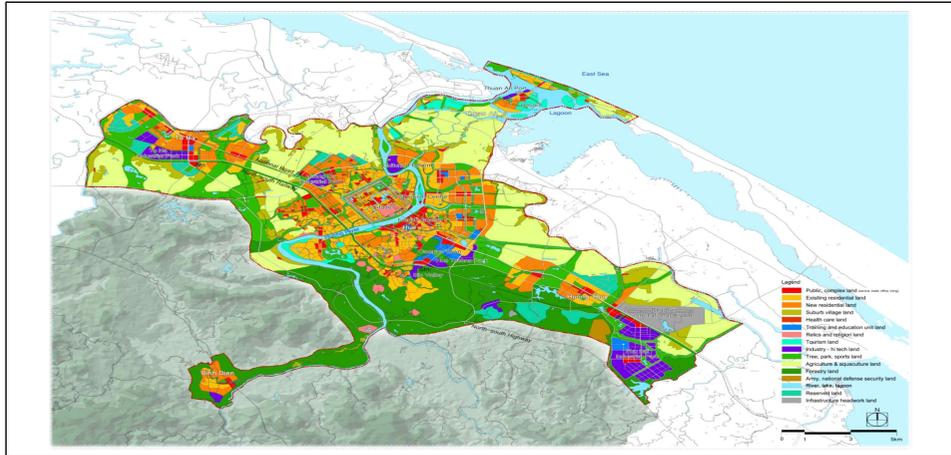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동남아시아 1팀, 도화엔지니어링, 한아도시연구소 2013.

- 인구확보 용이성, 투아티엔후에성 발전 방향과의 부합성, 주변 도시 연계성,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도시계획시설 관리의 효율성, 토지확보 용이성, 기후 변화에 대응한 성장 가능성 등 7개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6개의 대안에 대한 전체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제시한 계획으로, 2014년 5월 베트남 정부로부터 법정도시계획으로 승인

□ 베트남 향강 연안 개발 상세계획 및 시범사업 상세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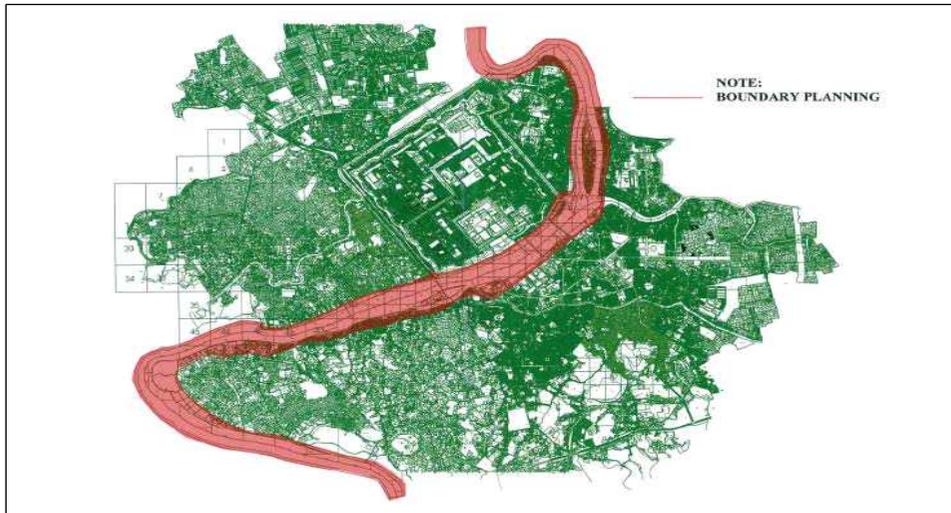
- 베트남 향강 연안 개발 상세계획 및 시범사업 상세설계 사업은 후에성에서 가장 도시화된 후에시, 그 중에서도 후에시를 관통하는 향강(Huong)의 15km 구간 양안의 100m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림 4-5 |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동남아시아 1팀, 도화엔지니어링, 한아도시연구소 2013.

그림 4-6 | 상세계획 공간적 범위(안)(20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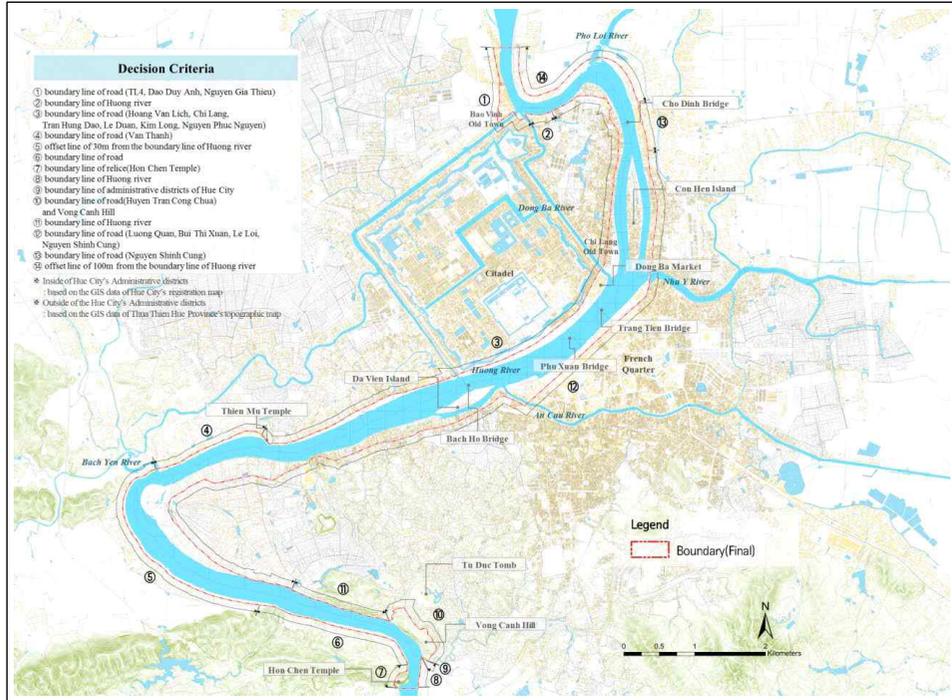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동남아시아 1팀 2015.

- 향강은 문화유산, 생태 및 역사적 관점에서 도시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후에시의 사회경제적 개발의 중요 지역이자 도시경관 및 문화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 
- 향강의 상류 지역(남쪽)은 산지지형으로서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향강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다수의 역사유적(역대 황제의 무덤, 사원 등)이 분포한 지역임
  - 중류 지역에 해당하는 도심부 양안에는 주거시설, 행정시설, 상업시설 및 숙박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며, 수변을 따라 선형으로 공원 및 녹지가 연결되어 조성
  - 하류 지역(북쪽)은 대부분 평지지역으로 수변부는 전통마을 등 주거지역과 농업용지로 이용되며, 투언안 하구 라군 합류지점 주변으로는 새우 등 수산 양식장이 다수 분포
- 상위 계획인 ‘후에시 마스터플랜 2030 비전 2050’의 계획 방향을 수용하고, 대상지를 따라 이미 수립된 지역별 상세계획 상의 공간구조 및 인프라 구축 계획을 통합하여 지역별 관리방향(보존, 정비, 개발, 개발유보 등)을 수립하고, 베트남 도시계획법 등에서 정한 법정도서(1/500 도면 포함)를 최종 산출물로 작성함으로써 베트남 측의 인허가를 지원
  - 상세계획 공간적 범위(안)(2014. 3.)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컨설팅 과업과 물리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실행 사업이 하나의 사업 안에 통합된 형태로 추진
  -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적으로 상징성이 높거나, 계획 내용을 구체화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7개의 시범사업 후보가 도출되었고, 지방정부 관계자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시민, 관광객 등 대상지의 주 이용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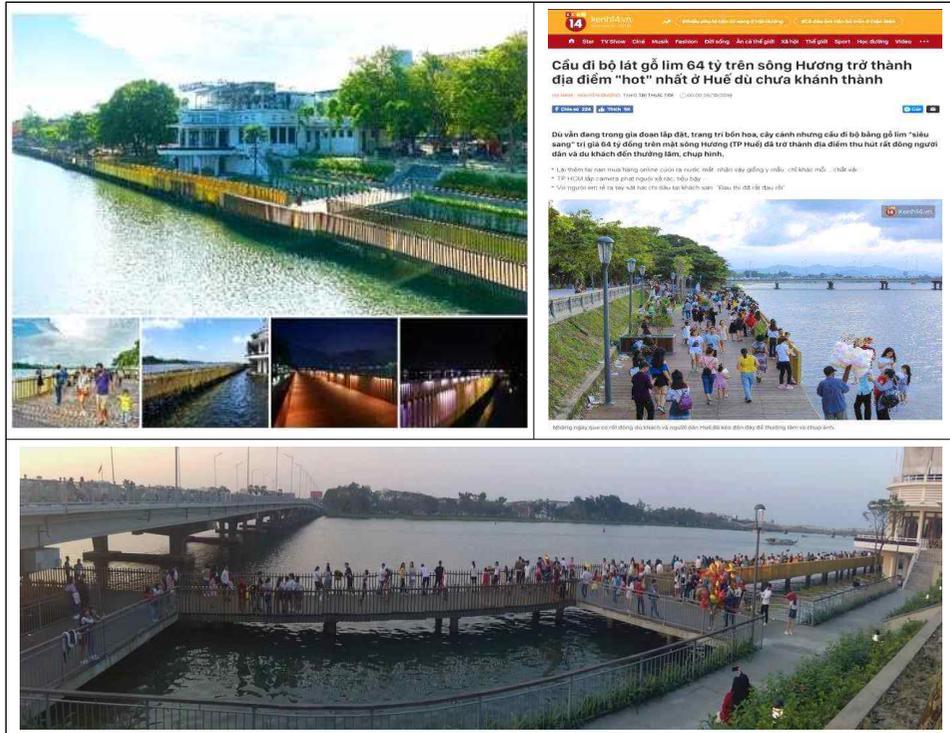
그림 4-7 | 상세계획 대상지 경계(2015.3.)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동남아시아 1실 2018.

- 약 2,500 여명의 시민, 공무원, 관광객 등이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하강 남측 연안 지역에 약 400미터 길이의 보행데크를 건설하는 사업이 선정됨
- 주요 보고회와 워크숍 개최를 통해 지방정부의 주요 관계자 및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선정 단계에서 시민과 관광객 대상으로 후보군 선호도 조사 실시, 상세계획 주민 설명회, 시범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

그림 4-8 | 시범사업결과 및 현지 언론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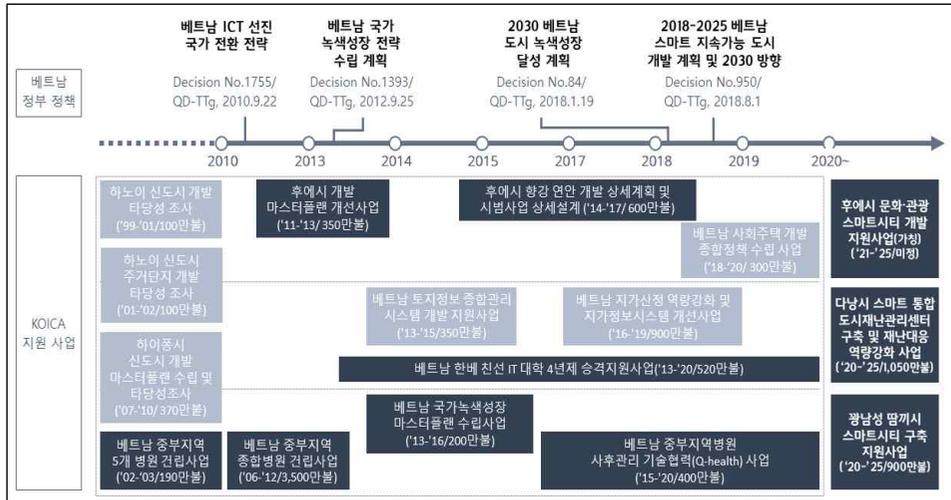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동남아시아 1실 2018.

#### □ 베트남 후에시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조성지원 사업

- 2018년을 전후로 베트남 중앙 정부는 국가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며, 하노이와 호치민, 다낭, 껀터 등 주요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른 도시들에서도 정책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후에성에서는 ICT 건축개발, 인프라개발, 안전서비스, 통합관리센터, 후에S 어플(관광 연계) 등 10개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스마트시티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스마트 통합도시관제센터를 설립. 또한 민간 부문에서는 Smart Media City(SMC)라는 명칭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그림 4-9 | KOICA의 베트남 도시개발지원사업 연혁



자료: 저자 작성.

- 2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에는 역사문화 정체성을 더욱 확립하고, 스마트시티 추진이라는 베트남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을 위해 KOICA에 스마트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지원을 요청
- KOICA에서는 우리 정부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신남방정책에 부합하는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협력 경험이 풍부한 후에시를 비롯해 베트남 중부지역에 있는 다낭, 팡남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 2021년부터 추진되는 후에시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 사업은 현지 수요에 부합하고, 우리나라 대외 정책과도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앞선 2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후에시의 수원태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줌
- 후에시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사업은 △ 지역 스마트 문화관광 액션플랜 수립, △스마트 문화관광 시범사업(다비엔섬 스마트 복합문화공간 조성), 향강변 스마트 조명, △공공 와이파이, △스마트 관광개발 및 도시관리 역량강화 등으로 구성

- 시범사업의 대상지는 상위계획인 후에시 마스터플랜 2030 비전 2050과 향강 연안 상세계획 1/500에서 복합문화공원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다비엔섬으로 다비엔섬의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보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취수탑 및 취수장시설을 활용하여 전망대와 복합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방향 결정(후에성 결정문 2250/QD-UBND, 2019년 9월; 05/QD-UBND, 2020년 1월)
-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사업은 가장 넓은 범위의 면(面)적인 종합계획 수립 사업이었고, 향강 연안 상세계획 및 시범사업 상세설계 사업은 15km 길이의 선(線)적인 사업임.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 사업은 스마트 요소 기술을 적용하여 후에시 도심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점(點)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음

그림 4-10 |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조성지원사업 대상지 (향강 남측 연안, 다비엔섬)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동남아시아 1실 2020.

#### (4) 후에서 도시개발지원사업의 특징과 시사점

- 1980년대 경제성장, 산업화, 경제성장과 함께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외진출을 시도하였음. 베트남에서도 이미 1999년 하노이를 대상으로 하는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조사 사업이 지원된 바 있음<sup>37)</sup>. 국토교통부,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도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과를 산출하면서 진행되어 온 사업은 투아티엔후에성, 후에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이 유일

표 4-10 | 신도시개발 관련 개발협력사업

연번	사업명	기간	사업비
1	하노이 신도시 개발 타당성조사	'99-'01	100만불
2	하노이 주거단지 타당성조사	'01-'02	100만불
3	알제리 Sidi 과학기술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	'03-'04	100만불
4	베트남 하이퐁시 신도시 개발 세부 마스터플랜 수립	'07-'10	370만불
5	가나 아한타웨스트지역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사업	'09-'10	150만불
6	가나 아한타웨스트 신도시개발계획 수립 2 차사업	'10-'11	100만불
7	네팔 룸비니지역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11-'13	200만불
8	온두라스 특별개발지구 타당성조사사업	'12-'15	400만불

자료: ODA 정보포털: <https://www.oda.go.kr/opo/bsin/bsnsInfoCnttBsnsInfo.do> (2021년 9월 15일 접속).

- 베트남 후에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과 향강 연안 상세계획 수립사업, 그리고 시범사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현지 도시계획 수립 권한 획득부터 현지법에 의한 승인을 득함으로써 KOICA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한 첫 번째 도시개발 인허가 승인 사업으로 기록됨
  - 과업수행 과정 중 관련 법규의 신설로 인해 도시설계 과업이 추가되었으나, 신설된 법규의 최초 적용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PMU 및 상위 기관인 건설부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성과품을 산출하여 인허가를 지원

37) 계획 수립 이후 사업이 실행되기까지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대우 스타레이크 시티 사업이 동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음

- 
- 후에시 사업은 10년 이상 지속된 사업으로, 장기적 협력에 현·전 후에시 시장의 역할이 컸음. 사업 초기 단계 과장급이었던 공무원이 현재 시장을 맡고 있으며 당시 시장이 현재 성장을 맡고 있음. 시장, 성장이 도시 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고, 의사결정 단계의 한 단위로 역할 하면서 중앙부처로부터의 정보 및 자료 구득을 수월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 이 사례는 도시 분야 개발협력에 있어, 도시 단위 협력파트너의 가능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
  -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은 법정 계획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사회 개발협력에서 공식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
    -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그린시티 이니셔티브 추진 대상 도시 선정 과정에서 마스터플랜을 근거자료로 활용하였고, 후에시가 최종 선정 되어 그린시티 액션플랜을 수립
    - 미국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국제사회환경전환기구(ISET, The Institute for Social and Environmental Transition-International) 기후변화 통합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시에 후에시 마스터플랜을 참고하였고, JICA는 물 관련 재난대응 사업 추진 시에 KOICA가 지원한 마스터플랜을 활용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이 ADB, USAID, JICA 등 타 원조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공식적으로 활용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

그림 4-11 | 베트남 후에시 도시개발 프로젝트



자료: 조한덕 2019.

- 베트남 후에시는 1차 사업이 추진된 이후 10여 년 동안 KOICA를 비롯하여 1차 사업에 참여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후속 사업 연계를 위한 협력 관계를 유지
  - LH 공사는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2019년 후에성에서 관리하고 있는 쩌마이 랑코 경제구역 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가고 있음
  - 한편, 후에시 마스터플랜에서 신규 개발지역으로 계획된 후에시 동측 안번정 지구에는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후에시 스마트 미디어 시티”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sup>38)</sup>

38) Hanoi Times 보도자료 “Thua Thien -Hue to build first smart media city in Vietnam”, 자료: <http://hanoitimes.vn/thua-thien-hue-to-build-first-smart-media-city-in-vietnam-42510.html> (검색일: 2021sus 6월 24일)

- 2021년 4월에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KOICA의 공적개발원조에서 시작된 중부 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 기업의 진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있는 공공기관, 경제단체, 기업 등 이른바 ‘베트남 팀코리아’ 를 구성하여, “한국-트어티엔후에성 경제협력증진간담회”에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와 함께 참석하였으며, 베트남 측에서는 베트남 당중앙위 대외관계위원장, 외교부 차관보 겸 국제경제국장, 후에성 당서기 등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결과 도출 기대
- 도시개발은 종합적이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ODA 사업과 일정 수준의 상업성이 요구되는 민간 개발 사업 연계는 개발재원 확보 측면에서 권장되는 방식이지만,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계획된 추진 단계를 이행해 나가는 사업은 찾아보기 쉽지 않음. 베트남 후에성, 후에시와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동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의의가 있음

#### (5)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 사업관리 및 현황 분석

- (ODA 집행 부진) 베트남 재무부는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지방 ODA 집행액이 총 1조 1천억 동(4,790만 달러)으로, 연간 목표치의 1.73% 밖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발표 (한국국제협력단 2021a)
  - 베트남 내 63개 지방성 중 37곳은 ODA 자금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15곳에서 3%의 수준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 재무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외국 전문가 파견 및 수입 기계·장비 운송에 대한 어려움, △일부 사업의 사업 장기화로 인한 입찰 비용 및 일정 조정과 부지 정리 관련 제약사항, △투자 또는 입찰 절차 지연을 원인으로 분석
- (KOICA 사업 계획 변경)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초청연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베트남인들의 출입국 제한으로 한국 전문가가 현지에 파견되는 형태로 변경

- 국내 전문가의 해외 파견은 코로나19 이전에 비교적 자유롭게 1주일 내외의 파견도 다수 차지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는 현지 입국 후 시설 격리 기간을 포함한 기간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단기 파견 수요는 원격 근무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의 장기 파견에 한해 안전성 검토 후 추진되는 상황

### 3) 인도네시아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 사례 및 시사점

#### (1) 코로나19 관련 국토·도시 부문 현황 및 대응 정책

##### □ 코로나19 관련 동향 및 사회·경제적 영향

- 인도네시아는 21년 6월부터 코로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현재(7.15 기준) 누적 확진자 수 2,726,803명, 일일 확진자 수 56,757명, 일일 사망자 수는 982명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sup>39)</sup>
  -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률 13.4%, 2차 접종률 5.5%로 다소 낮아, 8월부터 하루 200만 명 이상 접종을 실시할 계획
- '20년 4월부터 시행된 '대규모사회적제한조치(PSBB<sup>40)</sup>)'를 총 9회에 걸쳐 시행한 후 올해 1월10일부터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보건수칙 감독 강화를 위한 '사회활동제한조치(PPKM<sup>41)</sup>)'로 전환하여 분야별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건설사업의 경우 엄격한 보건수칙 준수 하에 현장 정원의 100%에 대해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39)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홈페이지 코로나 19 공지 게시판 '코로나 19 확진자 및 백신법증 현황 (7.15)' 및 '코로나 19 관련 인니 언론동향(7.10-12): 비상사회활동제한(PPKM)조치 실시 지역 확대' 출처: [https://overseas.mofa.go.kr/id-ko/brd/m\\_23654/list.do](https://overseas.mofa.go.kr/id-ko/brd/m_23654/list.do) (접속일: 2021년 9월 3일)

40) PSBB : Pembatasan Sosial Berskala Besar (Large-Scale Social Restriction)

41) PPKM : Pemberlakuan Pembatasan Kegiatan Masyarakat (Public Activity Restriction)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네시아는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0여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2.07%)을 기록. 인도네시아 정부는 '20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대부분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관련 예산을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건설업의 성장률은 평년 대비 감소했으나 타 산업에 비해 타격이 적은 편임<sup>42)</sup>

#### □ 코로나19 이후 국토개발부문의 대응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년 마다 수립되는 장기개발계획(RPJPN<sup>43)</sup> 2005-2025), 5년 단위의 중기개발계획(RPJMN<sup>44)</sup> 2020-2024)을 바탕으로 매년 국가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21년 국가실행계획인 RKP<sup>45)</sup> 2021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가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건의료, 사회보장, 인적자원개발, 투자유치를 위한 구조개선, 통상교역 촉진, 관광 및 인프라 분야 회복을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함. 특히 인프라 분야는 '20년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중단 및 보류됨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은 산업 중 하나로, 고용유발계수가 높아 정부는 인프라 산업 회복을 통해 경제 회복을 주도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의 '21년 예산 편성은 백신보급과 함께,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올해 연말까지 인구의 70%인 1억 8천 750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 접종한다는 계획으로 약 3억 6천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

42) KOTRA 해외시장뉴스 보도자료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21.2.19) 출처: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7228> (접속일: 2021년 9월 3일)

43) RPJPN : Rencana Pembangunan Jangka Panjang Nasional (National Long-Term Development Plan)

44) RPJMN :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 (National Medium-Term Development Plan)

45) RKP : Rencana Kerja Pemerintah (Government Work Plan)

---

- 인프라 부문 예산은 '20년 281.1조 루피아에서 '21년 417.4조 루피아로 48.4%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프라 프로젝트 재개를 통한 고용창출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음

- 인프라 프로젝트는 주로 기초 서비스 제공, 연결성 향상, 경기 회복의 세 가지 목적으로 구분되며, 기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0,706채의 연립주택과 53개의 댐 건설을 추진하고, 약 3,900km의 관개시설 정비와 600km에 달하는 새로운 관개시설을 신설하는 계획

- 지역 간 연결을 위해서는 965.4km 상당의 도로를 정비·신설하고, 26.9km의 교량, 446.56km의 철도, 10개의 공항도 추가로 건설할 예정

#### □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위축 해소를 위한 투자관리기구 및 국부펀드 설립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해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투자관리기구 (Indonesia Investment Authority, INA)를 설립하고,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를 조성하여 투자 유치 활동에 착수하고 미국, 일본, UAE, 캐나다 등과 투자 논의를 진행

- INA는 자체 출자와 주요국 투자를 바탕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하여, 주요 투자 파트너와 공동투자 형식으로 다수의 서브펀드를 구성하여 도로, 공항, 항만 등 자국 내 다양한 인프라 분야에 투자할 계획

-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20억불 투자 의향서 제출

-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인니 해양투자조정부 장관 및 국영기업부 장관 일본 방문시 국부펀드에 40억불 투자 논의

- (UAE) 아부다비투자청(ADIA), 일본 이상의 투자규모를 논의 중이라고 발표

- (캐나다) 캐나다연금펀드(CPPIB), 유료도로 사업 대상 20억불 규모 투자 검토

- (네덜란드) 연금펀드(APG), 15억불 규모의 투자 검토

---

## (2) 인도네시아 개발협력사업 사례: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

### □ 추진배경

- (도시·환경 문제) 현재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인구 1,056만 명의 대도시로, 인구 집중으로 인한 도시 팽창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인프라개발로 인한 교통체증, 식수고갈 등 도시 문제가 심각하며,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여 지진 발생이 잦고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로 2050년에는 자카르타 전역이 해수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황임
- (국가 불균형 성장 문제)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Java)섬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성장이 집중된 지역으로, 국토의 6.7%에 해당하는 자바섬에 국가 전체 인구의 56.6%, 국가 GDP의 58.5%가 집중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성장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사업 공식 발표) 조코위 대통령은 '19. 4월 재선 성공 이후, 자카르타의 도시 및 환경 문제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동부 칼리만탄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2기 내각의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음

### □ 추진체계

- (사업추진 근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20. 1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21년 우선처리 법안 목록에 '신수도 법'(가칭)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법안 초안에 대해 정부 부처 간 협의 중이며, 국회에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음
- (총괄기관)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이전 사업 전담부처를 신설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법적 근거 미비로 신설되지 않았음. 조코위 대통령은 수도이전 계획 발표 당시 국가개발 계획을 주관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를 수도이전 총

괄기관으로 지정하였음

- (수도이전전담 범정부T/F) 인도네시아 정부는 '19. 10월 국가개발기획부 장관 지휘 하에 수도이전전담 범정부T/F를 구성하고, 9개 분야별 소관부처가 참여하는 Working Group 운영을 통해 분야별 개발전략 및 계획 수립을 추진

그림 4-12 |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전담 범부처T/F 구성 및 관계부처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2020, 저자 제작성.

#### □ 주요 업무 추진경위

- (수도이전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수도이전 마스터플랜은 국가개발기획부에서 수립하며, 타당성조사 용역(McKinsey Indonesia 수행, '19. 10~' 20. 4)을 통해 입지, 인프라 수요 및 사회·경제영향 분석, 마스터플랜 컨셉 및 거시적 공간계획 수립, 자원조달 및 투자유치 계획, 수도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마스터플랜 용역(McKinsey Indonesia 수행, '20. 6월~현재)을 통해 현재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계속 추진 중
- (신수도 도시계획·디자인 수립 추진) 인도네시아의 국가 주요 인프라 건설 담당기관인 공공사업주택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에서 신수도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며, 공공사업주택부는 '19. 9월부터 신수도 컨셉 디자인 공모를 1차(국내 도시계획가, 건축가, 국민 대상 공모)와 2차(해외 전문가 대상 공모)에 걸쳐 실시하여 5개 당선작을 선정하고, 협업팀을 구성하여 신수도 도시디자인 수립 중(신수도 정부핵심구역 6, 000ha 범위)

---

## □ 사업 계획

- (사업규모)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 Penajam Paser Utara 지역 약 32만 ha 지역을 신수도 및 확장지역으로 개발, 총 사업비 466조 루피아(약 40조 원)
- (재원조달방안) 정부재정 19.2%, PPP 사업 54.4%, 민간 및 국영·지방공기업 26.4%
  - 정부재정사업 : 대통령궁 및 군·경 본부, 토지매입 및 기초인프라, 외교공관,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관사 등
  - 민관협력사업(PPP) : 기초 인프라 및 부대시설,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청사, 공무원·군·경 관사, 교육시설, 의료시설,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 민간부문 및 국영·지방공기업 : 공공주택, 고등·사립 교육기관, 과학연구시설, 상업시설, MICE 산업 등
- (추진일정)
  - 수도이전법 제정, 전담부처 신설, 기본설계 완료 및 건설 착공('21.08.17 계획, ~2021년)
  - 1단계 개발 (정부핵심기능 이전, ~2024년)
  - 2단계 개발 (수도 인근 위성도시, ~2030년)
  - 3단계 개발 (수도권 광역 대도시권 개발 완료, ~2045년)

그림 4-13 |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사업구역 구분

구분	면적 (Ha)	기능	인구	개발시기
1	6,596	대통령궁, 정부청사, 국회 등 핵심기능	30만	2021~24
2	56,181	교육, 의료·헬스, 상업업무, 과학연구, 스포츠, 혁신 등 6개 컨셉의 위성도시 포함	138만	2023~30
3	256,142	수도확장지역	214~237만	2030~40
		방호 및 보안지역		2021~30
		보호림 지역		



자료: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발표자료.

### (3)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 관련 한-인니 개발 협력 현황

#### □ 한국 국토교통부-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간 '수도이전 및 개발 협력 MOU'

- (배경) '19. 11. 25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국토부-인니 공공사업 주택부 간 업무 협약 체결 및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 합의
- (목적) 한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관련 정보공유,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한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 및 상호 이익 증진

- (기간) '19. 11. 25로부터 3년
- (협력분야) 수도이전 관련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도시개발
  -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디자인
  - 공공사업(도로, 교량, 수자원, 댐, 홍수토제, 수도공급, 배수시스템 등)
  - 주택 개발 및 건축물 설계
- (협력형태) 전문가 파견, 역량개발, 기술지원, 경험·지식 등 정보 공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급, 5급 각 1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명 파견('20. 1~현재)
  - 수도이전 사업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수도이전 온라인 공동세미나 개최('20. 12월), 인도네시아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실시('20. 8~'20. 12) 등

□ 한국 기획재정부-인니 국가개발기획부 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MOU'

- (개요) 기재부 주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 프로그램(KSP)의 새로운 모델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통한 도시·지역 개발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 기재부-인니 국가개발기획부 간 협약 체결('20. 1. 13), 3년 이상 신수도 건설 관련 기획·계획수립 등 매년 5개 내외 과제 지원(연 20억 원 수준)
- (목적) 도시 및 지역 개발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관련 규정 개선, 타당성조사 수행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책 자문 패키지를 통한 경제 혁신 촉진
- (기간) '20. 1. 13로부터 5년
- (총괄관리기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 (협력분야) 수도이전을 포함한 도시 및 지역개발 계획 혁신, 정책수립, 전략 개발, 모니터링 및 평가 등
- (협력형태) 지식·기술지원, 심포지엄·세미나·워크숍 등 공동 개최, 한국 자문관 파견, 교육·인턴십을 위한 전문가 및 직원 교류 등

- '20년도 EIPP 사업 과업 관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인니 정부(국가개발기획부) 간 협의를 통해 아래 4개 과제 도출, 개별 과업 수행자 선정 후 용역 진행 중('20. 11월~'21. 9월 준공 예정)
  - ① 신수도 개발 종합계획 수립
  - ② 수도이전에 따른 자카르타 수도권 경제 개발 전략 수립
  - ③ 신수도 개발 자금조달 방안
  - ④ 신수도 에너지전환 마스터플랜 및 에코스마트시티를 위한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 현재 '21년도 EIPP 과업 협의 중(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선정)

□ 한국 국토교통부 주관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 (배경)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계획단계에 국내 기업,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하고자, 인니 정부에 사업 신청 독려하여 공모 참여, 최종 선정되어 1차('20년) 사업 완료 및 2차('21년) 사업 추가 선정
- (목적) G2G 기반의 스마트시티 협력사업을 통한 우리나라 주도의 스마트시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도모
  - 한국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국토부 주관 지원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해외 정부 및 지자체 신청 사업을 선정하여 약 5억원 지원
- (기간) 1차사업 : '20. 8월~'21. 5월(준공), 2차사업 : '21. 9월(착수예정)~'22. 6월
- (총괄관리기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 (과업내용)
  - 1차사업('20년도) : 인도네시아 신수도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및 시범사업(스마트 시티 기본계획, 교통, 물관리 분야) 발굴
  - 2차사업('21년도) : 인도네시아 신수도 주택 시범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

#### (4) 코로나19 이후의 신수도 건설 개발협력사업의 여건변화

##### □ 연관 사업 지연

- (수도이전 사업 자체적인 지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등 정치적 이슈에 따라 신수도법 제정이 지연되어, 수도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부처별 하위계획 수립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었음
- (수도이전 사업 지연에 따른 연쇄적 지연) 수도이전 협력을 위해 진행한 개발협력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도이전 마스터플랜 및 도시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함께 구체화되어야 하는 사업이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 추진 업무 및 기타 관련 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개발협력사업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들이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여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일부 내용의 조정이 불가피하였음

##### □ 해외 이동 제한에 따른 사업수행 및 관리 제약

- (비대면 업무에 따른 제약)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사업 수행자의 현지 여건 조사가 불가하여 제공되는 자료로 대체하고,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 대면 회의가 불가하여 온라인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 진행하였으나, 현지 여건 파악 및 원활한 의사 소통에 제약이 있었음
- (한국 방문·답사 불가) 협력사업 중 인도네시아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연수 프로그램,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미나·워크숍 등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오프라인 진행 불가로 온라인으로 대체 진행하였으나, 오프라인 행사 개최 대비 실효성이 부족하였음.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협력사업에 따른 한국의 주요 현장 및 사례 답사를 매우 중요시하나,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답사가 불가능한 점을 매우 아쉬워하였음

---

## □ 해외 투자 위축

- (수도이전 사업 해외 투자 의향 관련) 수도이전 사업 관련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IDFC), 일본 소프트뱅크社, UAE 모하메드 왕세자 등이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및 해양투자조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신수도 건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의향을 표명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및 사태 악화 이후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수도이전 사업 지연에 따라 잠재 투자자가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신수도 건설 운영위원회) 조코위 대통령은 신수도 투자 유치를 위한 민간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국제적 저명인사들로 신수도 건설 운영위원회를 구성('20.1월)하였으나 이후 실질적 활동 부재
  - UAE 모하메드 왕세자,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영국 토니 블레어 전 총리 등 참여
- (국부펀드 조성)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 건설을 비롯한 인프라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활성화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써, 투자관리기구(INA)를 설립하고 국부펀드(SWF)를 조성하여 운영

## □ 정부 재정 악화에 따른 해외 개발협력사업 의존도 상승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년 초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세계은행(World Bank) 등으로부터 긴급 예산 명목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받고, 경기 부양을 위한 국가경제회복 프로그램에 약 695조 루피아(약 55조원)를 투입 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실시함
-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20년 약 1,039조 루피아(약 82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국가개발계획에 따른 인프라 사업 및 신수도 건설 등 중장기 인프라개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 재정 부담이 적은 민관합작투자(Public-Private Partnership, PPP)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

---

으며, 기존 민관합작투자 사업의 리스크 감소 및 사업성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현재까지 민관합작투자 사업의 경우 투자자에 대한 보호책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정부 차관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최근 한국 수자원공사가 수주한 약 2,000억원 규모의 까리안 광역상수도 사업은 한국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금융 지원과, 민관합작투자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음

#### 4)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의 과제

- 코로나19 이후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관계전문가와외의 면담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는, 코로나19의 영향 외에도 국토·도시 분야의 부문 특성에 따른, 개발협력 정책방향의 과제가 있다고 응답함
- 본 절에서는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후속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도시개발지원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베트남의 후에시 도시개발협력사업 사례와, 국가 간의 적극적인 협력의지에 따라 시작되어, 많은 관계기관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19사태로 사업의 추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협력사업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의 영향을 넘어,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은 사업의 단계별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차이가 있는데, 각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 (1) 사업기획 및 사전 준비단계

### □ 수원국의 수요 및 여건 검토

- (수요 및 중복지원 여부) 수원국의 현황 및 특성은 개발협력사업 사전준비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함. 사례국가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모두 대외적으로 높은 성장가능성을 가진 전략적 협력대상국으로 평가되고 있어, 수많은 선진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다수의 개발협력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고 있음
  - 중복된 개발협력 추진시 수원국의 집중도 분산에 따른 사업효율성 저하, 사업결과물의 활용도 저하 등으로 개발협력사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선정 및 추진 전 단계에 유사한 개발협력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절차 필요
  - 특히, 국토·도시 분야의 사업은 수많은 관계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지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전점검 필요

###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지원사업의 중요성 인식제고

-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틀을 제공하는 도시계획수립은 도시개발을 위한 교통, 상하수도, 에너지 인프라 등 공공인프라 공급의 진행에 필수적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신도시개발사업의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국토교통부와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도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사업을 지원해 왔으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3단계의 도시개발계획을 지원하면서, 법정계획 승인 및 도시등급 승격과 같은 성과를 창출한 사례는 후에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이 유일
- 베트남 후에시 사례에서 보듯이 마스터플랜은 해당 국가 및 도시의 법정계획으로서 실효성이 강하여, 다양한 부문별 개발계획과 실행사업으로 연결되는 후방연계효과가 큰 특징을 지니므로, 전략적으로 중요(홍나미 2017, 155)

---

□ 현지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사업수행기관 및 총괄기관 지정 관련

- 국토 및 도시부문 정책 및 계획 수립 지원 사업의 경우, 수원국 수요와 현지 여건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결과물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이 큼. 특히 제도역량 및 인프라 부문에서 한국과 수원국간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요에 맞는 결과물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업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 뿐만 아니라, 현지 사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 유사 사업 실적 등을 보유한 사업 수행자의 참여가 필요함
- 도시개발사업이 민간기업의 진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다각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
- (통합관리 필요)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국내의 여러 부처와 기관이 수원국의 여러 정부부처, 지자체 등과 개발협력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큼. 이런 경우 부처·기관별 예산 편성 후 사업 대상 선정 절차가 각각 진행됨에 따라 유사한 사업이 중복 추진될 소지가 있어, 규모가 큰 해외 도시개발협력사업의 경우 관리 총괄기관 지정을 통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 총괄기관 일원화 사례로,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인 국토부 주관의 'K-City Network 사업' 과 기재부 주관의 '경제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사례가 있음. 위 두 사업은 유사한 시기에 착수되었으며, 각 사업 대상기관이며 수도이전 추진 기관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국가개발기획부에서 요청받은 과업 중 신수도 도시교통 시스템, 수자원관리 시스템, 폐기물관리 시스템 등의 분야에 대한 사업이 중복 신청됨에 따라 두 사업에 대한 총괄기관을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일원화하여 중복 과업을 조정하는 협의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베트남 사례의 경우, 코이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기간에 걸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후속사업연계를 위한 의사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 2) 사업추진단계

### □ 수원국 협조 관련 과제

-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실행력 있는 국토 및 도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및 다자은행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구득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협력대상국 정부와 사업수행기관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지원하여, 사업 진행 및 후속사업 연계 방향을 염두에 둔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협조 유도
- (정보 접근 제한)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관련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은 사업의 초기(마스터플랜 수립 및 도시계획 수립 진행)단계부터에서 진행됨에 따라, 해당 협력사업의 과업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추진중인 업무에 포함되기도 하였음.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진행하는 마스터플랜, 도시계획 업무에 협력사업 수행사 및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사전협의 시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와의 원활한 협업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 합의하였으나 실제 과업 수행 시 관련 사항 대부분에 대해 비공개 입장을 보여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문제가 있었음
  - 특히, 수도이전 마스터플랜 관련 자료의 경우 종합개발계획 수립,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등의 과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터플랜 내 주요 내용 관련 의사결정 미완료’, ‘대외비 사항으로 공개 불가’ 등을 사유로 과업 종료 시 까지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음
  - 이는 해당 정보가 협력사업 대상 기관인 공공사업주택부 소관이 아님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 사전에 과업 수행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기관을 명시하여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음
- (정보교류를 위한 충분한 협의 필요) 마스터플랜 수립이 후속개발사업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사업집행기관의 역할이 중요. 협력대상국의 의사결정자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공의 업무지원과 사업추진의지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사업추진단계에서의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후속사업에 대한 방향을 조기결정하고,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협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임

### 3) 사업 완료 및 사후 단계

#### □ 개발협력의 연속성 확보 및 후속사업 연계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다각적 노력 필요

- 베트남 후에서는 1차사업이 추진된 이후 10여 년 동안 KOICA를 비롯하여 1차 사업에 참여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후속 사업 연계를 위한 협력 관계를 유지
  - LH 공사는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2019년 후에성에서 관리하고 있는 쩌마이 랑코 경제구역 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가고 있으며, 후에시 마스터플랜에서 신규 개발지역으로 계획된 후에시 동측 안번정 지구에는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후에시 스마트 미디어 시티”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sup>46)</sup>
- 2021년 4월에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KOICA의 공적개발원조에서 시작된 중부 지역 도시개발사업이 민간 기업의 진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있는 공공기관, 경제단체, 기업 등 이른바 ‘베트남 팀코리아’ 를 구성하여, “한국-트어티엔후에성 경제협력증진간담회”에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와 함께 참석하였으며, 베트남 측에서는 베트남 당중앙위 대외관계위원장, 외교부 차관보 겸 국제경제국장, 후에성 당서기 등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결과 도출 기대
-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관련 개발협력사업의 경우, 신수도 계획 수립 참여를 통한 향후 국내 기업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며, 기 완료된 '20년도 K-City Network 사업의 경우 결과물을 바탕으로 신수도 도시계획, 물관리 계획, 교통 계획 등에 한국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

46) 현지 언론사 기사 “Thua Thien -Hue to build first smart media city in Vietnam”, 출처: <http://hanoitimes.vn/thua-thien-hue-to-build-first-smart-media-city-in-vietnam-42510.html>

---

있었으나, 이를 지속적인 국내 기업 참여 확대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조치가 미비

- 최종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분야별(스마트시티 시범단지,물관리 시스템, 교통 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한국 기관·기업들은 현 시점에서의 신수도 사업 참여는 검토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향후 신수도 관련 법 제정 등 사업추진 근거 확보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및 자원 조달 계획 발표 후 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성 검토를 위한 판단 근거가 확보된 후에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임

- (사후관리 필요성)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초기 단계부터 우리나라 정부 및 국내 사업주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원국 정부 의사결정자와의 협의과정에서, 후속사업에 대한 방향을 기획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필요. 공공의 신속한 업무지원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여 수원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개발협력사업 주관기관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CHAPTER 5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토·도시부문의 개발협력  
추진방향

1. 코로나19 이후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여건 변화  
및 정책방향 ..... 141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정책과제 ..... 147
3.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 153



---

## 05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토·도시 부문의 개발협력 추진방향

본 장에서는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코로나19 대응전략 및 정책 동향 검토,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개발협력부문의 정책대응과 개발협력현장의 여건 변화 분석,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분석 등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국토·도시부문의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향후과제를 제시한다.

### 1. 코로나19 이후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여건 변화 및 정책방향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의 여건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전략 및 정책동향을 분석하였음
  -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의 여건변화는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 개발협력부문의 여건 변화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임
- 또한,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사업현장에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일어난 직간접적인 영향과 과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수행함
- 이와 같은 다양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의 강점과 약점,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상황이 초래한 기회와 위협요인을 확인하고,

---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전략 도출의 근거로 삼고자 하였음. 코로나19 이후 국토·도시 국제개발협력 부문의 SWOT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 SWOT 분석

### □ 강점

- 감염병 위기에 대응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도시개발 및 관리를 위한 높은 ICT 기술 수준 및 인프라 구비
  - 도시의 회복력 강화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 시티 등 수요가 높은 도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높은 기술력과 정책부문의 지원 의지
- 비대면 전환을 위한 인프라 및 개발협력사업기관의 대응 수준 우수
- 서구 공여국과 다른 국토·도시발전 경험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도시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 제도, 정책경험 보유 및 공유 가능

### □ 약점

-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의 상위비전과 전략부재
  - 국토·도시 부문은 주요 국제기구의 감염병 및 기후변화의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전략분야이나,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국가계획인 국제개발기본계획에서는 국토·도시부문을 전략분야로 다루지 않음
  - 감염병 및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정책개발 및 전략수립에 있어 국토·도시 부문이 우선순위를 갖지 못함
- 개발협력 사업기획 및 운영과정의 분절성으로 인한 개발협력의 효과성 저하
  - 유무상 원조사업이 이원화 되어있고, 무상원조 사업은 30여개 이상의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분절적으로 수행

- 과제 발굴 및 사업기획이 상위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절적, 상향적으로 이루어짐. 이에 따른 정보공유체계의 분절화로,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접근이 어려우며, 이는 코로나19 등의 위기 상황에서 더욱 위기 요인으로 작용
- 스마트시티 추진 개발협력사업기관이 각각의 부처와 별도의 MOU를 맺거나, 사업 발굴 및 선정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중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 발생
- 현지 네트워크 및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현지 전문 인력 부족으로 현지화 추세 대응 미흡
- 국제사회의 의제 선도 및 의제 형성 참여를 위한 역량 미흡
  -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감염병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의 디지털 전환, 순환경제, 공공공간, 재난관리 등 한국이 우위를 지닌 분야가 많음에도, 국제사회의 의제형성 참여 및 선도 역할 미흡
- 현지조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업무협약이 필수적인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의 특성상, 국경봉쇄 및 이동제한 등의 감염병 확산 대응 정책이 사업 발굴, 진행, 관리 및 평가 등 사업의 전 단계에 영향
- 코로나19 이후 사업수행여건의 악화는 국토·도시 개발협력 민간부문의 재정 및 인력운용측면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장기적으로 부문전문성의 악화 우려

#### □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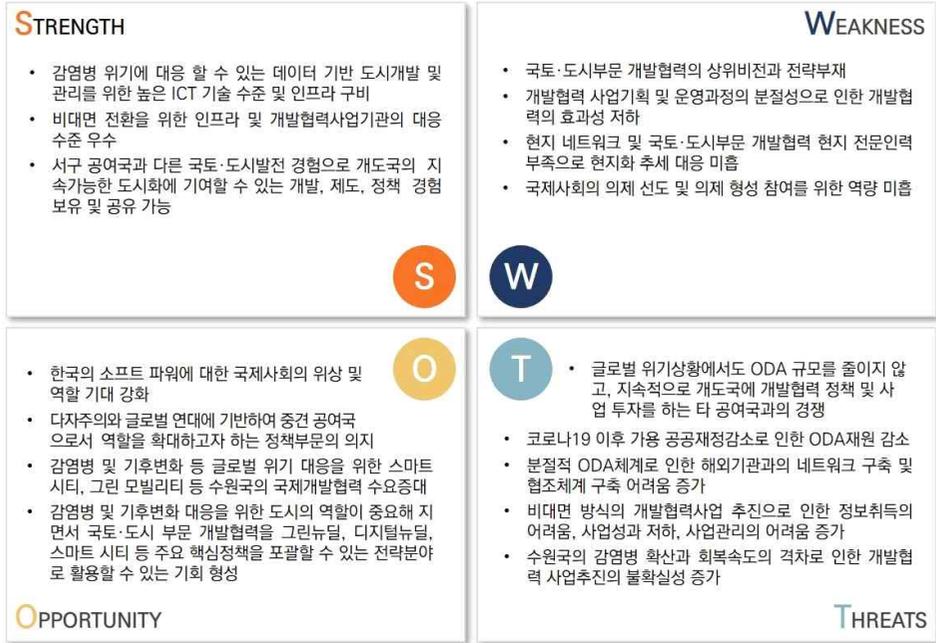
- 코로나19 초기대응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상 및 역할 기대 강화
- 다자주의와 글로벌 연대에 기반하여 중견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부문의 의지
  - 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참여 및 지속적인 다자외교 강화 노력
- 감염병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스마트 시티, 그린 모빌리티 등 수원국의 국제개발협력 수요증대

- 
- 감염병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및 지역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지면서,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을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스마트 시티 등 주요 핵심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전략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형성

#### □ 위협

- 글로벌 위기상황에서도 ODA 규모를 줄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도국에 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 투자를 하는 타 공여국과의 경쟁
- 코로나19 이후 가용 공공재정감소로 인한 ODA재원 감소
  - 개도국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의 당위성 확보 중요
- 분절적 ODA체계로 인한 해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조체계 구축 어려움 증가
- 비대면 방식의 개발협력사업 추진으로 인한 정보취득의 어려움, 사업성과 저하, 사업관리의 어려움 증가
- 수원국의 감염병 확산과 회복속도의 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증대로 개발협력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증가

그림 5-1 |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SWOT 분석



자료: 저자작성.

## 2) 포스트 코로나시대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의 전략적 방향 설정

### □ 도시의 디지털 전환 및 녹색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의제 선도 및 진출 확대 (S0전략)

- ICT기술 우위 및 장점을 활용하여,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의 비대면 전환 트렌드에 대응 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활용여건 개선
- 도시의 녹색회복 및 더 나은 재건 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관련 개발협력사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모멘텀을 기회로 활용하여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의 전략적 진출 확대 도모
- 국토·도시 정책경험 공유를 위한 비대면 역량강화 콘텐츠 품질 제고

- 심도 깊은 지식공유 콘텐츠 기획 및 개발로 협력국 수요 대응형 콘텐츠 제공
- 서구 공여국과 다른 우리만의 국토발전의 경험의 강점을 활용하되, 코로나 이후 녹색전환 및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대면 역량강화 콘텐츠 기획 및 개발

□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비전 수립으로 우리나라 국토·도시 개발협력부문의 역량 및 경쟁력 강화 (WO전략)

- 국제개발기본계획에 국토·도시 분야를 우리의 강점분야로 선정하고, 전략목표 및 과제와 지원전략을 제시
- 수립된 국토·도시부문의 정책 비전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수립
- 그린뉴딜, 스마트시티 등 비교우위분야에 대한 전략적 사업발굴 기획 및 관리
- 코로나19 이후 여건변화를 반영한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가이드라인 정비로 사업수행의 여건 개선 및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량 강화

□ 수원국 맞춤형 국토·도시 개발협력 추진으로 불확실성 완화 및 효과성 제고 (ST전략)

- 수원국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한 접근으로 비효율적인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협력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 패키지 사업발굴 및 기획
- 협력국의 디지털인프라 개선 및 지원 확대로 상생협력 기반 마련
- 비대면 전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원국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품질제고

□ 국토·도시부문 현지네트워크 강화 및 자원 다각화 (WT전략)

- 국제기구 및 현지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현지파트너십 확대
- 수원국 사업시행기관 및 현지사무소와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협업체계 구축으로 현지대응력 강화
- 현지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사업가이드라인 정비 등 업무체계 고도화

- 
- 공공재원감소에 대응하여, 개발금융기관 활용, 민관 협력 지원 등 재원 다각화 방안 모색

##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정책과제

### 1) 개발협력 정책부문의 개선과제

□ 국가상위전략계획에 국토·도시부문을 강점분야로 선정하고, 지원전략을 명시

- 코로나19 이후 국제협력여건 변화를 고려한 국토·도시부문의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비전 수립을 위해, 국가 상위 전략계획인 국제개발기본계획에 국토·도시 분야를 우리의 강점분야로 선정하고, 지원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사회와 우리나라가 개발협력부문에서 이루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임.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에서는 코로나19이후의 회복 및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도시 및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도시 및 지역단위의 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녹색회복과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 기반강화 및 성장 견인, 그린 뉴딜 ODA협력 확대 등을 위해 도시부문 개발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용하는 전략 검토
  -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는 수원국에서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도시발전의 틀을 제공하는 도시계획수립은 도시개발을 위한 교통, 상하수도, 에너지 등 공공인프라 공급의 진행에 필수적이며, 마스터플랜은 해당 도시의 법정계획으로서 실효성이 강하여 다양한 부문별 개발계획 및 실행사업으로 연결되는 사업연계효과가 큰 특징을 지니므로, 전략적으로 지원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 수립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의 정책비전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 수립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는 도시 분야 개발협력 사업기획 및 세부전략 수립 필요
- 도시 분야의 개발협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개도국 도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발전의제에 부합하며,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이룬 경제성장과 국토발전의 경험이라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지닌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서, 상생의 개발협력을 위한 전략 프로그램 사업발굴에 적합
- 코로나19 이후 해당부문의 다양한 개발수요가 부상하고 있으므로, 현지의 문화, 제도, 인적자본 등을 고려한 사업설계 및 사업완료 후 운영 가능하도록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사업기획필요
- 특히 국토 및 도시부문 정책 및 계획수립 지원 사업의 경우 수원국 수요와 현지여건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효과성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현지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용가능성 높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사업수행기관 및 전문가의 참여 필요
- 사업기획단계부터 감염병의 위기와 같은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설계하도록 하고, 수원국 현지에 맞는 적정기술적용 등 수요 대응형 개발협력 프로젝트 기획 필요

□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 기획 및 운영과정에서의 분절성 개선

- 유상원조사사업과 무상원조사사업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무상원조사사업은 30여개 이상의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중복사업 추진 및 개발협력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추진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나, 사업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
- 융복합 사업연계기획을 장려하고 있으나, 국가 최상위 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이 부재한 융복합 사업이 기획될 우려 존재

- 사업의 기획과 발굴과정이 상이한 시행기관간 융복합 사업의 기획과 연계는 쉽지 않아, 개별 시행기관 사업들이 병렬적으로 연계되는 묶음방식의 사업추진에 그칠 우려 존재
- 국가의 최상위 전략과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략적 융복합 사업 기획이 바람직
-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국내 여러 관계부처 및 수원국의 여러 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개발협력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규모가 큰 해외도시개발협력사업의 경우 총괄관리기관 지정 등 통합관리 및 지원 방안 필요

##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

□ 장기계획을 포함하는 프로그램형 사업발굴 및 비교우위분야에 대한 전략적 사업기획 및 관리와 민간부문의 진출 활성화 지원

- 국토·도시 분야의 부문 전략에 따른 프로그램형 사업발굴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같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추진 체계 마련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신규사업 수요 및 사업추진여부 심사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의 교환에 큰 어려움을 야기함. 이는 대개 “N-2”체제라고 통칭되는 2년의 시차를 두고 사업을 발굴하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신규사업발굴 체제에서, 팬데믹의 영향이 장기화 될 수 있는 결과를 야기
- 특히, 그린인프라, 스마트시티, 공공공간 개발 등 디지털 전환과 녹색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우리가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에 대해 전략적 사업기획 및 발굴 지원 필요
- 우리나라 민간부문이 전략적 비교우위를 지닌 부문의 경우 사업기획단계부터

---

민간부문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기업진출의 마중물 역할과, 위협완화 역할 제고하고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의 비대면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

-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의 추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임. 대상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국토·도시부문의 개발협력사업에서, 현지조사를 비대면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국내전문가의 협력국 파견이 위기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역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 이외에도, 자가격리 기간의 기회비용을 상쇄할 만한 충분한 기간확보 및 관련한 사업관리 지침 보완 등의 지원필요. 이를 위해 장기 파견이 가능한 전문가 양성 및 파견기간 장기화 지원 및 관리방안 검토필요

□ 현지대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다자협력 확대, 협력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확대 등

-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 수원국 사업시행기관 및 현지사무소와 현지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필요
- 디지털 전환 및 현지화는 돌이킬 수 있는 추세이므로, 현지전문인력 확보 및 현지사무소 활용을 위한 예산확보 및 사업 가이드라인 정비 등 업무체계수립 고도화 필요

□ 디지털 인프라 개선 및 지원 확대

- 협력국의 열악한 디지털 인프라 현황은 개발협력사업의 발굴, 추진, 및 관리 전 단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개발협력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 개선 및 지원 확대 필요
- 협력대상국 뿐 아니라, 현지에서 일하는 해외파견자 및 전문가에게도 비대면 전환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의 개선은 매우 중요

---

## □ 비대면 역량강화 콘텐츠 품질 제고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여, 지식공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품질 제고
-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킨 개발협력사업의 비대면 추진이 장기화 되고 있으며, 상황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역량강화 사업의 추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온라인 연수 콘텐츠 개발 및 품질제고 등 관련분야 인프라 구축 노력이 필요함
- 서구 공여국과 다른 우리만의 경제성장과 국토발전의 경험, 빠른 시간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경험 등 우리만의 강점을 개발협력에 있어서의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및 기초자료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 우리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이 전혀 다른 협력대상국에 적용이 가능한 정책경험의 공유가 되기 위해, 우리나라 발전 경험의 성과와 실패,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성찰을 제공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콘텐츠 개발

## □ 국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도시 분야 ODA사업 재원 다각화

- 코로나19 이후 공공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긴급대응, 보건 분야 지원, 취약 계층 지원 등으로 변화하며, 인프라 등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이 다소 감소하였고, 민간투자 위축 및 사업 형성 및 추진이 지연되며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투자도 위축됨
- 또한, 협력국의 경제·사회적 여건 악화로 해외사업에 대한 현지 여론이 악화하며 현지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력이 감소하는 등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점을 보임
- 국제적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다각화가 요구되며, 특히 사업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부문을 활용한 재원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고 사업 초기단계부터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함

-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이 없도록 역량강화 및 재정지원 방안을 다양화하고, 민간사업 연계형 ODA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민간부문이 해외사업 추진 시 겪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요구됨
- 특히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의 연속성 확보 및 후속사업 연계를 위해서는 사업초기 단계부터 우리나라 및 수원국 정부와 사업주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사업에 대한 방향을 기획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수원국의 의지를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과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 도모

### 3)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 국익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관련 기관 및 기업 간 투명한 정보공유 및 정보접근성 보장
- 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별 정보교류체계 구축으로, 민간부문의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 및 추진 지원
- 다양한 개발재원 확보 및 지원방식과 파트너십 다변화 등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 부문 간 정보 및 자료 공유를 위한 연계체계 구축으로 협력국에 대한 정보지원, 필수 인력에 대한 방역 및 해외이동 지원 등 공공부문의 지원 역할 강화
- 개발협력 분야 과업수행여건 개선 지원(인건비 현실화) 등 국토·도시 분야의 섹터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이 개발협력 부문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증거기반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방식의 기초는 유지하되, 달라진 업무여건과 부문특성을 고려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체계 개선안 마련(성과지표 다양화 및 섹터맞춤형 성과평가시스템)

- 
- 협력국 수요 중심의 사업발굴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후속사업 연계를 지향
  -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원국별 법·제도적 여건 및 사업의 범위, 구조 등을 체계화한 사업추진 모델 구축을 지원

### 3.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 □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 본 연구는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위기가 초래한 개발협력부문의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됨
- 이를 위하여, 주요 국제기구 및 공여국의 대응전략 분석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여건변화 분석, 중점협력국 대상 개발협력사업 사례 분석을 통한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과제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및 해외개발협력사업 관계부처 및 관계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개발협력 현장의 여건과 과제 분석을 수행함
- 개발협력 현장에서 일어난 여건변화에 초점을 두어 수행한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국토·도시부문 국제개발협력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과제를 중단기적 대응과제와 장기적 대응과제로 나누어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음
- 한편 개발협력 현장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많고, 수원국의 상황, 사업 분야 및 추진단계별로 영향의 크기도 다를 수 있으나, 본 연

---

구는 짧은 연구기간 및 예산의 한계로 인해, 보다 다양한 분류를 통한 사례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음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도전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방향이란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탄소중립 실현 전략과 분리하여 논의될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함께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음

#### □ 향후 과제

-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영향 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2050의 과제 등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시정책논의의 동향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 주요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실현이라는 목표의 이행을 개발협력 부문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여,
- 이를 토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 도시부문 국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천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요구 됨

---

## 참고문헌

REFERENCE



### 【인용문헌】

- 국무조정실. 2020. 2020 대한민국 ODA 백서. 세종: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1.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7월 7일.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2020a. 케이(K)-스마트시티 수주지원 총력 해외4개국서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치·운영. 10월 13일. 보도자료.
- \_\_\_\_\_. 2020b. 한국형 스마트시티 국제공모 12건 선정. 4월 19일. 보도자료.
- \_\_\_\_\_. 2020c. 한-미 고위급, 코로나19 후속 항공보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5월 10일. 보도자료.
- \_\_\_\_\_. 2021a. 코로나-19 불확실성 속에서도 해외건설 351억불 달성. 1월 7일. 보도자료.
- \_\_\_\_\_. 2021b. 팀코리아 ‘5억불 아순시온 철도사업’ 참여 합의. 9월 9일.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021. 해외건설완전정복. 세종: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_\_\_\_\_. 2021c. 미래가 현실이 된 지능형 도시, 제5회 월드 지능형 도시 엑스포 개최. 9월 5일. 보도자료.
- 권구순, 김유식. 2016. 한국의 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과 역할: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새로운 도시의제간 상호연계성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6권 4호: 78-108.
- 관계부처 합동. 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 \_\_\_\_\_. 2019.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_\_\_\_\_. 2020.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_\_\_\_\_. 2021a.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_\_\_\_\_. 2021b.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 
- 기획재정부. 2020a.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4월 1일. 보도자료.
- \_\_\_\_\_. 2020b. 홍남기 부총리,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결과. 보도자료. 4월 16일.
- \_\_\_\_\_. 2020c. 한국, 미주개발은행(IDB)을 통해 중남미 코로나19 대응 지원. 5월 18일. 보도자료.
- \_\_\_\_\_. 2020d. 중미경제통합은행(CAEB), 한국 등에 지역사무소 신설 결정. 4월 3일. 보도자료.
- \_\_\_\_\_. 2020e. 제41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4월 17일. 보도자료.
- \_\_\_\_\_. 2021a. 2021 디지털이코노미포럼. 코로나 이후 시대의 디지털 혁신기술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논의. 8월 25일. 보도자료.
- \_\_\_\_\_. 2021b. 홍남기 부총리, ‘케이(K)-테스트베드 출범식’ 개최사. 8월 25일. 보도자료.
- \_\_\_\_\_. 2021c. 2021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결과. 9월 7일.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2010.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2020. 2019년도 KSP 연차보고서.
- 김민지. 2021.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전략과 그 시사점: 도시·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세종: 국토연구원.
- 맹준호. 2020. 2020년 제9회 국제개발협력포럼. 한국의 개발협력정책 방향.
- 박수영, 안미선, 조예은. 2020.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본 코로나19의 영향과 대응방안. 개발과 이슈 제61호: 7월.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박세훈, 이병재, 유희연, 안예현, 이은우. 2019.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 박세훈, 정윤희, 이병재, 유희연, 안예현, 전세련, 김민지. 2020. 국제협력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 세종포스트. 2021. 행복청,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위한 ‘팀코리아’ 출범. 신문기사. 2월 8일자.
- 안예현, 유희연, 이소영, 윤지윤, 이은미, 김민지. 2018.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안혜지·안혜정. 2020.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개발협력 현장파견인력의 임시귀국과 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제개발협력(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15(2)
- 이코노뉴스. 2021. 해외건설협회, 공적개발원조(ODA) 전담부서 신설.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전담기관 지정”. 2월 13일자.
- 임형백. 2020.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의 대응 전략.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2권 제4호: 1-26.
- 외교부. 2020a. 강경화 외교장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면담. 2월 23일. 보도자료
- \_\_\_\_\_. 2020b.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별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5월 28일. 보도자료.
- \_\_\_\_\_. 2020c.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재외동포 지원 추가 실시. 12월 6일. 보도자료.
- \_\_\_\_\_. 2020d. 유엔 최대 개발기구인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12월 11일. 보도자료.
- \_\_\_\_\_. 2020e. 기후행동을 위한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12월 11일. 보도자료.
- \_\_\_\_\_. 2020f. 한국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유엔과 협력하는 국제기구로 격상. 12월 16일. 보도자료.
- \_\_\_\_\_. 2020g.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신설. 12월 16일. 보도자료.
- \_\_\_\_\_. 2021a. 관계부처합동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7월 7일. 보도자료.

- 
- \_\_\_\_\_. 2021b. 외교부, 「비대면 여권발급 서비스 시행」, 「외교 정보 수집 자동화 절차 (RPA) 구현」 등 적극행정 성과 창출. 9월 16일. 보도자료.
- 정윤희. 2021. (국토총서 21-101) 코로나19와 국토전환. 국토연구원(편저), *고립의 시대, 회복력 있는 도시를 위한 국제개발협력*(pp. 317-335). 세종: 국토연구원.
- 정지선, 유애라. 2020. 국제사회의 SDGs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 정책과 제.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no. 21.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한덕. 2019. 스마트시티를 위한 글로벌 협력 사례 발표. 서울스마트시티서밋 2019, 10월 1일. 서울: DDP.
- 한국국제협력단. 2020a. 코이카-LH, 개발도상국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인프라분야 협업 강화. 8월 28일. 보도자료.
- \_\_\_\_\_. 2020b. K-방역 기업 국제조달시장 진출 돕는다. 9월 29일. 보도자료.
- \_\_\_\_\_. 2020c. 디지털 전환으로 포스트 코로나 개발협력 선도 준비 박차. 11월 27일. 보도자료.
- \_\_\_\_\_. 2021a. 국별 월간 개발협력동향 2021년 6월호. 내부자료.
- \_\_\_\_\_. 2021b. 미타(MIKTA) 개발협력기관 협의회 발족 및 협력 강화 공동성명서 발표. 1월 29일. 보도자료.
- \_\_\_\_\_. 2021c. 코이카, 온라인연수 노하우 알리는 웨비나 개최. 보도자료. 3월 30일.
- \_\_\_\_\_. 2021d. 코이카,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하는 예비창업가와 스타트업 모집. 6월 21일. 보도자료.
- \_\_\_\_\_. 2021e. 코이카, 유엔인구기금과 베트남 여성들에게 코로나 대응 존엄 키트 지원. 6월 22일. 보도자료.
- \_\_\_\_\_. 2021f. 코이카, 튀니지 귀국연수생들과 코로나19 대응 적극 공조. 8월 5일. 보도자료.
- \_\_\_\_\_. 2021g. 온라인연수 노하우 알리는 웨비나 개최. 3월 31일. 보도자료.
- \_\_\_\_\_. 2021h. 코로나19 극복 위한 감염병 대응 강의 다국어로 운영. 5월

- 
- 25일. 보도자료.
- \_\_\_\_\_. 2021i. 개발도상국 소셜벤처 대상 임팩트투자 통해 ESG 가치 실현하는 시범사업 실시. 7월 2일. 보도자료.
- \_\_\_\_\_. 2021j.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우주베키스탄 아랄해 위기 대응에 나선다. 7월 5일. 보도자료.
- \_\_\_\_\_. 2021k. 베트남 박장성에 코로나19 대응 긴급물품 지원. 7월 8일. 보도자료.
- \_\_\_\_\_. 2021l. 볼리비아 코로나 지원 소외 학교에 방역물품 지원. 8월 3일. 보도자료.
- \_\_\_\_\_. 2021m. 코이카, 에티오피아에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8월 20일. 보도자료.
- \_\_\_\_\_. 2021n. 네팔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위한 산소발생기 378대 재원. 8월 31일. 보도자료.
- \_\_\_\_\_. 2021o. 외교부·코이카, ‘제14회 서울 ODA 국제회의’ 성료. 9월 10일. 보도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동남아시아 1실. 2015. 베트남 향강 연안 상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동남아시아 1실. 2018. 베트남 향강 연안 상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최종보고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동남아시아 1실. 2020. 베트남 후에시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 사업 집행계획 (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동남아시아 1팀. 2015. 베트남 향강 연안 상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동남아시아 1팀, 도화엔지니어링, 한아도시연구소. 2013.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 용역 최종 보고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수출입은행. 2019. 대외경제협력기금.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경제총괄본부.

- 
- \_\_\_\_\_ . 2020a.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통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 \_\_\_\_\_ . 2020b. 수출입은행-KOFIH, 개도국 보건의료 원조에 맞춘 잡았다. 2월 18일. 보도자료.
- \_\_\_\_\_ . 2020c. 4000억 규모 글로벌 바이오헬스-K 펀드 조성. 보도자료. 4월 6일.
- \_\_\_\_\_ . 2020d. 수출입은행, 5개 개도국에 한국산 방역물품 전달한다. 5월 21일. 보도자료.
- \_\_\_\_\_ . 2020e. 수출입은행, 기업의 해외사업타당성조사 비용 지원한다. 6월 1일. 보도자료.
- \_\_\_\_\_ . 2020f. 수출입은행-LH,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선도 위한 MOU 체결. 6월 3일. 보도자료.
- \_\_\_\_\_ . 2020g. 한국개발정책학회, ‘글로벌 전환시대의 대외경제협력과 개발협력’ 콘퍼런스 개최. 12월 4일. 보도자료.
- \_\_\_\_\_ . 2021a. 한국의 개발협력(2020년 제2호).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 \_\_\_\_\_ . 2021b. 수출입은행, EDCF로 중미 5개국 코로나-19 방역 지원 나선다. 5월 27일. 보도자료.
- \_\_\_\_\_ . 2021c. 수출입은행, EDCF로 튀니지에 ‘K-디지털’ DNA 심는다. 7월 15일. 보도자료.
- \_\_\_\_\_ . 2021d. EDCF로 우즈베키스탄 중증질환 치료할 종합병원 세운다. 1월 29일. 보도자료.
- \_\_\_\_\_ . 2021e. KIEP과 신남방 4개국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9월 8일. 보도자료.
- \_\_\_\_\_ . 2021f.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ESG 펀드(가칭) 조성. 2월 22일. 보도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2020.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을 위한 동향 조사분석 보고. 국토부 발주 용역 보고서.

---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2020. 2019 세계 ODA 통계자료집 - 숫자로 보는 ODA.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2020. 해외건설, 코로나19 확산 불구 315억불 수주 달성. 12월 17일. 보도자료.

\_\_\_\_\_. 2021a. 해외건설협회 조직개편 단행, ODA 전담부서 신설. 2월 17일. 보도자료.

\_\_\_\_\_. 2021b. 화상회의를 통한 수주 총력 지원. 5월 18일. 보도자료.

\_\_\_\_\_. 2021c. 필리핀 교통부(DoTr)와 화상회의 개최. 6월 29일. 협회동정 자료.

\_\_\_\_\_. 2021d. 2021년 제1차 해외건설 수주플랫폼 회의 개최. 6월 30일.

\_\_\_\_\_. 2021e. 파라과이 상원의장 및 MOPC 장관 내방. 9월 8일. 협회동정 자료.

해외문화홍보원. 2020.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100일-해외 42개국 436개 매체 5,589건 분석.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홍나미. 2017. 국내 도시개발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방향성 :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와 KOICA 도시 마스터플랜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2017년 제4호 p. 127-157

뉴시스. 2021. 외교부 내년 예산 3조원...ODA 처음으로 1조원 넘어. 9월 1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31\\_0001566700&cID=10301&pID=103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31_0001566700&cID=10301&pID=10300) (접속일: 2021년 9월 9일).

CBS노컷뉴스. 2021. 재정수지 개선세 뚜렷... 기재부 “재정 선순환 가시화”. 이희진 기자. 9월 9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622029> (접속일: 2021년 9월 9일).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2021a. *AFD Group 2020-2021 Annual Results*. Paris: AFD.

- 
- \_\_\_\_\_. 2021b. *Urban Development and Support for Local Authorities*. Paris: AFD.
- Asian Development Bank [ADB]. 2020a. *Comprehensive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Manila: ADB
- \_\_\_\_\_. 2020b. *Asian Development Bank Annual Report*. Manila: ADB.
- \_\_\_\_\_. 2020c. *Livable Cities: Post COVID-19 New Normal*. Manila: ADB.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 2021a. *Green Recovery*. Bonn: BMZ
- \_\_\_\_\_. 2021b. *Implementing the Emergency COVID-19 Support Programme*. Bonn: BMZ
- HANOI TIMES. 2019. Thua Thien -Hue to build first smart media city in Vietnam April 16. <http://hanoitimes.vn/thua-thien-hue-to-build-first-smart-media-city-in-vietnam-42510.html>
- OECD. 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France 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Paris: OECD. <https://doi.org/10.1787/9789264302679-en>.
- \_\_\_\_\_. 2020a. *Managing for Sustainable Results in Development Co-operation in Uncertain Times*. Paris: OECD.
- \_\_\_\_\_. 2020b.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0: Learning from Crises, Building Resilience*. Paris: OECD.
- \_\_\_\_\_. 2020c. *Tackling Coronavirus (COVID-19): Contributing to a Global Effort - Cities Policy Responses*. Paris: OECD.
- \_\_\_\_\_. 2020d. *Joint Statement by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n the Covid-19 crisis*. Paris: OECD
- <https://www.oecd.org/dac/development-assistance-committee/dac-covid-19-statement.htm>

- 
- \_\_\_\_\_. 2021a. *COVID-19 spending helped to lift foreign aid to an all-time high in 2020 Detailed Note*. Paris: OECD.
- \_\_\_\_\_. 2021b. *Development Co-operation during the COVID 19 Pandemic: An Analysis of 2020 Figures and 2021 Trends to Watch*. Paris: OECD.
- \_\_\_\_\_. 2021c. *OECD DAC Peer Review: Germany*. Paris: OECD.
- \_\_\_\_\_. 2021d. "France",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Paris: OECD.  
<https://doi.org/10.1787/29927d90-en>.
- \_\_\_\_\_. 2021e. "Germany",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Paris: OECD.  
<https://doi.org/10.1787/0079f636-en>.
- The White House. 2021. U.S. COVID-19 Global Response and Recovery Framework.
- UN. 2021. 6.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0. New York: UN
- UNDP. 2020. *Beyond Recovery: Towards 2030*. New York: UNDP.
- UNDP and UN Habitat. 2021. UNDP-UN Habitat Enhanced Collaborative Framework.
- UN Habitat. 2020a. *COVID-19 Response Plan*. Nairobi: UN Habitat
- \_\_\_\_\_. 2020b. *UN-Habitat Covid 19 Policy and Programme Framework*. Nairobi: UN Habitat.
- \_\_\_\_\_. 2021. *UN-Habitat Annual Report 2020*. Nairobi: UN Habitat.
- USAID. 2020. *COVID-19 Global Response Fact Sheet #9*. Washington D.C. : USAID.
- \_\_\_\_\_. 2021a. *COVID-19 - Europe and Eurasia Fact Sheet #1*. Washington D. C. : USAID.
- \_\_\_\_\_. 2021b. *COVID-19 -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Fact Sheet #1*. Washington D. C. : USAID.
- \_\_\_\_\_. 2021c. *COVID-19 - Middle East and Northg Africa Fact Sheet #1*. Washington D. C. : USAID.

---

\_\_\_\_\_. 2021d. *COVID-19 - Sub-Saharan Africa Fact Sheet #1*. Washington D. C. : USAID.

World Bank. 2020a. *Urban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Responses to COVID-19*. Washington D. C. : World Bank.

\_\_\_\_\_. 2020b. *Update on IDA Contribution to COVID-19 Pandemic Response*. Washington D. C. : World Bank.

### 【 발표자료 】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21. 5. 31. 한-인니 수도이전협력 국장급 협력위원회 발표자료

### 【 법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10. 7. 26. 시행, 법률 제9938호, 2010. 1. 25. 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20. 11. 27. 시행, 법률 제17302호, 2020. 5. 26. 전부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2010. 7. 26. 시행. 대통령령 제22296호, 2010. 7. 21. 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2020. 11. 27. 시행, 대통령령 제31192호, 2020. 11. 24. 전부개정.

### 【 웹사이트 】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index.do>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 <http://ifi.moef.go.kr>

대한민국 ODA 통합정보포털 홈페이지 [www.kodaportal.go.kr](http://www.kodaportal.go.kr)

월드미터 코로나정보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외교부 보도자료 사이트. [https://www.mofa.go.kr/www/brd/m\\_4080/list.do](https://www.mofa.go.kr/www/brd/m_4080/list.do)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id-ko/brd/m\\_23654/list.do](https://overseas.mofa.go.kr/id-ko/brd/m_23654/list.do)

통계청 홈페이지. 연간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

---

111Y002&checkFlag=N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koica. go. kr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www. edcfkorea. go. kr  
Gavi 홈페이지 <https://www.gavi.org/gavi-covax-amc>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7228>  
KSP 홈페이지. www. ksp. go. kr  
ODA 정보 포털 <https://www.oda.go.kr/opo/bsin/bsnsInfoCnttBsnsInfo.do>  
Our World in Data 홈페이지.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USAID 홈페이지. <https://www.usaid.gov/coronavirus>  
USAID 홈페이지. <http://usaid.gov/news-information/press-release>  
World Bank 홈페이지. <https://maps.worldbank.org/>  
WHO 홈페이지. <https://covid19.who.int/>  
Business Insider 홈페이지.  
<https://www.businessinsider.in/international/news/a-third-of-the-global-population-is-on-coronavirus-lockdown-x2014-hereaposs-our-constantly-updated-list-of-countries-and-restrictions/slidelist/75208623.cms> (2021년 4월 10일 접속)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2021년 4월 15일 접속)  
월드뱅크 블로그  
<https://blogs.worldbank.org/voices/covid-19-hitting-poor-countries-hardest-heres-how-world-banks-ida-stepping-support> (2021년 1월 28일 기사. 2021년 3월 15일 접속)  
유엔 홈페이지  
<https://www.un.org/en/desa/%E2%80%9Cno-one-safe-until-everyone-%E2%80%9D> (2021년 3월 15일 접속)



## ▣ 개발협력사업 관련 해외파견관 간담회 결과

기간	2021.4.22.~ 7.26. (약 3개월 )
개최회수	·10차례 간담회 개최 ·4월: 22일 오후 3-5시, 30일 오후 1:30-3시 ·6월: 8일 오전 10:30-12시, 10일 오후 2시-3:30, 16일 오전 9-10:30, 28일 오후 2:30-3:30 ·7월: 1일 오후 3:30-5시, 7일 오후 3:30- 5시, 15일 오후 4시-5:30, 26일 오후 4시-5시
참여자	총 14인의 국제개발협력 관계부처 및 수행기관 전문가 및 관계자 참여
관련기관	국토교통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단, 민간도시연구소 등
협력국	베트남,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개발협력 프로그램	- 기획재정부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사업 - 국토교통 K-City Network Program - 해외건설시장개척지원자금 등 - 개발협력사례(인도네시아 신수도건설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파라과이 바냐도수르 신도시개발사업, 베트남 도시개발사업 등)

### 1. 코로나19이후 사업 여건 변화

#### ○ 비대면 업무로의 전환

- 사업의 많은 부분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협력국의 인터넷 환경, 회의실 여건, 코로나 대응 수준(격리, 재택 등) 등에 의한 국별 사업추진 여건의 차이가 큼
- 베트남의 경우 인터넷 환경이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양호했으며, 작년 하반기부터 회의실에 카메라, 마이크 등을 설치하며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비대면 사업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됨
- 베트남은 현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도 현지 공무원들의 협조를 통해 현장 교육도 실시함

- 
- 그러나 파라과이의 경우, 현지 공무원 및 사업 관계자들의 격리, 재택 등의 제한적 업무 환경으로 인해서 온라인 회의에도 어려움 있었음
  - 파라과이는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결정권이 있는 소수의 고위급·본부장급만 출장 가서 대면회의를 통해 주요사항만 결정하고 귀국하기도 했음
  - 일부 기관은 작년 11월에는 마스터플랜 다양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만을 만들었는데, PPT 자료를 만든 후 더빙을 해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함
  - 비대면 전환은 사업 형성단계보다 본 사업에 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
    - 사업 형성단계에서는 전문가 위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사업 형성이 가능함.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온라인 회의 시 이점이 있음
    - 실제로 전문가 회의에서 현지파견 전문가가 현장 드론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음
    - 하지만 본 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관계자가 많고, 현장에서 긴밀히 의논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서 온라인 회의가 이점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내 초청연수가 어려워지며 온라인 교육연수로 대부분 전환하거나 개최 계획이 연기 또는 취소됨
  - 현지 파견 인력의 역할 변화
    - 코로나19 이후 국내 엔지니어링 용역 업체와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파견관이 현지 교류 및 업무 조율 담당
    - 현지 파견관의 국내와의 커뮤니케이션 창구 역할 증대
  - 코로나19 이후 해외교류에 대한 불안감 증대로 해외출장 제한조치 및 출장 자격리기간(국내외 각 2주)으로 인해 장기출장에 대한 부담감 발생
    - 해외사업 건으로 종합발표를 위해 현지 격리면제 조건으로 출장했을 때, 격리면제 시 이동 동선이 매우 제약적이고 일부 행사시설 및 숙소 내에서만 이동 가능함

- 일부 기관은 파라과이 출장을 올해 3월 다녀왔으며, 4월 사업팀 중 일부가 순차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와서 초기 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한국에서 마스터플랜 워크숍 자료를 작성 중
- 해외출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기초조사 시 현지조사 없이 로컬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성과나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방식보다 자료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 있음
  -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현지에 역량있는 컨설팅 또는 설계회사가 많고 비용이 저렴하여 현지 기관 활용하기에 비교적 수월함
- 외교부 산하 기관인 KOICA는 코로나19 대응 해외출장 지원이 잘 마련되어 있으며, 제한된 조건에서 해외출장 가능함
  - KOICA의 경우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출장 시 국내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현지 2주 격리(현지 상황에 따라 상이) 및 2주 현장업무 수행 후 귀국 시 특별입국(자가격리 면제) 대상임
  - 국내 자가격리 면제 시에는 업무공간 별도 사용 및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의 조건이 있음. KOICA의 해외출장 관련 기타 지원으로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 등을 모두 근무기간으로 인정함
  - 반면에 타 정부부처 및 민간부분의 해외출장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컨설턴트를 활용해 자료 조사를 진행하는 등 출장 외의 방법으로 사업 추진
- 현지 인력 활용 가능성 증가
  - 파라과이에서 일부 한국 인력 철수가 진행되었으나, 현지 교민 및 컨설턴트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파라과이 사무소의 경우 철수를 하지는 않았으나, 봉사단의 경우 작년에 모두 철수했고,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일부 긴급한 사업 관계자들은 다시 입국
    - 파라과이의 경우 한국 교민 수가 6-7천명에 달해 현지 필요인력을 어느정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실력있는 현지컨설턴트 채용을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UNDP, 세계은행,

---

미주개발은행등의 파라과이 국가사무소와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 컨설턴트들을 위주로 채용

- 현지 컨설턴트는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용하거나 ADB,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전문가 Pool에서 추천을 받아 활용함
- 현지사무소가 없거나 파견이 어려운 경우 현지 컨설턴트를 고용하거나 현지 사무소가 있는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업무 추진
- KOICA는 PAO(Project Action Officer, 5급 지역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으며, 장기체류 실무자 자격으로 현지의 지사 역할을 수행
- PAO는 프로젝트 기반 계약을 통해 파견되며, 파견국가의 언어, 지역 경험이 많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현장 기업, 정부 등과 컨택 포인트로서 역할함.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수행은 어려움

○ 장기 체류자 파견

- 해외사업 중 해외 체류기간을 포함하는 맨먼스가 있는 경우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기체류자를 파견함
- 국내/해외 맨먼스가 정해져 있으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맨먼스 소진이 거의 안 된 경우 장기체류자를 파견함
- 장기체류자는 개발 현장에서 현지 관계자와 직접적 협의를 진행하고, 국내 본사와의 컨택 포인트로서 역할함

---

## 2. 코로나19 이후 사업추진 한계점 및 대응방안

### 1) 코로나19 이후 사업추진 한계점

□ 코로나19 상황(확진자 발생, 격리·이동제한·봉쇄, 비대면 전환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 (기 추진중인 사업 관련) 국가철도공단은 자카르타 LRT 1단계사업 PMC(감리) 사업을 인도네시아 협력사들과 공동으로 수주하였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음
- 현지 고위공무원 확진으로 정부부처 업무 중단, 비대면 전환 등으로 해외사업 진행 어려움
  - 코로나 19의 확산 이후 대면협약이 어려워 지면서 현지 부처 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인터넷 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어 화상회의를 진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나 현지 공무원들의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공무원들이 본업보다 부업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짐
- 2020년 인도네시아 해외사업팀 내 확진자 발생 이후 업무가 거의 섰다운 되면서, 컨소시엄 계약서 작성을 위한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어 계약서 수정에 1년 6개월이 소요, 결국 올해 4월에 계약을 체결함
- 메콩델타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우, 작년에 착공하여 올해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9월까지 지연된 상황
-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베트남 건설부와 협의를 위해 출장계획을 여러 차례 시도 하였으나 베트남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한 격리기간 연장(2주→4주) 때문에 출장 취소됨
- 코로나 19 이후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 지연, 화상회의로의 전환, 출장 불가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업무 자체가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일인데,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업무협의가 지연
  - 네트워크가 이미 기존에 구축된 상황에서 화상으로 업무협의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신규 파트너 또는 사업의 경우 초반 협의를 화상으로 하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한계있음
    - 화상회의를 통해 기존 대면회의만큼의 기대효과를 얻기 어려움
    - 베트남의 경우 화상회의를 위한 시스템이 이미 잘 구축되어 있어 화상회의 진행의 문제는 없음
    - 기존에는 여러 차례의 출장으로 업무를 추진했다면, 현재는 화상회의로 대체함. 저비용으로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출장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음
  - 재택근무 장기화로 부처간 협의 등 사업추진 지연
  -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거의 문을 닫은 점도 있지만, 화상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참여율이 저조해 지는 경향이 있음
  - 화상회의 진행 시 어려움은 통역을 통해 회의 내용이 전달되다 보니 형식적인 대화만 오고가게 되고, 협의속도나 효율이 저하 되는 점
  - 사업 관계자의 현지 입국 불가 상황으로 인한 사업 활동 지연, 사업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함. 대부분의 해외파견 인력은 코로나19 이후 귀국하였으나 일부는 현지 체류 중임
    - (해외봉사단) KOICA 해외 봉사단 인력 약 2,200여명이 코로나 19로 일시 귀국하였으며, PMC 인력의 경우 대부분이 귀국하였으나 일부 현지 체류 인원도 있음. 봉사단의 경우 파견의 지역적 범위가 넓고, 관리상의 위험이 있어 전원 귀국 결정
    - (해외봉사단 코디네이터) 봉사단원들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들의 경우 업무를 전환하여 현지에 체류 중. 주로 남은 봉사단원들의 현장사업 지원, 귀국 단원들의 원격 봉사 지원, 수요발굴, 매칭 등의 업무 담당
    - (현지 사무소) 현지사무소 인력의 경우 그대로 현지 체류 중이며 국내 귀국 인력과 현

---

### 지 간의 중계역할 수행

- 인도네시아 공무원 국내 초청연수(20명, 8주간 코이카 교육연수 프로그램 활용) 계획하였으나 외교부 방침(전면 온라인 연수)으로 잠정 연기
- 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작년에 총 25개의 사업을 신청 받았으나 현지조사 진행이 어려워 지면서 사업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20년 3월 중순 파라과이가 강력한 봉쇄령을 내리면서 봉쇄가 지속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4월 말에 한국에 귀국하였으나, 두 달 후 다시 파라과이로 출국하는데 출장 재승인이 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음
- 사업의 컴포넌트 중 하나로 공무원 초청연수가 대면 연수 추진은 어려워졌고, 온라인 연수의 경우 집중도 및 성과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이 큼
- 코로나 영향으로 EDCF 차관 사업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나, 특히 기존 신남방 신북방 외교전략에 따라 지원이 많았던 지역 중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사업 차질이 있었음
- 현재 작년에 시작된 K-City 네트워크 사업이 진행 중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특히 도시개발형사업의 경우 장기사업이라 사업활동 지연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음
  - 솔루션형 사업들의 경우 과업기간 내에 완료된 사업이 다수
  - 현지조사 및 출장 등 해외에서 계획된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현지의 코로나 19 상황이 사업공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현지상황이 심각할 경우 사업지로 선정하지 못한 경우는 있음
- 국제행사들 또한 연기되거나 지연되고 있는데,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의 경우 작년에는 행사가 취소됐고, 올해는 취소 없이 진행할 예정임

---

□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에 정부재정 우선 투입 및 민간부문 자원 조달 한계

-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예산이 우선 배정되며, 타 분야 해외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관심 감소
  -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지 정부의 수도이전 관련 법 제정 등 초기단계 의사결정 과정 지연
  - EDCF차관의 경우 LRT건설 이후 운영권을 일정기간 넘겨받아 수익을 내는 방식임. 코로나 19로 인한 공공기관 재정 압박은 LRT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LRT 사업을 발주한 자카르타 자산관리공사(JAKPRO)의 경우 전체 재정의 40%를 반납해 선급금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었음
-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초기에는 정부부처의 관심이 많았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부 지원이 다소 감소함
  - 인도네시아는 코로나로 인한 재정 부족으로 많은 정부부처들이 예산을 반납했는데, 특히 공공사업부의 경우 1년 예산 약 10조 원 (120조 루피아) 중 20% 가까이를 반납
  - 수도이전 사업예산 40조 중 80%는 민간투자(민관협력)에 의존, 코로나 이후 민간투자 위축 및 계획 확정이 지연되며 자원조달 어려움
  - 이러한 재정 부족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여전히 신수도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강하며, 올해 인도네시아의 독립기념일인 8월 17일 신수도 착공 선언을 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 철도사업을 추진·수행 중인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직접 해외사업에 예산을 쓸 여유는 없으나, KIND, KOICA 등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ODA 사업 지원을 받고 있음
  - LRT 사업은 한국이 맡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일본, 중국이 공사비 100%를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사업비의 절반을 인도네시아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음
  - 한국의 경우 일본, 중국에 비해 투자 규모가 작아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을 겪기도 함

- 일본의 경우 자카르타 MRT(Mass Rapid Transit) 1단계 사업에 JICA 자원 2조 억 원을 투자했고, 중국은 B to B로 진행됐지만 단둥 고속도로 건설에 5조원의 재원을 투입함
- 정부재정 지원의 한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철도와 같이 단순 건설 사업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의 사업인 경우, BOT로 민자 사업을 개발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음
- 사업 발굴을 위한 사이클이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업 접수까지 기간적 여유가 부족했고, 코로나19 긴급대응, 취약계층에 대한 복구와 관련한 사업 수요가 늘면서 기존 수요에 대한 사업형성에 차질을 빚음
- 수원국의 기존 자원까지 긴급대응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인프라와 같은 대규모 사업들의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는 편임
- 코로나 대응 의료 기자재 지원 자금 등으로 운용했으며, 코로나19 수요 대응을 위해 내부 예산 승인목표를 보건 분야 승인으로 변경하기도 했음
- 개도국 현지의 경제침체로 해외사업에 대한 현지 여론 악화가 해외사업 추진 지연 및 예산 감소에 영향을 미침
- 2019년 기준 EDCF 사업 집행실적이 1조 원 규모였고 인프라부문 사업 위주였으나 코로나19 이후부터 개도국의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지원 사업이 전부 차지함
  - 2020년 EDCF 사업집행 계획 약 4억 달러 중 보건지원 사업이 4억 달러를 차지함
  - 기존 계획사업은 후보사업으로 잔존하고 코로나 대응 긴급 사업부터 우선 지원함
  - 코로나 이전에는 지원 규모가 교통부문이 가장 컸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보건부문이 지원 1순위가 되었음
- 해외사업 기존 맨먼스 준수의 한계점
  - 사업수행 인력의 경우 국가별, 사업별로 상황이 다르겠지만 주로 현지 맨먼스를

---

국내 활동 맨먼스로 전환해 업무에 대응하거나 현지의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여 임무를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업무를 추진 중

-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작년보다는 올해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맨먼스는 소진되어 가는데 계약이 묶여있는 PMC들이 많아 영세한 업체의 경우 자금 융통의 어려움으로 재정적 곤란을 겪기도 함
  - 국내로 맨먼스를 전환한 사업들의 경우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사업에 지연이 생겨 계약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 이로 인한 비용 발생을 100% 보전해 줄 수 없다보니 PMC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 개도국 현지 코로나19 대응체계의 한계점

- 개도국의 현지 코로나 대응체계가 취약하여 EDCF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있었음
  - EDCF 사업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작업이 필수로 수반되는데, 코로나19 이후 출장 제한 및 현지 여건 악화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 빚음
  -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사업 재공정, 심사, 협의,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현장실사가 거의 불가하고 현장인력 활용 제한 등의 애로사항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음

#### □ 코로나19 이후 신규 사업 수행의 한계점

- 신규 사업의 경우 현지 공공기관 및 업체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온라인 미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코로나 이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 회의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사업 추진 및 준공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시작한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속도가 느린 경향이 있음
  - 일부 기관에서 최근 신규 사업에 4개 팀을 구성해 온라인 회의를 진행함. 온라인 회의 시 처음 보는 관계자는 얼굴 인지가 어렵고 회의 일정 조율의 어려움을 토로함

---

## □ 코로나19 사업 중단·지연의 외부효과

- 코로나19 이후 해외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며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수금 지연으로 연결되며 기업들의 해외사업 매출에 타격이 있었음
  - 특히 프리랜서 등 개별 전문가 단위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했음. IDB, 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 외부전문가를 본사 또는 현지에서 채용하며, 국내 전문가 활동 영역이 축소됨

## 2) 코로나19 위기 대응방안

### □ 해외사업 관계자 우선 백신접종 등을 통해 해외출장 재개 노력

- 코로나 이후 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이 저조한 상황이었으나, 최근 기재부에서 출장 지침이 시달되며 해외사업 관련 기업 백신 우선접종 등을 발표함
  - 이를 바탕으로 수출입은행도 최근 해외출장을 재개하기 시작함. 기재부 협조 하에 수출입은행도 해외출장을 더 활발히 갈 것으로 기대
- 비대면으로 업무가 대체되며 수출입은행 차원에서 화상회의 설비 구축, 사무소 역할 강화 등의 대안책을 마련함
  - 각 국외 사무소별로 비대면 화상 시스템을 설치 완료함. 본점에서 수원국의 정보가 필요할 때 화상회의로 활용
  - 국외 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기존에는 본점에서 사업 심사를 주도했다면, 코로나 이후 현지 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사업 승인 심사에 참여함. 사무소 권한이 강화되고, 현장 위주로 사업이 진행됨
- 현지 출장 불발시 예산은 현지조사비용이나 현지 업체 고용에 활용하고 있음
  - 업체에서 과업기간 연장을 원할시 PM사가 용역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실무적 상황을 설명하면 사업담당자가 판단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하기도 함

- 
- 현지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과 사업의 준공여부를 벗어나 국내기관·기업의 해외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

#### □ 기타사항

- 코로나19 비대면 업무 전환의 장점
  - 워크숍에 실무급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었음
  - 회의를 주로 화상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이 적어지고, 더 자주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됨
  - 하지만 향후 비대면 플랫폼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면/비대면 복합 플랫폼을 병행 활용하며 효과 극대화 기대

### 3. 포스트코로나시대 개발협력의 한계점 및 발전방향

#### 1) 포스트코로나시대 개발협력의 한계점

##### □ 코로나19 이후 국제개발협력사업 현지조사의 어려움

- 개발도상국의 부처 간 분절화·파편화가 심해 데이터가 공유가 어려운데,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그나마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어 구득하던 정보들도 구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디지털화 수요 높음
- 도시 부문 사업의 경우, 국내에서는 현지 도시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직접 현지를 방문하고 관계자와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새로운 관습, 법 체계 등을 발견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 □ 도시개발부문 개발협력사업의 한계점

- ODA는 사업주체의 참여 의향보다 정부 간 관계에 따라 의사결정 이뤄짐
- 도시개발부문의 개발협력사업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사업에 비해 이해관계자가 매우 많아서, 협의과정자체가 어렵기 때문
  - 특별법과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 좋지만, 이것이 어려운 국가가 대부분임. 특별법 제정도 쉽지 않고, 토지수용법을 택지나 주택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음
  -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없고, 토지수용이 용이 하지 않고, 한국의 토지 주택공사와 같은 기관이 없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를 파트너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쉽지 않음
  - 또한 무상 사회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나라가 많아, LH 경우 수익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또한, 진출이 어려움
  - 특히, 유상원조사사업으로 진행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중국, 일본 등 타국과 비교할 때,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차관의 조건이 양호하지 않아, 수원국에서 선호하지 않음 (\* 차관의 조건보다는 차관의 총량에 있어서의 규모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 EDCF 면담결과)
- ODA로 수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큼
  - EDCF 차관사업의 경우 FS수행 시 재무분석결과가 플러스로 나오면 차관을 승인해주지 않음
  -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에 차관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 수익구조가 나오지 않는 것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에 ODA 차관 지원 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에 지원하는 것

---

## □ 인프라 건설에 집중된 유상원조의 한계점

- 우리나라 ODA사업의 경우 성과가 빨리 나오는 곳에 더 많이 투자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유상원조의 경우도 주로 인프라 건설에 투자되는 경우가 많음
  - 유상원조는 인프라 건설에 투자되는데 반해 무상원조는 교육, 보건, 농촌개발 등에 지원됨에 따라 유무상 연계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음
  - 개발도상국 정부에서도 성과가 빨리 나오는 인프라 사업을 선호하며, 도시개발부처보다 인프라 개발 부처의 영향력이 큰 경향이 있음
- EDCF는 공항건설 사업을 숙원사업으로 삼고 있으나, 해당 부문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 간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 매쿼리(Macquarie), 방시(Vinci) 등 투자개발형 사업을 수행하는 대규모 건설사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큼

## □ 일본 및 중국 ODA 사업과의 차이점

- 일본과 중국은 장기 계획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원조와 차관을 시행하고 있음
-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도시개발부문 개발협력 사업실적이 저조하다면, 이는 수원국의 제도나 기관의 부재 보다는 차관조건 등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음. 수원국의 상황으로 인해 받는 영향은 동등하기 때문
- 한국 해외도시개발 협력의 경쟁력 분석을 위해서는, JAICA와 중국의 개발협력 기금 운용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함
- 기반시설에 투자할 금액이 감소하면 전체 개발사업의 사업수지가 개선되므로 수원국 정부도 차관을 활용한 기반시설 건설을 선호하나, 보통 국가 별 차관계약이 3-6억 수준에 그쳐 규모가 큰 기반시설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수준대비 0.25%를 EDCF차관으로 사용해야 하는 입장이나, 차관계약 수주 자체가 어려운 점도 있음
  - 일본, 중국에 비해 차관규모가 작은 문제도 있을 것이나, 수원국 들 간에도 전체 차관

---

금액에 대한 캡(Cap)이 있다 보니 차관을 사용하는데 신중한 입장임

- 한국 국제개발협력 역사가 일본, 유럽에 비해 짧기 때문에 정보축적의 한계 존재
  - 일본 JICA의 경우 오랜 기간 축적된 현지조사 보고서와 경험에 기반하여 해외사업 수행. 우리나라의 경우 새롭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초정보를 조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관련 보고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음

#### □ 차관사업 관련 국제사회 경쟁 심화

- 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우 주로 일본, 중국에서 많은 차관을 지원
  - 일본의 경우 차관 금액 상환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개념으로 차관을 승인하는 경우가 많음
  - 중국의 경우 차관 규모가 매우 크나, OECD DAC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구속성 차관을 많이 내보내 최근 수원 국들 사이에 반발이 큼

#### □ 유무상 ODA 연계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경우, 차관의 질 문제도 있지만 유무상 원조 이원화에 따른 문제도 있다고 생각
- 유무상 연계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관 별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 성공적인 연계는 어려운 실정
- 외교부와 기재부의 유무상 ODA 사업의 협력 필요성 증대에 따라 이를 국무조정실에서 유관 부처 및 유무상원조 업계의 구심점으로 역할 할 것으로 기대
  - 유무상 ODA와 관련하여 만성적으로 부처간 정보교류, 사업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무조정실이 ODA 관련 역할을 증대, 유무상 사업연계뿐 아니라 한국 ODA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유기적 유무상사업 발굴을 위해서 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와 KOICA 사업전략기획실에서 1년 2회 정례협의회 개최('15년~). 유무상원조 협력 강화를 위한 상

---

## 호연계사업을 선정함

- KOICA ‘국제개발사업 협력사업 공모’를 통해 유무상 연계 강화 차원에서 공모된 사업 중 EDCF 사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함
- 기존의 무기적인 top-down식의 연계사업 검토 방식을 개선하고 실무진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포함하고자 정례협의회를 시행
- 정례협의회를 통해 bottom-up 연계 방식으로 연계사업을 많이 발굴할 예정임
- ’21년 5월부터 유무상 분절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무상 인식증진활동’ 시행
  - 기재부와 외교부 간 미묘한 이해관계 차이가 존재함. 기본적으로 유상과 무상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측의 인식 개선이 요구됨
  - 직접 유관기관을 방문해 EDCF 제도를 소개하고 유무상 연계방안을 협의하는 등의 활동 수행함으로써 유무상 기관 간 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협력 강화 추구함
  - 인식증진활동은 국토정보부사업, 수자원공사, 해양관련 기관(부산), 디지털 보건관련 기관 등등 유상 및 무상 ODA 관련 기관 중심으로 수행함
-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ODA 사업은 아니지만 계획 수립 지원 후 본 사업까지 연계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부처 간 소통 및 협력채널 부족으로 인해 본 사업 연계가 어려운 실정
  - 본 사업 개발을 위해서는 기재부, 국제기구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데 정보공유가 어렵고 부처 간 업무 분절화로 인한 어려움도 큼

## □ 민간사업 연계의 어려움

- 도시개발의 경우 ODA사업과 민간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거나,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어려운 면이 있음
  - 국내 투자개발업체가 ODA를 활용하여 인프라를 건설하고, 이와 연계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이상적일 것이나, 국내에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만한 투자개발업체가 없음
  - 도시개발 관련 투자개발업체는 많은 부분 대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나, 경영자

---

들의 입장에서는 리스크 감수가 어려워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공기업의 경우 해외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특히 대규모 투자개발형 사업을 추진하려면 내부투자심의는 물론 기재부 승인까지 통과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
- 단순 도급형 개발사업으로는 현지 건설 단가를 이길 수 없어 장기적으로 투자형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

#### □ 국가별 사업추진 여건상의 차이점

- 국가별 사업추진 여건상의 차이는 주로 토지소유에 대한 개념에서 나타남
  - 베트남, 구 소비에트 연방 국가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인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지 않음
  - 제도적 측면에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아 대체적으로 유사한 편
  - 중남미 국가는 우리보다 계획제도가 디테일하고 입체적인 편이고, 용도지역도 복합적 기준이 많이 적용되는 편
  - CIS국가의 경우 러시아식 시스템을 많이 도입했는데, GPS시스템도 러시아 기준을 도입하여 우리와 좌표체계가 다름
- 베트남 현지 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베트남 공무원, 민간기업, LH 간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어려운 점이 있음
  - 베트남 공무원들은 개인의 이득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낮음
  - 민간기업의 경우 재원을 마련하여 로비 등을 통해 인허가 승인을 받기도 하지만 LH의 경우 원칙적 측면에서 인허가 승인을 받는 데 한계가 있을 때가 있음
- 인도네시아의 경우 공무원들이 보직변경이 있으면 업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음
  - 보직 변경 시 인수인계를 별도로 하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기도 하고, 보직

---

변경된 공무원의 영어실력이나 상급자의 보직변경 등에 따라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  
기도 함

- 남미의 공무원들은 주로 임명직이기 때문에 정권변화에 따른 업무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큼
  - 정권에 따라 공무원들이 교체되기 때문에 사업기간 동안 담당자가 교체되면 똑같은  
설명을 반복해야하는 등의 문제 발생
  - 이런 문제로 파라과이에서 코이카 파라과이 사무소와 현지에 공사설립 사업을 추진하  
였으나 사업화가 되지는 않았음
  - 코이카 내부에서도 기구설립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임

#### □ 도시개발분야 국제개발협력 성과측정의 도전과제

-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은 성과의 정량화가 어렵고, 정량화된 성과의 함의  
가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단 년도 베이스의 성과측정도 도시부문사업 추진에 장애요인 중 하나임
- 도시계획 수립 시 지구 지정-교통계획수립-부문별계획수립-인프라사업 진행까  
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도시부문 사업이 물리적 성과로 연결되기 까지 성  
과관리 기간을 10년은 잡아야 한다고 생각
- 일본국제협력단(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경우 2010  
년대 중후반 하노이 도심 교량, 도로 건설 사업들을 다수 수행했는데, 이를 추  
진하기 전에 미리 하노이 마스터플랜 스터디를 2007년도부터 추진
  - 스터디 보고서를 보면 주로 워크숍활동을 많이 수행했는데, 100만 불-200만 불을 투  
자하여 워크숍 및 자료수집조사를 수행

#### □ 유상원조(EDCF)의 한계점

- EDCF는 정부재원으로 절대적인 규모의 한계가 있음. MDB의 저금리 등의 유리

---

한 조건과 중국의 대규모 물량지원과 비교해서 한국은 제한적 재원에 기반을 둔 우선사업 위주로 지원함

- 협조용자의 경우 MDB에 비해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음.  
EDCF 사업은 기재부 승인이 모든 절차에서 요구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리고, 수원국 내에서 국회 승인과 차관계획 승인 등이 수립되어야 해서 절차가 길고 오래 걸림
- 유상원조 자체가 근본적인 제약이 있음. 무상원조는 M-2 법칙으로 향후 2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만, 유상원조는 수원국 내부 검토 및 승인 절차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시기를 정하기 어려움
  - EDCF 사업 자체를 발굴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요구되며 사업발굴-개발계획 수립도 검토 및 승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일반적으로 EDCF는 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무상 연계사업을 수립할 때도 시기적 문제로 제약이 있음

#### □ KOICA 사업평가체계의 한계점

- KOICA 사업평가는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기관이 수행하는데, PMC는 출장 빈도가 낮고 사업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실무수행 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사업평가 시 PMC 평가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내재된 한계점

- 해외사업은 전문 지식, 언어 등의 역량이 요구되고 신규시장 개척의 이점이 있는 반면, 실행도가 낮고 사업매출 대비 단가가 낮으며 제반 행정절차가 복잡함
  - 이로 인해서 민간부문에서는 해외사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외사업에 대한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 존재
- 은퇴 후 실무가 가능한 시니어 급의 전문가들이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절할 것으로 보임

---

□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속가능성 예산 확보의 문제점

- 코로나 이후 정부예산이 코로나 대응방안에 집중되며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 관련 예산 삭감

□ 공공기관 파견제도의 문제점

- 공공기관의 경우 해외사업 추진 시 2-3년이 경과되면 다른 곳으로 파견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업무연속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사업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그 결과 사업성고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음
- 1년 파견 이후, 실질적 사업계획 또는 사업발주 등의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현지 사업에 회의적, 그러나 현지 지역적 특성 상 개발협력 사업 수주는 오랜 시간 쌓아 온 협력관계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파견관은 사업 또는 투자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자문역할로 제한되며, 또한 파견기간이 1년 단위 갱신으로 업무 지속성 문제도 발생함

## 2) 포스트코로나시대 개발협력 발전방향

□ 민간부문 참여를 통한 예산의 지속가능성 보장

- 민간부문 참여를 통해 예산의 지속가능성 보장 및 사업 검토 단계부터 민간부문과 사전협의 및 의견조율 과정 필요
  -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 참여 방안을 구상하고 민간부문과의 대화와 협력 중요
  - 금융권, 투자기관 및 시행기관 등 참여 활성화 중요
- 또한, 국익 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기관·기업 간 투명한 정보공유 및 정보 접근성 보장 중요

---

## □ 코로나 이후 EDCF 사업 패러다임 변화

- 코로나19 이후 ‘긴급재난차관’ 도입을 통해 EDCF의 절차적 측면 개선
  - 수출입은행은 코로나 이후 신규 차관인 ‘긴급재난차관’을 도입하며,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등 EDCF의 절차적 측면을 고민하고 보다 합리적, 융통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
- 코로나 이후 보건부문으로 사업이 집중되었고 디지털 시스템 및 환경부문의 중요도 상승으로 그린, 디지털, 보건사업이 우선순위로 선정됨. 정부의 그린 뉴딜 전략에 EDCF 사업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기반을 둔 변화를 모색함
  - 기재부의 그린 디지털 EDCF 전략은 ‘Post-코로나 EDCF 운용 전략: ‘21~ ‘23년 EDCF 중기운용전략’ 보고서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코로나19 이전에는 교통 분야 인프라 사업(단순 토목사업) 비중이 가장 높았음. 코로나 이후 EDCF에서도 사업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는바 단순 토목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측면을 고려한 통합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음

## □ 유무상원조 비율 및 조건 재검토 필요

-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후속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유상원조보다는 무상원조의 비율을 높이고, 유상원조 조건도 수원국 입장에서 선호할 만한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 처음부터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면, 수원국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을 수 있음. 예를 들어 무상사회주택건설이 중요한 이슈인 중남미 지역에, 수익성만으로 접근한다면, 개발협력사업의 진행이 어려울 것이며, 개발협력의 의의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
  - 파라과이 신도시 마스터플랜 사업의 경우, 해당부지에 비공식주거지가 있는데, 수익성과 사업의 현실성을 생각해서, 해당부지를 마스터플랜의 경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 그러나 이러한 주거 문제를 제외하고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개발협력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

---

## □ 해외 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관련

- 도시의 경우 연구, 행정처리, 거버넌스, 실무 등 다양한 측면이 융·복합적으로 고려된 사업추진 필요
- 해외신도시 건설 ODA사업이 실행단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수요에 맞는 접근과 사업체계에 대한 템플릿 수립 필요
  - 체계적인 해외 신도시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별로 어떤 조건이나 법·제도가 갖춰져 있고, 어떤 구조, 어떤 범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템플릿이 필요
  - 각 나라별로 토지수용방식, 인허가 주체, 사업주체가 모두 다른데 이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사업형성에 뛰어들다 보니 사업실행단계에서 걸림돌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 생각
- 신도시 개발 시 모도시와의 접근성·연결성 제고, 한국정부의 유상차관 지원, G to G사업 혹은 현지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한 사업추진, 신도시의 적정규모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원칙을 수립해서 성공케이스를 만들어낼 필요 있음
  - LH가 통합되기 전인 2009년 노무현 정권 때부터 K신도시 캐치프레이를 걸고 한국의 신도시, 스마트시티 등을 수출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실행단계까지 간 사업이 없는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고려치 않은 백화점식 사업 제안에 있다고 생각
  - 현지에 주재한 경험이 있는 우간다, 쿠웨이트,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중저소득 국가들은 도시개발 기술이 부족하고, ICT기반이 부족해 스마트시티 수출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함
  -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스마트시티 보다는 상수/하수가 분리된 수도 시스템 도입, 우리나라 1980년대 개포/과천 택지지구 개발 과 같은 주거단지 건설 등만 진행되어도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실질적 수요보다 한국의 비교우위 기술이 우선시 되는 현실이 아쉬움

---

## □ 국제개발협력사업 간 연계 방안

- ODA 사업 수행 기관별 정보교류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간 연계할 때 한계점 존재
  - 사업 발주기관 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며 유무상원조 수행기관(외교부, 기재부) 간 사업연계가 어려움
  - LH의 경우 해외사업 수주를 위해 같은 기관 내 타부서간 경쟁하는 경우도 있음
- KOICA에서 무상 ODA 사업의 구심점 역할 수행하고 있으며,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LH 등 사업수행기관 간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EDCF(유상원조) 사업과 연계를 위해 노력함
- 유무상사업 연계 시 각 무상 사업이 준공된 이후 새롭게 기관을 선택하여 유상사업으로 연계해야 함
- 해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 연계되어야 하지만 자원조달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사업연계 사례가 적음
  - EDCF 차관지원 또는 현지정부 자원 활용이 가능하지만 개도국의 경우 인프라 사업 투자가 어려운 경향이 있음. 오히려, 한국 ODA 사업 후 일본 JICA, ADB 등 국제기구에서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수주함

## □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한국의 강점

-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획/시스템 수립 사업을 개발하는 능력은 뛰어나다고 생각
- 특히 우리나라 경험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사업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생각
  - 한국의 국토·도시개발 사업을 공유할 때 주로 소개하는 사례가 공영개발사업인데,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지적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중앙정부의 힘이 부족하여 민간주도 중소단위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토지를 수용하고 재정착 계획을 세우고, 보상을 해주는 일련의 과정들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환지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추진이 수월할 것이고, 실제로 인도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토지 가격이 선진국 수준으로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데, 사회주택 건설 시 토지 매각 비용이 인프라로 투자 될 수 있는 환경만 잘 만들어 주면 구획정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 단순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벗어나 ICT 등 디지털 전략을 결합한 고도화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며, 한국이 가진 기술적 강점을 활용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 우수기술을 EDCF 사업으로 지원하려고 하며, 비교우위가 있는 고도화된 기술을 지원해 Korean Potential을 강화하려고 함
    - 인프라 사업도 가시적 성과보다는 종합적 측면을 고려한 사업을 지원 예정
  -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지며, 스마트시티, 민관협력(PPP)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
    - 디지털 복합적 고도화된 사업과 개발재원 다각화의 측면에서 스마트시티와 PPP 사업은 이를 잘 반영함
- 해외도시개발 분야 민간부문 진출 관련
- 도시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적극적 지원을 바라나 순환보직 제도로 인해 장기적으로 해외 건설 사업을 지원할 인력을 두기가 어려운 실정
  - 해외도시개발부문 진출에 있어 LH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부문 진출도 중요하다고 생각
    - 대기업 내 투자개발형사업 진출을 위한 팀이 조성되거나, 작은 기업이라도 전략적 인력편성을 통해 투자개발형사업에 뛰어 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 개발도상국 중소도시같은 경우 100만평 내외의 중소규모 개발사업 수요가 큰 편이라, 민간기업 진출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 생각
-

- 
- 도시개발사업은 결국 토지조성과 분양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런 면에서 건설사보다 상사가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 민간부문과의 협력채널 구축

- K-City 네트워크 사업 신청서를 통해 민간부문에 사업수요를 전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온라인 사업 설명회,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민간부문과 소통 중
  -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는 코트라 공관 5개소에 설치되어 있음
  - 신청된 사업이 K-City 네트워크 사업뿐만 아니라 EIPP 등 다른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설정 관련 (국익 또는 인도적 지원)

- KOICA의 경우 국익을 기관의 미션, 비전 및 사업 선에서 내세우고 있지 않음
- 다만 외교부 산하기관이자 준정부기관으로서 국가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국익,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 해외 및 국제기구 진출의 측면에서 조율하기 위한 노력은 있음
- 결론적으로 개발협력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적 국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수시 21-14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저 자 정윤희, 김민지, 김은화, 원종준, 임채욱

발 행 인 강현수

발 행 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017-9호

발 행 2021년 9월 30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 화 044-960-0114

팩 스 044-211-4760

가 격 비매품

---

I S B N 979-11-5898-659-9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21, 국토연구원

---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주시시오.

정윤희, 김민지, 김은화, 원종준, 임채욱.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사업을 중심으로. 세종: 국토연구원.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